

**더보고!
더 듣고!!
더 살피겠습니다!!!**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전남도당 및 후보자 주요공약

2020년 3월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정책공약

2020.03.

연번	분야	공약명	지역	쪽
1	일자리·경제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 지원	도내일원	11
2	일자리·경제	★국가 대형 랜드마크 연구시설(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	나주	16
3	일자리·경제	★(가칭)한전공대 설립 지원 및 특별법 제정	나주	18
4	일자리·경제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화순	19
5	일자리·경제	★e-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	영광·나주·순천·광양	22
6	일자리·경제	★전남 차세대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고흥	24
7	일자리·경제	고성능 이차전지 플랫폼 구축	나주·순천·광양	26
8	일자리·경제	여수국가산단 스마트산단 지정	여수	28
9	일자리·경제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도내일원	31
10	일자리·경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기 활성화	목포·나주·함평·장성	32
11	일자리·경제	에너지밸리(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나주	34
12	일자리·경제	한국폴리텍대학 전력기술교육센터 건립	나주	37
13	일자리·경제	청년르네상스(청년주식회사)	목포·여수	39
14	농림수산	2028 전남 세계 섬 엑스포 유치	도내일원	40
15	농림수산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	도내일원	42
16	농림수산	★여객선 공영제 강화 및 도서민 1,000원 여객선 시행	목포·여수·고흥·보성 완도·진도·신안	45
17	농림수산	★농수축산물 가격안정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도내일원	47
18	농림수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국비 지원	도내일원	48
19	농림수산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목포·여수·고흥·보성 완도·진도·신안	50
20	농림수산	양식어업 재해보험 제도 개선	여수·고흥·해남· 완도·진도·신안	51
21	농림수산	식품소재 반가공산업육성을 위한 농축수산물가공센터 설립	함평	53

연번	분야	공 약 명	지 역	쪽
22	농림수산	국립 산림기술 교육원 건립	보성	54
23	농림수산	말 힐링 복합공원 조성	도내일원	55
24	관광문화	크루즈 관광기반 조성	연안지역	57
25	관광문화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여수	60
26	관광문화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	도내일원	64
27	관광문화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도내 11개 시·군	67
28	관광문화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비엔날레 유치 및 육성	담양	69
29	관광문화	전남 누정(별정서원) 유네스코 등록 추진	도내일원	70
30	관광문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	순천	72
31	교통기본권	★흑산공항 조기 건설	신안	75
32	SOC	남해고속도로(광양 구간) 선형 직선화	광양	77
33	SOC	고흥~완도 간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	완도·고흥	79
34	SOC	광주~고흥 간 고속도로 건설	광주·화순·보성·고흥	81
35	SOC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익산·곡성·순천·여수	83
36	SOC	광주~완도(2단계) 고속도로 건설	강진·해남	85
37	SOC	동북아 평화의 섬 하의도 연결	목포·신안	87
38	SOC	장흥~고흥간 국도 77호선 노선 변경(연륙교 건립)	장흥·고흥	88
39	SOC	빛가람 혁신도시 역 설치 및 능주역 신설(경전설 전철화)	나주·화순	89
40	SOC	서해안철도 (목포~군산) 건설	영광·함평·무안·목포	90
41	SOC	여수~남해 간 동서해저터널 건설	여수·남해	91
42	보건복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등 의과대학 설립	목포·순천	92
43	보건복지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및 기능 확대	장성	94
44	환경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도내일원	97
45	기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도내일원	100
46	기타	★인구소멸지역 지원 및 특별법 제정	도내일원	102
47	기타	친환경 하상주차장 건설 (전남도당 정책페스티벌 최우수)	여수·목포	103

후보자 대표공약

2020.03.

1. 김원이_목포

연번	분야	공 약 명	지 역	쪽
1	문화 관광	100년 역사 목포역을 시민광장으로	목포 원도심	107
2	문화 관광	목포를 근대역사문화의 특구로	목포 일원	108
3	산업 경제	목포, 신안을 세계 섬의 수도로	목포 신안	109
4	교육 복지	명품 교육, 보육도시 육성	목포 일원	110
5	정치개혁	3대 개혁입법과 유달정담		111

2. 주철현_여수(갑)

연번	분야	공 약 명	지 역	쪽
1	관광	전국 최초 해양관광공사 설립 및 여수유치	여수일원	115
2	경제	여수항, 해상물류 동북아 거점항 육성	광양만권	117
3	경제	연등천 도시재생, 원도심 활성화 기반 마련	여수일원	119

3. 김희재_여수(을)

연번	분야	공 약 명	지 역	쪽
1	경제(입법)	『여수산단환경부담특별법』을 제정	관내일원	123
2	산업	『여수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관내일원	124
3	문화예술	"해양레저휴양특구로 지정. 품격있는 문화예술관광 휴양도시"	관내일원	125
4	복지	지역거점 종합병원을 유치	관내일원	126
5	행정관광	남해안권 신성장의 핵심 (메타클러스터조성)	도내일원	127

4. 소병철_순천·광양·곡성·구례(갑)

연번	분야	공 약 명	지 역	쪽
1	보건·의료	"전남 동남권 의과대학 설립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3차 대학병원급) 기능 보강·확대"	"순천대학교, 순천 신대지구"	131
2	도시재생	순천 시민참여형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순천역~웃장~아랫장~저전동 일대"	132
3	경제(입법)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법」 제정	순천	133
4	SOC·교통	전라선 고속화 및 수도권 2시간 생활권 구축	순천	134
5	농업	‘순천형’ 농업혁신과제 실현	순천	135

5. 서동용_순천·광양·곡성·구례(을)

연번	분야	공 약 명	지 역	쪽
1	과거사(입법)	여순10.19사건 특별법 제정	순천·광양·곡성·구례 등	139
2	주택(입법)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령 개정		140
3	교육	광양보건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	광양	141
4	의료	전남 동부 대학병원 설립	순천·광양·곡성·구례 등	142
5	노동안전	산업재해 외상후스트레스 치유센터 설립	순천·광양·곡성·구례 등	143

6. 신정훈_나주·화순

연번	분야	공 약 명	지 역	쪽
1	아동·청소년 보육 및 교육	아동청소년 창의융복합센터 건립	나주	147
2	경제(입법)	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나주	148
3	경제(입법)	폐광지역 특별법 연장	화순	149
4	연구개발	에너지 밸리(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나주	150

7. 이개호_담양·함평·영광·장성

연번	분야	공 약 명	지 역	쪽
1	연구개발	한국정원센터 건립 및 국가기관화	담양군	153
2	일자리·경제	빛그린산단 배후단지 조성	함평군	154
3	일자리·경제	e-모빌리티 테마파크 및 배후단지 조성	영광군	155
4	보건·복지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및 기능확대	장성군	156

8. 김승남_고흥, 보성, 장흥, 강진

연번	분야	공 약 명	지 역	쪽
1	SOC	장흥수문~고흥녹동 연륙교 건설	고흥·보성·장흥·강진	159
2	입법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도내일원	160
3	산업	전남 산업동물 전염병 제어 연구지원 센터	고흥·보성·장흥·강진	161
4	SOC	전남 중남해안 관광허브 조성	고흥·보성·장흥·강진	162
5	입법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도내일원	163

9. 윤재갑_해남·완도·진도

연번	분야	공 약 명	지 역	쪽
1	어린이복지(입법)	어린이 특별 지구	지역구 일원	167
2	노인 복지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르신 헬스케어 시스템"	지역구 일원	168
3	관광	대한민국 호국길	지역구 일원	169
4	농수축산	외국인 노동자 특구	지역구 일원	171
5	SOC	해남완도진도 지역 철도 사업	지역구 일원	172

10. 서삼석_영암·무안·신안

연번	분야	공 약 명	지 역	쪽
1	입법	“나쁜법 계속 고치고, 좋은 법 더 만들겠습니다” -“방역부”와“노인부”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인구절벽, 고령화 사회대비 “농어촌 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제정	도내일원	175
2	농림수산	농어민 소득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천일염가격보장제도 확립 -어업인 기본소득보장을 위한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및 활성화 -임업인 기본소득보장을 위한 ‘공익형 임업직불제’ 도입 및 활성화	도내일원	177
3	보건복지	농어촌 ‘보건 안전망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식품부, 해수부 내 농어업인 의료 보건 안전 전담부서 설치 -농어업인 건강돌봄사업(보건복지연계)확대 추진 -공공의료인력확충과 공공의료시설 보강 <공공보건의료대학, 국립의과대학>	도내일원	179
4	평등권	도서지역 주민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서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공영제 강화 (△1,000원 여객선 도입 △연안여객선 신조 및 현대화 △도서지역 해상물류비지원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도서지역 물 부족문제 해소 -해양쓰레기 경감대책 마련 -도서지역 의료여건 개선 (△병원선 확충 △응급의료 대응헬기 착륙장 설치지원)	도내일원	181
5	농림수산	여성농어업인의 지원책마련 최우선 합니다. -여성농어업인 특화건강검진도입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여성농어업인 보험상품개발, 지원센터 운영 -여성농업인 맞춤형 농기계 개발지원	도내일원	182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정책공약**

1.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 지원

현황

- (위치) 전라남도 신안군 해상 일대
- (규모) 투자 48.5조원, 기업유치 40개, 일자리 창출 118천개(상시 일자리 4천개)
- (내용)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해상풍력 생태계 Supply Chain 구축
(풍력발전기 생산·조립단지, 지원부두·배후부지), 송전선로 구축

공약

-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전남형 상생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상풍력 인프라 국가기본계획에 반영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19~'33) : 1단계 해상풍력 발전 설비용량(3GW이상) 반영
 - 제4차 항만기본계획('21~'30) : 해상풍력 지원부두(1선석, 철재부두 3만톤급) 및 배후단지(267천㎡) 조성
 - 해양공간관리계획 : 해상풍력단지 일원을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

기대효과

-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
 -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7년 기준 7.6%에서 2030년 20%까지 확대 계획
-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19.11.6.)*와 연계, 해상풍력 연구개발(R&D)로 국내 해상풍력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
 - *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연계 2지구(목포대양산단, 목포신항배후부지 / 풍력단지 실증)
- 해상풍력 설비·부품업체 및 관련기업 유치를 통한 전남형 상생일자리 구축으로 지역과 국가경제발전의 동력 마련

실천방안

-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전남형 상생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상풍력 인프라 국가기본계획에 반영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특정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에 반영이 가능한지?
- 대응 논리
 - 신안해역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임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4차 항만기본계획은 소관부처에서 긍정 검토 중
 -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은 주민 동의 필요(해수부),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 마련 중 (주민설명회 개최, 수산업 공존모델 개발, 주민수혜 확대방안 등)

참고 1

전남형 상생일자리 기본 계획

목 표

◆ 국내 해상풍력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

- 세계적 수준 대비 3~5년의 기술격차 완화, 장비의 국산화 대체, 고급 인력양성 등

◆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를 해상풍력산업의 메카로 조성

◆ 지역·국가 경제발전의 동력(투자 48.5조원, 기업유치 40개, 일자리 창출 117,506개)

○ 기 간 : 2020년 ~ 2029년

○ 규 모 : 투자 48.5조원, 기업유치 40개, 일자리 창출 117,506개

- 상시 일자리 : 4,006명(발전단지 유지보수 2,706명, 풍력발전설비
(발전기, 블레이드, 로터 등) 제작·조립 등 1,300명)

○ 사업내용

① 풍력발전기 생산·조립단지 조성(39만㎡/6천억원/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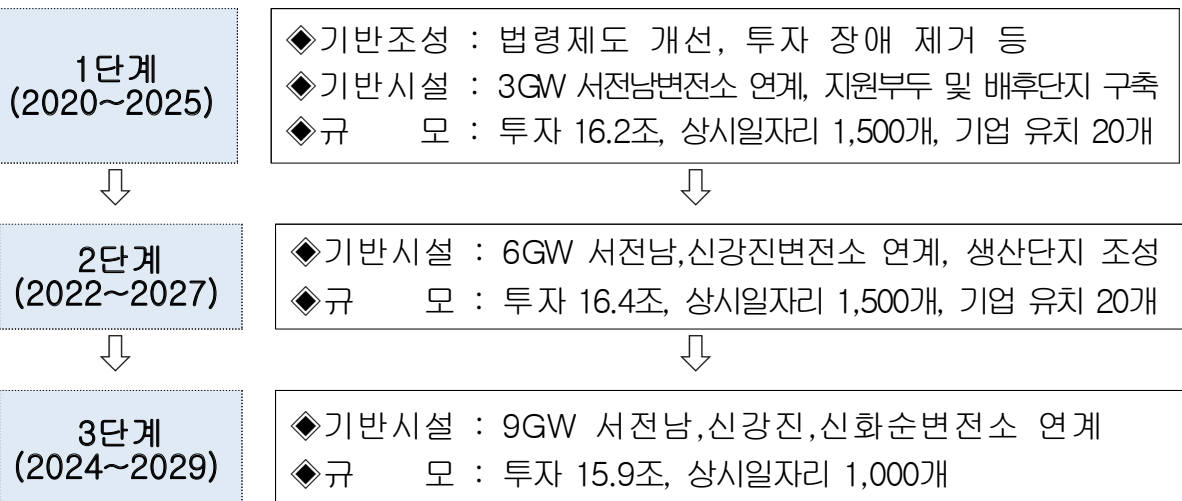
②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45.4조원/민간)

③ 송전선로(2.3조원/한전) 구축 및 목포신항만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33만㎡ / 2,180억원/해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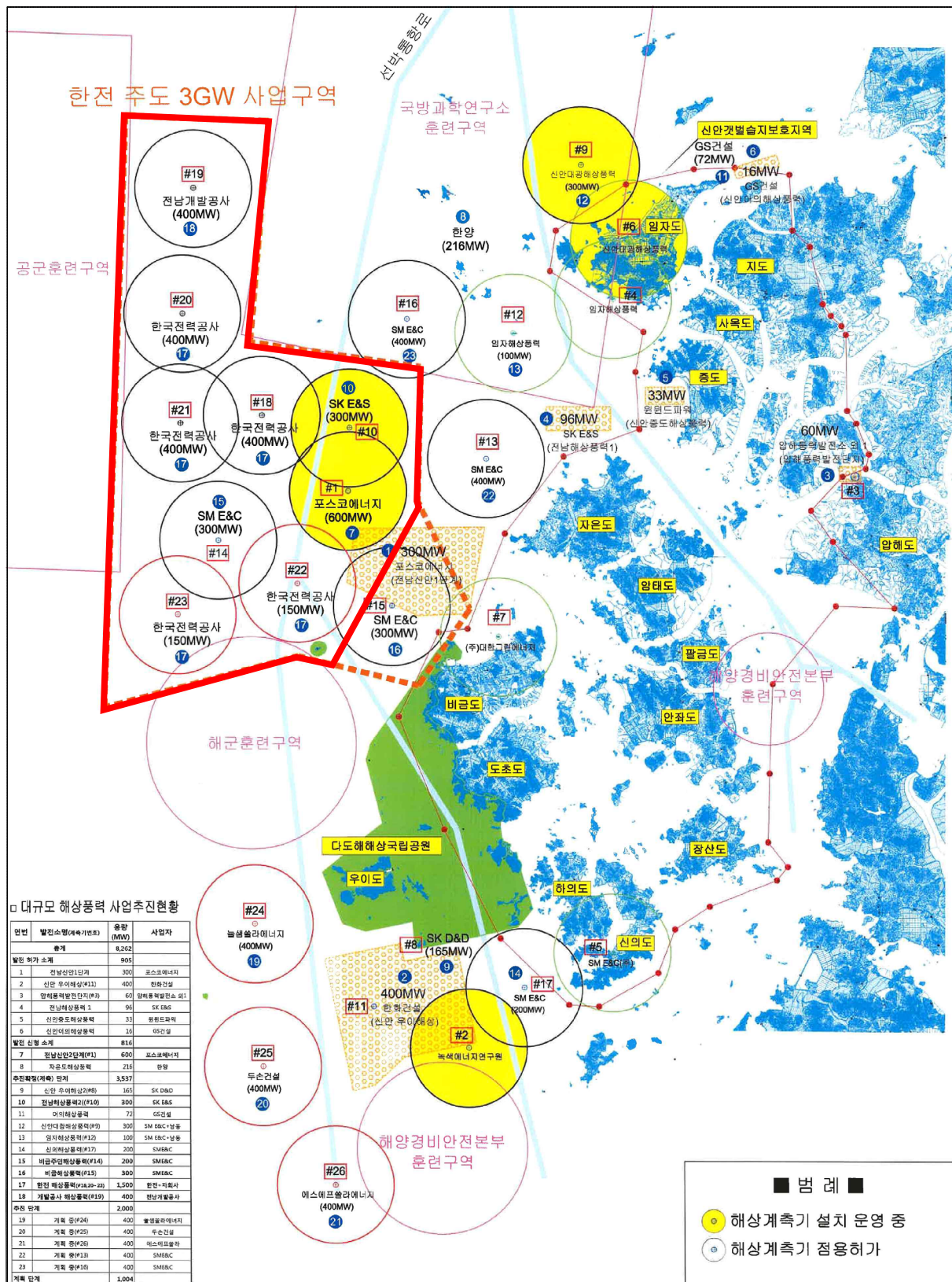
○ 유 형 : 산업유발형(국내 해상풍력산업 육성)

※ 정부는 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창의적 상생일자리 유형을 권장

○ 단계별 계획 : 송전선로 및 기반시설 구축상황에 따른 단계적 추진



신안지역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도



참고 3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비

구분	용량 (MW)	사업비 (억원)	사 업 자	비고
합계		485,010		
계	8,262	453,830		
발전허가 취득	905	49,475	포스코, SK E&S, 한화건설, GS건설, 압해풍력, 윈윈드파워	
발전허가 신청	816	44,880	포스코, 한양	
사업 준비 중	6,541	359,475	SK E&S, 한화건설, GS건설, SME&C, 일양산업, 윈즈웨이, 일양엔지니어링, 다운에너지, 에스에스원드, 마린원드, 윈드칸	
계		31,180		
풍력발전기 생산·조립단지		6,000	민간	발전단지 연계사업
송전선로 구축		23,000	한전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2,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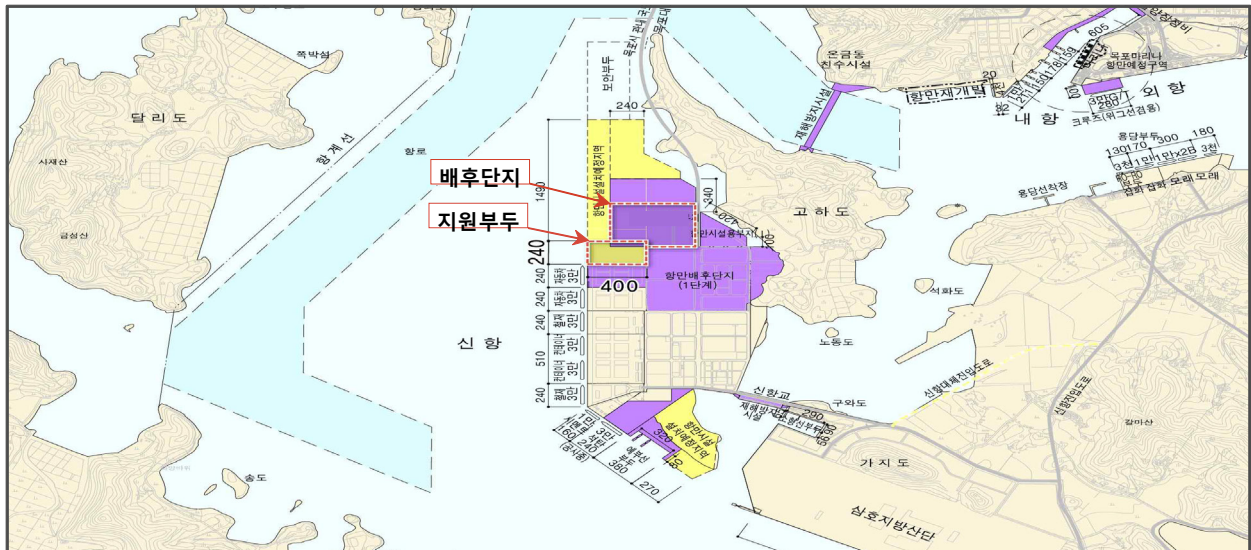
참고 4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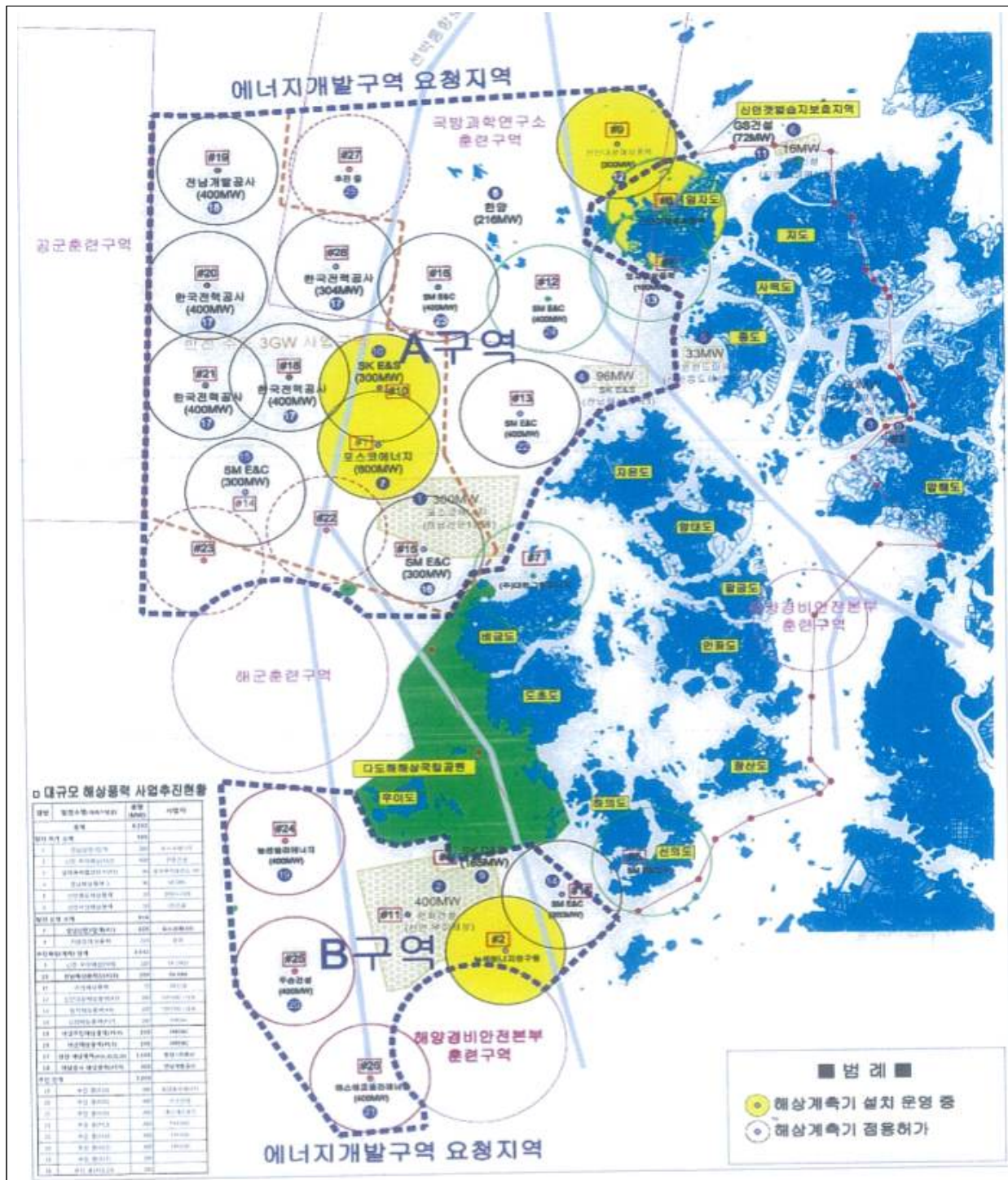
- 풍력발전단지 건설, 부품생산 및 조립 등 : 연간 14명/MW
- 풍력발전단지 운영·유지 : 연간 0.33명/MW * 1GW=1,000MW
- ☞ **연간 117,506개 일자리** = (14+0.33명)×8.2GW×1,000
- ※ 산출근거 : Global Wind Energy Outlook(2016)

참고 5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배치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요청 해역



※ **해양공간관리계획** : 해양공간계획법 시행('19. 4. 18.)에 따라 영해에 대해 '21년까지 단계적 수립('19년 전남, 제주, 울산, 서남해안 EEZ)

- 해양공간을 9개의 용도구역(어업활동보호, 해양관광, 에너지개발 등)으로 지정·관리

* 지역협의회('20. 2.), 관제기관 의견 조회('20. 3.~4.), 지역위원회('20. 5.)

2. 국가 대형 랜드마크 연구시설(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

현 황

- (위치) 전남 나주시 산포면 일원(연구소·클러스터 부지)
- (규모) 4GeV, 빔라인 40개(산업체 30%), 둘레 800m(지름 255m), 1조원 규모
- (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력, 전라남도, 나주시, 정부출연기관

공 약

- 한전공대와 연계한 에너지 신소재, 신약 개발 등 모든 과학 분야 연구에 활용 가능한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
- * (사례) 포항공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으로 우수 연구진과 학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효과

- 한전공대와 연계해 모든 분야 기초과학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여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이 되는 연구시설임
- 호남권에 기 구축된 산업기반과 보유자원을 고도화하여 국가적 과제인 첨단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기초과학 진흥에 기여
 - (전남권) 에너지신소재, 의료바이오, 철강, 금속신소재, 석유화학
 - (광주권) AI벨트, 자동차 (전북권) 자동차, 탄소산업 등

실천방안

- 한전공대와 연계한 국가 대형연구시설로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전남에 방사광가속기 구축 필요성 및 가능 여부
- 대응 논리
 - 과학기술분야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 균형발전 실현
 - 국가 대형연구시설은 충청과 영남지역에 편중되어 재난 등에 대비해 지역 분산 배치 필요
 -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광주·전남 지역은 가속기 연구시설 전무, 첨단연구 환경 조성 시급
 - 최근 5년간 정부 R&D 예산 약 19조원, 전남은 전국 1.4%(연평균 2,582억원)로 최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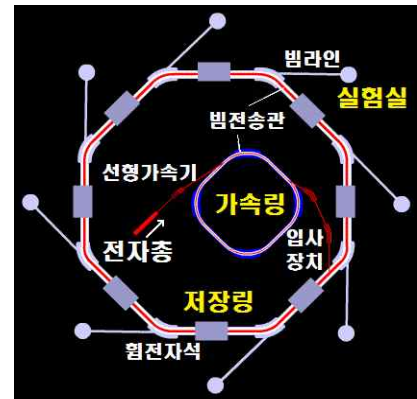
방사광가속기 정의 및 국내 구축현황

□ 방사광가속기란?

- (개념) 물질 구조를 관찰하고 성질 분석을 위해 빛의 속도로 전자를 가속해 방사광을 얻어 물질의 기본입자를 관찰하는 초정밀 수퍼 현미경

< 작동원리 >

- ① (가속부) 전자총 → 선형가속기 → 가속링
- ② (저장부) 입사장치 → 횡전자석 → 저장링
- ③ (실험실) 빔라인 → 실험실



【방사광가속기 작동원리】

- (활용) 화학, 생물, 반도체, 의학 등 기초연구는 물론 바이오신약, 전기,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신소재 개발 등 모든 기초과학 분야 활용
 - 주요 3대 신약(타미플루,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비아그라) 개발, 초경량 탄소나노복합체, 친환경 미래배터리, AI 신경망 프로세서 등 각종 미래 융복합 소재 개발

□ 국내 구축 현황

- (구축) 국내 2대(포항 가속기연구소, 3세대 원형 · 4세대 선형)
- (활용) 38개 빔라인(3세대 35, 4세대 3) 운영
 - 시설 노후화 · 성능저하 · 이용자 포화 등 한계 발생, 에너지소재와 그린소재 분야 등 질 높은 과제는 성능이 우수한 외국 가속기 활용
- (실적) '18년 실험수행 1,637건(3세대 1,592, 4세대 45), 실험참여 6,238명
 - * 실험수행 : 1,637건(대학 1,385, 연구기관 160, 산업체 25, 외국 67)
- (사례) 포항은 최근 방사광가속기를 기반하여 기존 철강에다 바이오신약, 2차전지 등 신 전략산업군으로 최첨단 과학도시로 탈바꿈
 - 국가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설립 등 신약개발 클러스터 조성
 - 2차전지 소재 핵심기업 에코프로 포항 영일만 산단에 1조 5천억 투자
 - 신약개발 국제 심포지엄, 방사광가속기 이용자 포럼, 차세대 배터리 포럼 개최 등 과학기술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3. [가칭]한전공대 설립 지원 및 특별법 제정

현 황

- (위치) 전남 나주시 빗가람동 일원(부영 CC 일부 및 인근 농경지)
- (면적) 120만㎡(대학 40만㎡, 연구소·클러스터 80만㎡)
- (정원) 1,000명(대학원 600, 학부 400)
- (개교) 2022년 3월

공 약

- 에너지신산업 선도를 위한 한전공대 2022년 3월 정상개교 지원
-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시장 선점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한전공대를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기대효과

- 한전공대 설립은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정책으로 '22년 3월 개교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 필요
-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시장 선점과 국가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한전공대를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실천방안

- 한전공대의 자율성·법적지위·안정적인 재정 확보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 (가칭) 에너지산업 인재양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특정 사립대학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가능한지?
- 대응 논리
 - 한전공대는 일반 사립대가 아니라 공공기관인 한전이 설립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적 성격의 공공형 사립대학임
 - 특별법은 특정 대학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에너지 분야 인재양성을 지원

4.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현 황

- 전남의 풍부한 바이오·치유 자원*과 메디컬 자원을 융복합하여 차별화된 바이오 신산업 육성 * 천연물 1,500종(25%), 전국 최대 국립공원(섬, 해양, 숲 등)
- 화순백신산업 특구(2010)를 중심으로 바이오의약 전주기 인프라 구축
 - 전남대 의대·생물의약연구센터(R&D), KTR(전임상), 화순전남대병원(임상), 생물의약연구센터·미생물실증지원센터(시제품), 녹십자(대량생산) 등

공 약

-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2021년 ~ 2030년)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일원(화순 백신산업 특구 등)
 - 사업규모 : 2백만㎡ / 1조 2천억원
 - 사업내용 : 의약 및 의료기기분야 첨단 핵심 R&D 인프라 및 기업단지 구축
 - 의약·의료기기분야 국책(공공)연구기관 유치, 기반·연구지원시설·벤처연구타운 설치 등

기대효과

- 바이오 분야 공공기관, 국책 연구기관 및 연관기업 유치
 - 재단, 연구센터 및 바이오 분야 기업(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50~100여개
- 바이오 분야 기업 유치 및 관련 분야 신규 인력 유입
 - 바이오 분야 공공 기관, R&D 센터 및 연관 기업 인력 채용(1,000~1,500명)

실천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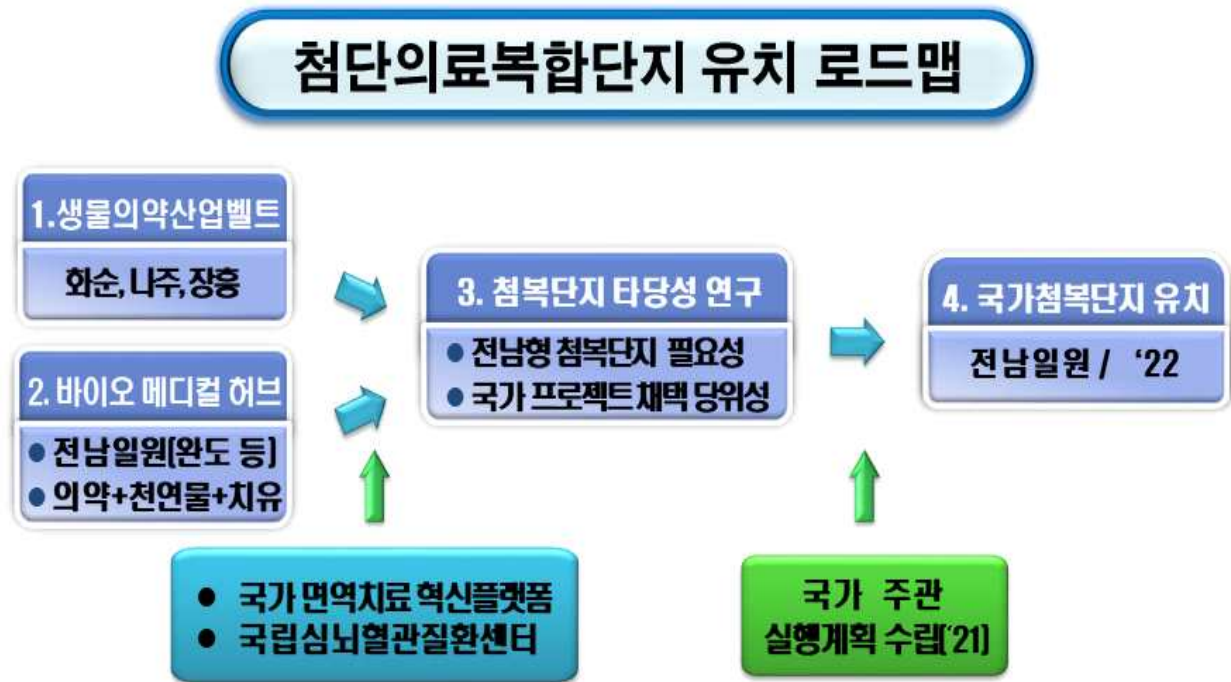
- 전남 첨단복합단지 지정 신청을 위한 도 자체용역 추진 : '20. 2. ~ 8.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위한 보건복지부 예타 조사 : '21. 1. ~ 10.
-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심의위원회 심의·지정 : '21. 11.

예상 쟁점 및 대응

- (쟁점) 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차별화 방안
- 대응 논리(방안)
 - 천연자원의 보고로 신소재 의약품 개발이 가능한 첨단의료 거점으로 성장 가능
 - 화순 백신산업 특구를 중심으로 백신, 면역치료, 천연물 신약 기반 특화단지 구축 가능

구 분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사업비
전 남	백신(치료), 천연물신약	헬스케어 디바이스 (IT & BT 융합)	의료로봇, 암특화 토달케어	1조 2천억원
충북 오송	바이오신약	BT기반 첨단의료기기	-	4조
대구 경북	합성신약	IT기반 첨단의료기기	-	4조 6천억

유치 로드맵



부처 건의('20.1.~) → 자체용역('20.2.~ 8.) → 복합단지 지정 신청('20.9.) →
 복합단지 조성 용역(복지부) → 복합단지위원회 심의·의결('21) → 지정('22)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모델

구 분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사업비
전 남	백신(치료), 천연물신약	헬스케어 디바이스 (IT & BT 융합)	의료로봇, 암특화 토달케어	1조 1.8천억 + (α)
충 북 오 송	바이오신약	BT기반 첨단의료기기	-	4조
대 구 경 북	합성신약	IT기반 첨단의료기기	-	4조 6천억

참고2

첨단의료복합단지 현황

□ 개 요

- 설립근거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설립목적 :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상품화 촉진으로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이바지
- 지정지역 : 2개소(충북 오송, 대구) ※ '09. 8월 최초지정
 - 사업비 : 8조 6,000억원(시설운영 37,000, R&D 49,000)
 - 사업면적 : 2,185천㎡(충북오송 1,131, 대구경북 1,054)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관계부처 : 과기부, 산업부, 식약처
- 단지별 특화분야

구 분	의약품	의료기기	사업비
충북 오송	바이오신약	BT기반 첨단의료기기	4조
대구 경북	합성신약	IT기반 첨단의료기기	4조 6천억

□ 지정효과

-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 의료·의약관련 공공 기관 및 기업 유치 기대
- (기반시설 설치)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시설 설치 우선 지원
- (연구자금 출연) 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자금 출연
- (기금융자 및 세금 감면) 의료연구개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 세금 감면
- (운영지원)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에 각종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요건·절차

- (지정요건) 산업단지 등 입지조건이 우수한 지역, 기타 지역 / 첨부단지법 제5조①항
- (평가항목) ① 우수연구기관 유치 및 정주가능성, 지자체 지원 ② 우수의료기관 및 의료연구개발기관 집적도, ③ 부지확보 용이성, 국토균형발전 / 동법 제5조②항
- (지정절차) 「민간 평가단」 구성(60명)·심사 → 첨부단지위원회 심의·결정(복지부)

5. e-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

현 황

- 2012년부터 영광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e-모빌리티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업인프라 및 관련 기관·기업 집적화
 - 영광 대마산단에 e-모빌리티 연구센터, 공동연구시설, 실내·외 테스트베드 등 구축
 - ※ 실외테스트베드, 충돌시험장 등 e-모빌리티 개발·평가·인증·실증 기반 구축, 전문연구센터 및 e-모빌리티협회 유치, 관련기업 13개사 유치

공 약

- e-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조성(2020~2025)
 - 위 치 : 전라남도 일원
 - 사 업 비 : 1,710억원(국비 60%, 도비 5%, 시군비 20%, 민자 15%)
 - 사업내용 : e-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및 연관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세부사업〉 자율주행 e-모빌리티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300억), 초소형 EV용 경량소재 바디개발 및 실증체계 구축사업(280억), 스마트 미니전기버스 핵심부품 기술 육성사업(480억), ICT 기반 지능형 개인맞춤 교통체계 구축사업(450억), 미래차 전자파 적합성 인증평가 시스템 구축(200억)

기대효과

- 핵심부품 국산화 및 친환경·고효율 e-모빌리티 보급
 - '22년까지 부품 국산화율 80% / '22년까지 e-모빌리티 5,043대, 충전기 7,272기 보급
- e-모빌리티 연관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자립적 산업생태계 구축
 - '25년까지 기업유치 100개사, 고용창출 2,000명, 매출 4,000억원 창출 기대

실천방안

- e-모빌리티 개발·평가·인증·실증 사업(계속)* 국고 건의(7건, 1,154억원)
 - * 사용자 경험랩('17~'22, 100억), 비즈니스모델 개발('19~'25, 242억), 지식산업센터('19~'22, 160억), 공용플랫폼('19~'21, 240억), 규제자유특구('19~'23, 242억), 전원시스템 평가기반('20~'22, 100억), 소형 수소연료전지('20~'22, 70억)
- 융합부품·경량소재 연계 사업기획, 정부 건의 및 공모사업 대응 : '20. 1. ~

예상 쟁점 및 대응

- (쟁점) 전남 e-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가능성 및 경쟁력
- 대응 논리(방안)
 - 고령인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저비용·고효율 이동수단 수요 증가
 - 전국에서 유일하게 e-모빌리티 산업인프라 및 관련 기관·기업이 집적화

참고 1 세부 사업별 주요내용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비고
초소형 EV용 경량소재 바디개발 및 실증과제 구축	- 위 치 : 전남 영광군 대마전기차 산업단지 內 - 사 업 비 : 280억원(국비 90, 지방비 98, 민자 92) - 사업내용 : 내구·내환경 시험·평가 장비 구축 및 EV용 경량소재 부품 개발 - 사업주체 : 산업통상자원부(주관 : 한국자동차연구원)	
스마트 미니전기버스 핵심부품 기술 육성	- 위 치 : 전남 영광군 대마전기차 산업단지 內 - 사 업 비 : 480억원(국비 280, 지방비 140, 민자 60) - 사업내용 : 스마트 주행 미니 무인셔틀버스 개발 및 시스템 구축 - 사업주체 : 산업통상자원부(주관 : 한국자동차연구원)	
AI 기반 개인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	- 위 치 : 전남 영광군 대마전기차 산업단지 內 - 사 업 비 : 460억원(국비 280, 지방비 120, 민자 60) - 사업내용 : 대중교통 연계 AI 기반 개인형 이동기기 공유사업 - 사업주체 : 산업통상자원부(주관 :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 e-모빌리티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 위 치 : 영광군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內 - 사업내용 : 자율주행(레벨3이상) 기술실험 및 성능 평가인증시설 구축 - 총사업비 : 300억원(국비 100, 지방비 180, 민자 20) - 사업주체 : 국토교통부(주관 : 별도 사업단)	
미래차 전자파 적합성 인증평가 시스템 구축	- 위 치 : 영광군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內 - 사업내용 : 차량 무선전력 환경의 전자파 및 유해성 검·인증기반 구축 - 총사업비 : 250억원(국비 163, 지방비 62억원, 민자 25) - 사업주체 : 산업통상자원부(주관 : 한국자동차연구원)	

6. 전남 차세대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현 황

- 전국 최대의 비행시험공역 확보 및 우수한 항공인프라 구축 추진
 - 비행시험 공역 : 전국 최대, 직경 22km(고흥), 8km(광양) ※ 전국 10개소
 - 고흥 항공센터 완료,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중(활주로 1.2km)

공 약

- 국가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2020~2028)
 - 사업위치 : 전남 일원(고흥 항공센터 인근 등)
 - 사업비 : 6,875억원(국비 3,476, 지방비 1,244, 민자 2,155)
 - 사업내용 : 개발생산시험평가실증인증 인프라 구축, 유망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세부사업〉 5G 기반 스마트 영농·실증 확산사업(200억), 유·무인기 인증 통합관제 인프라 구축(450억), 드론 규제자유특구 지정(680억), 미래형 개인비행체(PAV) 테스트타운 조성(1,200억), 드론 기반 재생에너지 O&M 테스트베드 구축(475억), 저고도 무인비행 장치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실증(120억), 유·무인기 및 MRO 특화 종합생산단지 조성(1,350억), 드론 테마파크 조성(2,400억)

기대효과

- 전국 최초 유·무인기에 대한 종합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글로벌 항공 산업 도약 기반 마련(세계 5위 목표)
- 자동차 시장대체 가능한 드론택배·Taxi·화물운송 등 신개념 서비스 시장 선점
 - '28년까지 기업육성 270개사, 고용창출 3,400명, 매출 4,000억원 창출 기대

실천방안

- 과제기획 및 정부사업 지원 건의, 공모사업 대응 추진 : '19. 10. ~
- 드론 규제자유특구 및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추진 : '19. 11. ~

예상 쟁점 및 대응

- (쟁점) 차별화된 전남 드론산업 클러스터 구축
- 대응 논리(방안)
 - 국내 유일 지역전략산업으로 드론산업 선정('15.12.) 및 전국 최대의 비행시험 공역 확보(직경 22km), 우수한 항공인프라 구축 등으로 드론 시제품 개발·생산에 유리
 - 글로벌 수준의 중·대형 산업용 드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개발·생산부터 인증·실증까지 가능한 One-Stop 종합 지원체계 구축

참고

「전남 차세대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현황

분 야		내 용	사업비(억원)				비 고
			합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3단계 15개 과제			8,118	4,375	1,511	2,232	
〈1단계〉 드론산업 기반 및 기업지원체계 구축('15~'21)			1,087	909	178	-	
①	고흥 항공센터	소형기 비행시험, 활주로 0.7km	283	280	3	-	완 료
②	우주항공 첨단소재센터	항공드론산업육성, 기업지원	193	112	81	-	완 료
③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중대형기 비행시험, 활주로 1.2km	413	393	20	-	추 진 중
④	드론티카 지식산업센터	기업 입주공간, 기업지원 시설 등	198	124	74	-	추 진 중
〈2단계〉 산업용 중대형 드론 실증 기반 구축('20~'24)			1,486	1,026	318	142	
①	산업용 드론 기업육성 기반구축 및 실증	드론 시험검증, 기술개발	127	62	50	15	추 진 중
②	5G기반 드론활용 스마트 영농·실증	농업용 드론 운용서비스 개발	200	80	80	40	건의①
규 제 자 유 특 구	소 계		709	434	188	87	건의②
	③ 대형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실증	대형 무인기 비행 실증, 시험평가	339	212	85	42	
	④ 중형 무인기 비가시권 비행 실증	중형무인기 장거리, 비가시권 비행 실증	220	127	60	33	
	⑤ 국가주요시설 시설물 점검 실증	드론점검 매뉴얼, 테러 대비 방호 체계 구축	150	95	43	12	
	⑥ 유·무인기 인증 통합관제 인프라 구축	유·무인기 안전성 인증, 통합관제시스템	450	450	-	-	건의③
〈3단계〉 개인비행체 실증 및 생산단지 조성('24~'30)			5,545	2,440	1,015	2,090	
①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실증	교통관리시스템 (UTM) 실증	120	120	-	-	건의④
②	미래형 개인비행체(PAV) 테스트베드 조성	비행실증 가상도시, 시뮬레이터 센터	1,200	700	300	200	건의⑤
③	유·무인기 특화 종합 생산단지 조성	부품 및 완제품 생산단지 조성	1,350	700	300	350	건의⑥
④	재생에너지 O&M 테스트베드 구축	재생에너지 드론 유지보수, 안전관리	475	290	100	85	건의⑦
⑤	드론 테마파크 조성	드론체험시설, 전시관, 숙박시설	2,400	630	315	1,455	건의⑧

7. 고성능 이차전지 플랫폼 구축

현 황

- 이차전지 및 4대 핵심소재 시장 확대와 차세대 이차전지기술 선점을 통한 新시장 주도 정책에 적극 대응
 - 국내 이차전지 제조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나, 핵심 소재부품은 기술적·경제적 요인으로 대외 의존도 우려
- ※ 주요 제조업 중간재 자립화율 60% 이상, 이차전지 소재 자립화율은 37% 수준

공 약

- 이차전지 플랫폼 구축(2020~2025)
 - 위 치 : 전라남도 일원
 - 사업내용 :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부품 검증 인프라 및 산업 생태계 구축

〈세부사업〉 중대형 이차전지 소재부품 기업육성 및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부품 R&D, 폐전지 리유즈(Re-use) 인프라 구축,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 이차전지 기술 및 사업화 지원

기대효과

- (이차전지 생태계 조성) 소재·부품 R&D, 제품생산, 인력양성, 수요연계 등 ‘밸류체인 구축’을 통해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 (이차전지 기술혁신 주도) 소재·부품연구를 통해 ‘이차전지 성능혁신’과 ‘차세대이차전지 상용화’로 「산업주도권」 확보

실천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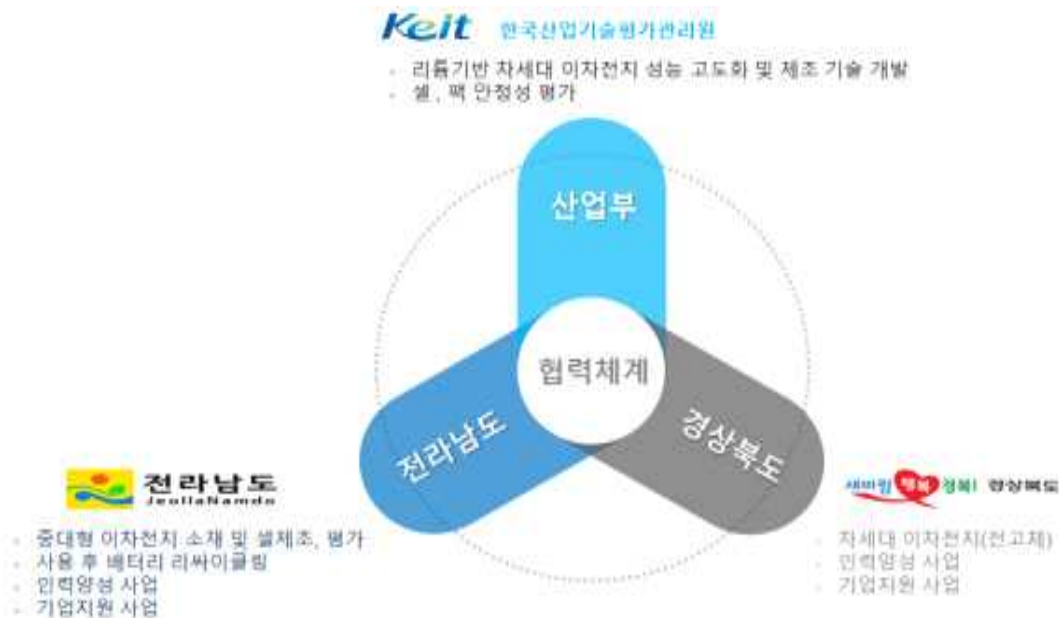
- 시급성이 있는 핵심사업부터 국가예산 반영 : ‘20.~
 -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280억원)
 - 전남 비교우위 여건 연계, 국가 예타사업 발굴 추진 : ‘21.~
 - 이차전지 소재부품, 폐배터리 재사용 응용제품개발 등 이차전지 전후방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 기획
- ※ 예타용역 추진 중(‘19.7~’20.7), 예타신청(‘20년 상반기), 사업추진(‘21.~)

예상 쟁점 및 대응

- (쟁점) 전기차 등 이차전지 전방산업 수요가 없어 산업육성 여건 열악
 - 대응 논리(방안)
 - 포스코 등 소재 공급기업과 ESS·초소형 전기차 등 새로운 이차전지 수요시장 마련
- ※ 이차전지 소재공급(포스코), ESS 최대 수요처(한전), 인력양성(한전공대), 전문기관(전지협화·전품연 등)

참 고 이차전지 플랫폼 구축 총괄예타 추진체계 및 주요사업 내용

□ 산업부, 전라남도, 경북도 공동추진 방안



□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사업위치/기간 : 전라남도 나주시(혁신산단) / 2021~2025
- 사업내용 : 소재부품 시험·평가 센터 및 중대형 이차전지 제조장비 구축 등
- 총사업비 : 700억원(국비 510, 지방비 100, 민자 90)
- 사업주체 : 산업통상자원부(주관 : 전자부품연구원)

○ 사업내용

- (평가센터) 소재·부품의 시험·평가를 위한 평가센터 건립
- (제조·평가) 소재·부품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설비 구축
 - 50Ah 이상의 중대형전지 전극 및 셀 제작을 위한 Lab scale 장비와 준 양산 공정라인 구축
 - 제품적용, 품질평가, 적합성 평가 등을 위한 시설·평가 장비 구축 및 인력 채용
- (R&D) 산업생태계(소재·부품·전지) 육성을 위한 R&D모델 발굴
 - 전지·소재·부품 성능혁신과 공정 프로세스 효율화 기술개발
 - 이차전지 제조혁신을 위한 생산 장비 기술개발 등

8. 여수국가산단 스마트산단 지정

현 황

- 50여 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여수국가산단의 혁신적인 변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차 산업 첨단기술을 적용한 기반조성 필요
 - 생산액 83.6조원으로 전국 7.9%, 호남권 45.2%, 전남 69.8% 차지
 - ※ 산업부, '19~'20년 4개 지정(경기 반월·시화, 인천 남동, 경북 구미, 경남 창원)

공 약

- 여수국가산단 스마트산단 조성
 - 사업기간 : 2021~2025(5년)
 - 사 업 비 : 1조 3,405억원(국비 9,515, 지방비 2,125, 민자 1,765)
 - ※ 연도별 : ('21) 2,693억원 ('22) 3,917, ('23) 3,231, ('24) 2,300, ('25) 1,264
 - 추진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하 사업단 구성·운영(20명)
 - 사업내용 : 제조혁신, 근로자 친화공간 및 미래형 산단 등 52개 사업
 - ※ 산업부, '30년까지 스마트산단 20개 지정('21년 스마트 산단 2개소 선정 예정)

기대효과

- 여수 스마트산단 조성을 통해 생산 2조 3,991억원, 부가가치 7,962억원 및 고용 7,317명 유발효과 기대
 - 혁신기반 확충 및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 안전·환경과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 및 근로자 복지 향상

실천방안

- 여수 스마트산단 사업계획 보완 및 관계기관 추진 협의 : '19. 11. ~
- 산업부, '21년 스마트산단 공모사업 신청, 선정평가 및 지정 : '20. 상반기

예상 쟁점 및 대응

- (쟁점) 장치산업 위주의 범용제품 생산으로 입주기업과 고용 저조
- 대응 논리(방안)
 - 장치산업 위주의 범용제품(대기업)에서 고기능성 정밀화학 소재·부품산업(중·소기업)으로 전환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참고

여수국가산단 현황 및 스마트산단 세부사업(안)

- ◇ 국내 최대 종합석유화학 집적단지, 전국 산단 생산액의 7.9% 차지
- ◇ 전남 산단 생산의 69.8%, 수출의 68.3%를 차지하는 지역경제 중심

여수국가산단 현황

- 조성기간/규모 : '67. 2. ~ '14. 7. / 32,550천㎡
 - 산업 23,502천㎡, 지원 1,851천㎡, 공공 4,256천㎡, 녹지 2,941천㎡
- 입주기업 : 299개사(대기업 14개사)
 - 석유화학 45.5%, 기계 31.2%, 비금속 3%, 기타 20.3%
- 가동현황 : (생산) 83조 6천억원, (수출) 310억달러, (고용) 23천명
- 산단비중 : 전남 산단 생산의 69.8%, 수출의 68.3%, 고용의 31.4% 차지
 - 국내 산단 생산액 1,056조원 중 7.9%(전국 2위) 차지, 국가 산업의 핵심 요충지
 -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산단 생산액 185조원의 45.2% 차지

< 여수산단 스마트산단 조성 계획 >



1.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 1 스마트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 2 표준형 제조공장 모듈화
- 3 지능형 디지털화 교육
- 4 상생협력 R&D 모델 구축

2. 근로자 친화형 스마트 공간 조성

- 5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 6 스마트 환경관리시스템
- 7 지능형 교통시스템
- 8 근로자 여건 스마트화

3. 지속 가능한 미래 선도산단 기반 조성

- 9 공유 경제 플랫폼
- 10 창업 및 신사업 지원 플랫폼
- 11 에너지 플랫폼
- 12 지역특화기반 인력양성 플랫폼

스마트산단 세부사업(안)

(단위 : 억원)

사 업 명			정부부처	국비	지방	민간	합계
총 계				9,515	2,125	1,765	13,405
제조혁신	1-1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구축	산업부	200	50	50	300
	1-2	제조UP 사이버 인프라센터	산업부	100	50	25	175
	2-1	표준형 제조 데모공장 구축	산업부	250	100	100	450
	2-2	고감성 고분자산업 실증센터 구축	산업부	200	150	-	350
	2-3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지원	중기부	400	-	-	400
	2-4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중기부	455	-	-	455
	2-5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시범공장)	중기부	30	-	-	30
	2-6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업종별특화)	중기부	455	-	-	455
	3-1	스마트 디지털화 시범교육 사업	산업부	75	25	25	125
	3-2	스마트 제조 선도대학	산업부	300	50	75	425
	3-3	스마트업 교육	산업부	120	15	-	135
	3-4	L2F 교육사업	산업부	320	50	130	500
	4-1	스마트 R&D 협의체 운영	산업부	100	10	10	120
	4-2	스마트 MC 연계형 공동R&D 추진	산업부	500	150	75	725
	4-3	맞춤형 패키지 기술개발	산업부	160	-	-	160
	소 계			3,665	650	490	4,805
근로자 친화공간	5-1	스마트 안전시스템 구축사업	산업부	80	-	-	80
	5-2	산단안전교육 통합센터 구축	산업부	140	40	20	200
	5-3	여수석유화학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고용부	207	-	-	207
	5-4	여수 재난대응 통합 인프라 구축사업	산업부	150	60	22	232
	6-1	스마트 환경시스템 구축	산업부	210	60	50	320
	6-2	스마트 물순환 시스템 구축	환경부	591	91	421	1,103
	6-3	스마트 대기오염 방지기술 개발	환경부	80	40	12	132
	6-4	환경측정분석 스마트관리 인증지원센터 구축	환경부	100	50	50	200
	6-5	여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환경부	507	-	217	724
	7-1	지능형 무인 주차시스템 구축	국토부	21	21	-	42
	7-2	공유형 e-모빌리티 공영 인프라 구축	국토부	250	125	125	500
	7-3	스마트 환승 공영 주차 플랫폼 구축	국토부	210	70	30	310
	7-4	스마트산단 교통 체계 안전시스템 구축	국토부	120	80	-	200
	7-5	친환경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운영 시범단지 조성	산업부	340	140	-	480
	8-1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산업부	60	60	-	120
	8-2	복합문화센터 건립	산업부	35	15	-	50
	8-3	근로자 기숙사 임대료 지원	산업부	4	0	-	4
	8-4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고용부	20	-	10	30
	8-5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고용부	18	-	2	20
	8-6	청년 교통비 지원	산업부	32	-	-	32
	8-7	근로자 문화예술공간 조성	문체부	27	27	-	54
	8-8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문체부	50	50	-	100
	소 계			3,252	929	959	5,141
미래산단	9-1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산업부	25	10	10	45
	9-2	산단정밀 3D 공간정보 빅데이터 구축	산업부	240	70	40	350
	9-3	지하 및 지상 공용시설 관리 운영체계 구축	산업부	12	3	-	15
	9-4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해수부	1,606	-	-	1,606
	10-1	여수 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 구축	중기부	100	70	80	250
	10-2	창업지원 및 신사업지원 플랫폼 구축	산업부	40	-	-	40
	10-3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중기부	30.0	9.0	4.2	43.2
	10-4	스타트업 파크 조성	중기부	100	70	30	200
	10-5	스마트 석유화학플랜트 기술센터 구축	산업부	100	100	30	230
	10-6	여수산단 수소생산 저장플랜트 구축	산업부	100	70	80	250
	10-7	페플라스틱 자원화 소재개발 실증기반 조성	산업부	100	80	10	190
	11-1	에너지 플랫폼 구축	산업부	25	15	10	50
	11-2	에너지 자율거래 플랫폼 구축	산업부	70	30	10	110
	11-3	스마트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산업부	15	9	6	30
	12-1	지역특화 인력양성 사업	산업부	35	10	5	50
	소 계			2,598	546	315	3,459

9.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현 황

- 정부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고 지방 신증설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 (수도권이전) 입지지원 30%, 설비투자 14%, (지방신·증설) 설비투자 14%
- 그러나 2008년 ‘10. 30 수도권규제 합리화 정책’ 이후 수도권규제 완화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은 계속 감소하고, 신증설 위주로 투자가 진행
 - * 전남 투자현황(’07~’19) : 100개(수도권 이전기업 61, 신증설기업 39)
 - (’07~’13) 수도권기업 56개 / (’14~’19) 수도권기업 5개, 신증설기업 39개

공약 및 실천방안

- ① 기존·신규 수도권 기업들의 수도권역 내 신증설 투자에 대한 규제강화 필요
⇒ 공장건축총량제 강화 등을 포함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 ②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대상기업 요건 완화 및 지투보조금 지원규모 강화 ⇒ **산업부 고시 개정**
 - 조건완화 : 수도권 3년 이상, 상시고용 30인 이상 → 1년 이상, 10인 이상
 - 지원강화 : (입지보조) 매입가 30%→40%, (시설보조) 14%→24%
 - 지원업종 : 주력·첨단산업 중심에서 일반 업종까지 지원 확대
- ③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보조금 추가지원 비율 확대(**국토부·행안부 고시 개정**)
 - 지원비율 상향(10%→20%)
 - * 전국 159개 시·군 중 낙후도가 높은 70개 시·군 지정 운영 중(전남 16개군)

기대효과

- 지방기업 이전(투자유치) 촉진으로 위축된 지역 산업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가 지향하는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 일자리 창출 등 보다 더 균등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예상 쟁점 및 대응

- (쟁점사항) 수도권 규제 강화 시 수도권 주민 등의 반발 예상
- (대응논리) 수도권 산업 과밀화 해소 등을 통한 인구 지방 분산과 수도권 환경개선으로 수도권은 물론 전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국가균형발전)

10.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기 활성화

현 황

- 전국 최초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19.11.15. 산업부)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국가 재정지원 계획이 미흡해 조기 활성화에 한계
- ※ '20년 국비 반영액 42억원(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

공 약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기 활성화(2020 ~ 2025)
 - 규 모 : 총 18.92km²(전남 10.49km²), 코어지구와 2개 연계지구로 구성
 - 위 치 : 코어지구(혁신도시권), 연계1지구(함평, 장성), 연계2지구(목포)
 - 중점산업 : ① 스마트 그리드, ② 에너지 효율 향상, ③ 풍력

기대효과

- (국가경쟁력 확보) 신기후체제와 에너지와 타 산업 간의 기술 융복합 트렌드에 대응하여 국가 에너지신산업* 기술혁신 및 글로벌 시장 선도
- * (국제에너지기구, 2018) '30년까지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 23조 USD(약 3경원)
- (혁신클러스터) 에너지 연관 산학연 집적, 신기술 R&D, 기술사업화, 인력 양성 지원 등으로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조성

실천방안

- 중점산업별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육성 인프라 확충
- 단지내 기술사업화를 위한 '융복합단지 기술개발사업' 신설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개발사업에 융복합단지 연관 항목 신설 등

〈세부사업〉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전력기자재 업사이클링 R&D 및 산업화 지원, 지능형 전력기자재 신뢰성 평가 시스템 구축, 디지털 그리드 연구 및 실증 등

예상 쟁점 및 대응

- (쟁점사항) 에너지신산업 분야 재정지원에 대한 지역 특혜 논란
- (대응논리)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클러스터 구축 시급

* 에너지밸리, 한전, 한전공대, 전국 최고수준의 재생에너지 자원 보유 등

참 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개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 (근 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개 념) 에너지(연관) 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
- (중점산업) ①태양광, ②풍력, ③수소·연료전지, ④에너지 효율 향상, ⑤석유, ⑥가스, ⑦스마트그리드, ⑧원자력, ⑨화력발전
- (지원내용) 기반시설, 특화기업·연구기관·인력양성기관 지정·지원

기반시설	연구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을 위한 필요 시설
에너지 특화기업	연구개발 / 지방세 감면 / (시행령) 제품 우선구매 요청
전문연구기관	연구개발 및 실증 / 에너지신산업 발굴 / 국제공동연구
전문인력양성기관	실습기자재 등 교육·훈련 경비 / 국제교류

광주 · 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현황



11. 에너지밸리(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필 요 성

-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한 에너지밸리 내 입주기업(기관)의 R&D 촉진 및 기업유치 활성화로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밸리를 에너지신산업의 메카로 조성

공 약

- 나주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도시 일원
 - 규 모 : 1.99km²(혁신도시산학클러스터 0.41, 혁신산단 0.97, 한전공대배후단지 0.61)
 - 내 용 : 기술핵심기관중심 R&D 단지, 전략기업 유치지구 육성
 - 사업주체 :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 지정승인 : 과기부장관

기대효과

- 입주기업 R&D 예산지원(100억원/년 국비지원 가능) 및 조세감면
-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의제처리, 기반시설 조성 지원
- 전남 나주-한전 간 친환경 에너지 협력사업 규모의 경제 실현
 - (목표) 유망기술 250건, 기술이전 150건, 기술창업 100건, 연구소기업 50건, 사업화 매출 500억원, 일자리창출 500명
 - (효과) 신규창업기업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2,988억원 부가가치 1,454억원

실천방안

-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 현장조사 대응(과기부 등 20인) : '20. 3월중
- 전문가위원회 검토 / 중앙부처 관계기관 협의 : '20. 3.~4.
-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 '20년 상반기

예상 쟁점 및 대응

- (쟁점사항) 한전공대 배후단지 개발계획 수립지연 시 특구계획에서 제척 우려(개발계획 수립 완료 부지만 특구 지정 입장(과기부))
- (대응논리) 상반기에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나주시와 적극 협력, 기한 내 개발구역 미지정으로 해당 부지만 제척될 경우 개발 계획 완료 후 추가 지정 추진(추가 지정 가능 의견 (과기부))

참고1

강소특구 추진배경 및 연계 국정과제 현황

□ 강소특구 추진배경

- 혁신도시 제2의 도약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한전)의 기술사업화 및 기업유치(에너지밸리 조성)를 통해 혁신도시 제2의 도약 전기 마련
- 국정과제에 포함된 한전공대 연구소 클러스터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에너지 특화단지로 조성

□ 에너지밸리 조성 (국정과제, 대통령공약)

한전 등 공공 이전기관과 연계된 에너지·ICT 잠재투자기업 발굴 및 전략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 세계적인 에너지밸리로 조성

- 에너지밸리 정의
 - 빛가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전과 지자체가 에너지산업 위주의 기업·연구소를 유치하여 미래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Global Smart Energy Hub를 지칭
 - 공간적 범위 : 중심축(혁신도시), 성장축(중심축 반경 10km 이내), 영향권(그외 지역)



□ 한전공대 및 연구소클러스터 조성 (국정과제, 대통령공약)

- 추진배경 : 글로벌 에너지산업 시장을 선점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자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전공대' 설립

⇒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에 반영된 정책으로 차질없이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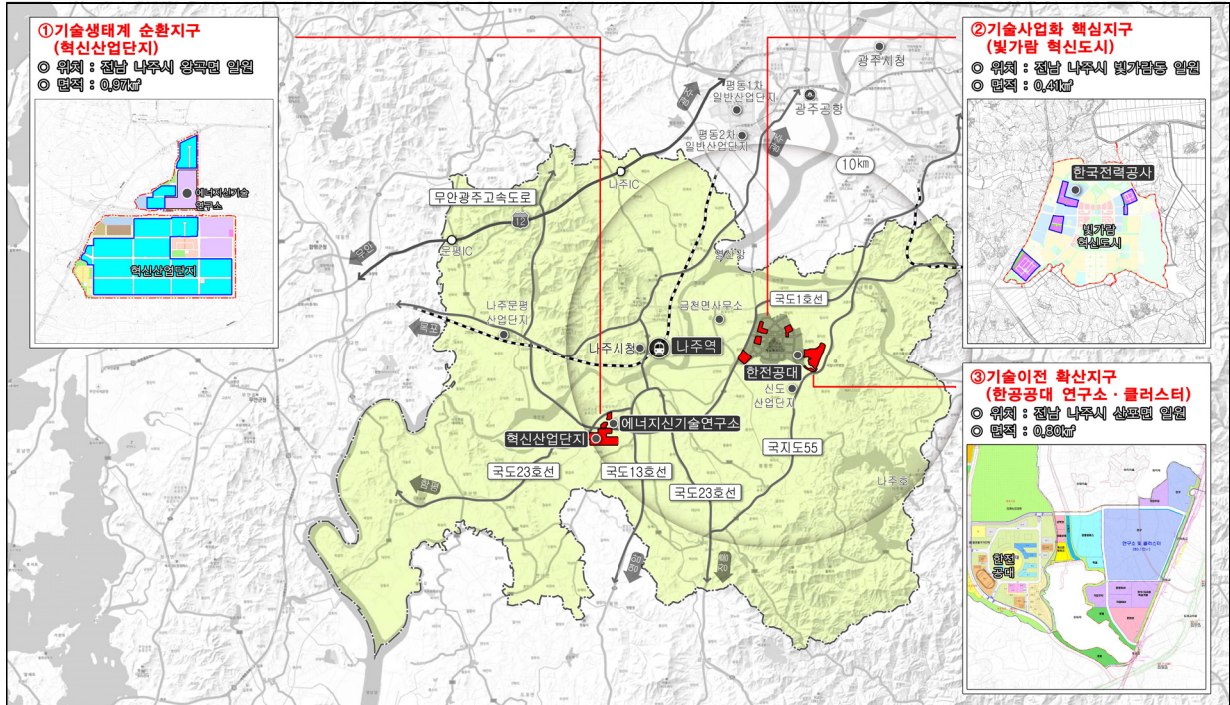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위 치)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일원(부영 CC 일부 및 인근 농경지)
- (면 적) 120만㎡(대학부지 40만㎡, 연구소 및 클러스터 부지 80만㎡)
- (정 원) 1,000명(대학원 600, 학부 400) + α
- (개 교) '22년 3월 * 빛가람 혁신도시로 입지 확정('19. 1. 균형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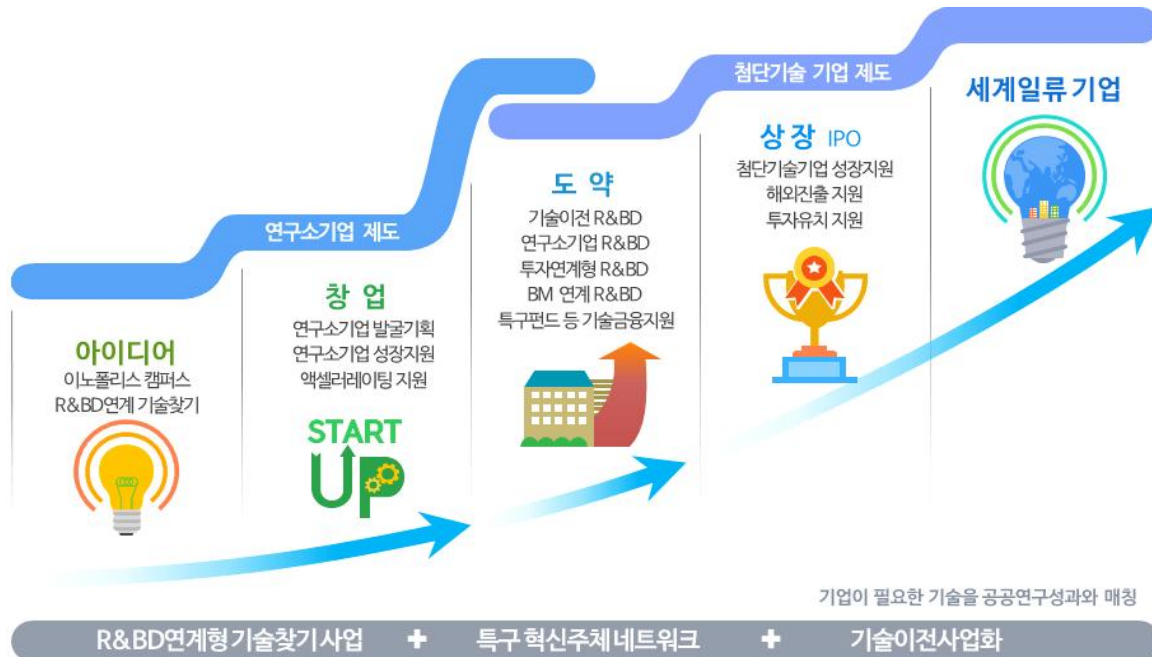
참고2

개발계획 및 플랫폼 구축(안)

□ 전남 나주 강소특구 개발 구상도



□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전주기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 R&D = 연구개발, R&DB = 사업화 연계기술개발

※ 광주, 대덕특구 지정 3년 만에 매출액은 42% 신장(11.3→ 16.0조원), 기업수는 51% 증가(795→ 1,199개), 고용은 35% 증가(4.3→ 5.8만명)

12. 한국폴리텍대학 전력기술교육센터 건립

현황

- 에너지밸리에 420개 기업을 유치('15.~'20. 2.)했으며, 2022년까지 1,00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
- 전력·에너지분야 기능인력이 향후 4년간('19.~'22.) 1,955명이 필요하나 1,187명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768명 인력 부족 * 자료출처 : 한전 내부 보고서('19. 2.)

공약

- 에너지밸리 맞춤형 인력양성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기술교육센터 건립
 - 위치 :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산학연클러스터 內)
 - 규모 : 부지 15.8천㎡, 건물 8천㎡(6층)
 - 사업비 : 351억 원(국비 291, 지방비 60)
 - 사업주체 : 한국폴리텍대학

기대효과

- 에너지밸리 기능인력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 전남 서남권 고용위기지역 등 취약계층의 직업전환 훈련을 통한 고용 환경 활성화

실천방안

- 2021년 부처 및 정부예산안에 50억 원 반영(기본 및 실시설계비, 건축비 등)
 -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나주시-한국폴리텍('19. 1.), 전라남도-한국폴리텍('19. 2.) 업무협약 체결
 - (고용부)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억 원 확보 : '19. 12.
 - (나주시) 부지 매입계약(3년 분할) 체결 : '19. 12.
 - (한국폴리텍)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20. 3. ~ 7.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쟁점) 현재 추진중인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기간('20. 3. ~ 7.)을 감안할 시 2021년 정부예산안 반영에 애로가 있음
- (대응방안) 기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실시한 바 있으므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조기 완료 건의
 - * '20년도 국고확보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한국폴리텍에서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19. 9. ~11. (사)직업자격학회, B/C=1.174, 적격)

참고1

전력기술교육센터 개요

구 분	내 용
위 치	·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9블럭
규 모	· 부지 : 약 15,868㎡(약 4,800평) · 건물 : 6층 규모(연면적 약 8,000㎡, 약 2,400평)
사 업 비	· 부지매입비 : 60억 원(지방비 / 나주시) · 건 축 비 : 200억 원(국비) · 장비/비품비 : 90억 원(국비)
학 과	· 전력기술융합학과(150명) - 전기 관련 전체 공정에 대한 교육훈련이 가능한 융합학과 형태로 운영 -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공별 탄력적 운영 - 전공 분야 ▷ 전력IT : 전력망에 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실무 ▷ 전력제어 : 송배전 및 수변전 설비분야, 내·외선 공사 분야 ▷ 전력설비 : 변압기, 차단기 등 전력설비 제조 및 유지보수
교육과정	· 전문기술과정(하이테크*) 등(150명) *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대상 융합형 고급 기술과정(10개월~1년 과정) · 재직자 향상훈련(300명) · 여성특별과정 및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연간 100명)

참고2

사업비 산출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비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사업비 계		35,000	
부지매입비	소 계	6,000	- 15,868㎡ x 378천원
건축비	소 계	20,000	
	○ 타당성조사 용역비	150	
	○ 설계비	925	- 4.89% x 건축공사비 x 1.1(부가세)
	○ 상주감리비	1,254	- 상주감리비 산출(건축공사비 x 7.29%)
	○ 공사비	17,671	- 건축공사 8,000㎡ x 2,150천원 등
장비/비품비	소 계	9,000	
	○ 교육장비비	8,000	- 4개학과 교육장비 x 2,000,000천 원
	○ 행정비품	1,000	

13. 청년르네상스 (청년주식회사)

현 황

- 목포대·초당대·세한대 등 약 1만 여명의 청년들이 지역 이탈
 -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 서울 등에서 취업을 준비, 청년이 지역을 떠나다 보니 지역은 활기를 잃고 쇠락
 - 청년취업에 대한 문제는 오래된 숙제이며 정부가 나서서 함께 풀어야 할 국정과제. 청년 정책은 다양하지만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소수, 이에 ‘청년르네상스’ 정책을 제안.

공 약

- ‘청년르네상스’는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청년지원서비스 교육
 - 청년르네상스(청년목포주식회사)는 스펙 쌓기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험을 통해 사회적 연대와 실무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서포트 기능과 함께 일정기간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함.
 -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현하는 4차 산업혁명과 청년벤처창업, 지역문화예술 청년르네상스 창업으로 개발 육성하는 프로그램 제공.

기대효과

- 청년목포주식회사 정책을 통해 지역의 청년이 돌아오는 모델 구현
 - 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유입기회 마련
 - 지역청년들의 역량향상으로 취업을 보장
 - 소통 공간 제공으로 청년리스크 제고
 - 취업준비 및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 고졸예정자 혜택 부여

실천방안

- 입법: 청년기본권 제정
 - 20대 국회에서 청년기본권 포함 청년관련 법안 7개 발의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세대간 상생 협력을 목적
 - 2019년 10월 현재 계류중(청년르네상스 예산 포함추진 희망)
- 목포시 청년관련 예산
 - 2018년: 21,160백만원 / 청년관련 포괄사업 추진예산
 - 2020년: 35,000백만원 / 청년목포르네상스 포함예산 (안)

예산쟁점 및 대응

- 예산쟁점
 - 타 지역불균형 초래
 - 중복예산에 대한 우려
- 대응논리
 - 청년르네상스 정책 최초 제안 벤치마킹 및 교육 실시
 - 차별화된 정책으로 선별적 예산 투입

14. 2028 전남 세계 섬 엑스포 유치

현 황

- 섬의 가치 공유와 국토 균형개발을 통한 섬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8 국제공인 섬 엑스포를 유치·개최
- 道에서는 국제공인 세계 섬 엑스포 유치를 위해 기초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정부에 엑스포 유치 지원을 건의
 - 섬 엑스포 유치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19. 4.~'19. 7.) / 22백만원
 - 정부에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지원 지속 건의중
- 정부는 우리 道가 추진하는 세계 섬 엑스포 지원을 약속

【 제1회 섬의 날 국무총리 기념사 / 2019.8.8. 】

▶ (섬 엑스포)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세계 섬 엑스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라남도과 함께 협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여러분께 드립니다.

공 약

- 전남에서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개최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추진

- 사업개요
 - 개최시기 : 2028년(90일간)
 - 성 격 : BIE 공인 『인정엑스포』
 - 장 소 : 전남 도내 일원
 - 참여인원 : 600만명(내국인 550만, 외국인 50만)
 - 총사업비 : 2조 2,177억원(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포함)
 - 사업내용 : 섬 주제관 운영(섬의 문화·역사·생태 등), 국제학술대회, 섬 투어 및 체험행사(문화행사 연계), 기반시설 등
 - 시행주체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등
- 주요 추진일정
 - 엑스포 유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전남도, '20년)
 - 국제행사 개최계획 승인 신청(전남도→기재부, '20년)
 - 범도민 엑스포 유치 추진 및 조직위원회 구성(전남도·행안부 등, '21년)
 - 엑스포 유치 신청(정부→BIE, '23.上) 및 개최지 결정(BIE, '24.下)

기대효과

- 전략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섬의 가치에 대해 인식공유 계기 마련
 - 폐쇄적인 섬 이미지를 영토의 필수 공간,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섬으로 공감대 형성
- 섬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섬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
 -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형 기반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섬 발전방안 모색
 - 세계적 수준의 섬 산업과 섬·해양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

실천방안

- 국제공인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 계획에 반영
 - 2020년도에 국가계획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지원
- 2028 세계 섬 엑스포가 전남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

예상 쟁점 및 대응

- 세계 섬 엑스포를 전남에서 개최하려는 이유
 - 전남은 섬의 65%와 갯벌의 42%를 보유하고 있어 해양생태자원과 인문학적 요소가 풍부
 - 제1회 섬의 날 국가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 경험을 국제행사로 연계
 - 섬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보전·개발하는 섬 발전 기반*이 구축되어 있어 수준 높은 엑스포 기획·운영 가능
-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사)한국글로벌섬재단, (사)섬연구소, (사)한국도서학회, (사)장보고글로벌재단 등

15.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

* 20대 총선공약

현 황

- (추진경과) 제1회 섬의 날 기념식('19.8.8.)에서 진흥원 설립 발표

【 제1회 섬의 날 국무총리 기념사 / 2019.8.8. 】

▶ (섬 연구기관) 앞으로는 종합 연구기관을 설립해 섬에 관한 모든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 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 : 섬 발전연구진흥원 설립 포함('18.6.14./국무총리)
- 국회 정책토론회('19.2.20./국회 도서발전연구회, 전남도, 박지원 의원실 등)
- 제1회 섬의 날 기념식에서 진흥원 설립 발표('18.8.8./국무총리 기념사)
-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19.9.17, 박지원 의원 대표 발의)
- 공공기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심사 요청('19.10.4. 행안부→기재부)

공 약

-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 전남 도내 설립·유치
 - 전남에는 섬 발전 정책기반 구축에 필요한 자원이 풍부하며, 최근 제1회 섬의 날 기념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진흥원의 설립 최적지임

기대효과

- 미래성장 동력인 섬에 대한 조사연구정책 등의 종합적·전문적인 추진체계 구축
- 정주여건 개선, 소득증대 사업 추진 등을 통한 살기 좋은 섬을 구축함으로써 섬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
- 섬 정책의 일원화, 유·무인도 등 섬을 종합적으로 관리 가능

실천방안

- 섬 발전연구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국립 섬 발전연구원 전남 도내의 설립·유치 여부

○ 국립 섬발전연구원 전남 도내 설립 당위성

- 전남도는 다양한 섬 발전 정책 추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세계 최초로 섬의 날 제정 건의(2016년)와 제1회 기념행사의 성공 개최
 -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등 성공적인 섬 정책 개발 수행 등
- 전남에는 보유자원이 풍부하고 지역 내 전문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섬 발전 정책기반 구축 용이
 - 섬 인적네트워크 보유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사)한국글로벌섬재단, (사)한국섬학회 등
 - 섬에는 음식, 볼거리, 체험거리 등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문화관광 자원 풍부
- 섬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해상교통 및 접근성이 취약하므로 섬이 가장 많은 전남에 위치하는 것이 설립 목적 달성 용이
 - 전남 섬 : 2,165개(전국 65%), 유인도 272개(전국 57%), 무인도 1,893개(전국 64%)

제15조(섬발전연구진흥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섬발전연구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서개발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2.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3. 도서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조사 및 관리
4. 섬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향상, 섬 관광 활성화, 섬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의 활용과 섬의 가치 증진 등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5.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위탁사업
7. 그 밖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서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④ 국가기관 등은 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⑤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여객선 공영제 강화 및 도서민 1,000원 여객선 시행

현 황

- 일반인 요금 기준 구간별 차등 지원(현재 운임 지원 현황)
 - 8,340원 이하 : 정률 70%, 8,340원 초과~3만원 : 5천원 초과액,
3만원 초과~5만원 : 6천원 초과액, 5만원 초과 : 7천원 초과액
 - * 수혜대상 : 전남 7개 시군, 164개섬, 도서민 65천명('18년 이용 실적 : 2,527천명)
- 도서민 여객운임은 평균 약 4천원으로 육상 대중교통의 약 3배('18년 기준)
 - 운임 : (시내버스) 1,300원, (지하철) 1,250원, (연안여객선 평균) 3,898원

공 약

- 여객선 공영 강화 및 도서민을 위한 여객운임 1,000원 단일화
 - 도서민 여객운임 부담액 1,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지원

기대효과

- 섬 주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으로 섬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
-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교통편의 증진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

실천방안

- 2021년 1,000원 여객선 시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국비 15억원 지원 건의
 - 소요예산 : 30억원(국비 15, 지방비 15)
 - ※ (산출근거) 75억원^① - 25억원^② - 20억원^③ = 30억원
 - * ① 現 정부지원 후 도서민 부담액, ② 지원대상자 2,527천명의 1,000원 부담액
 - ③ 2020년 일부구간 지원확대에 따른 추가 지원액

예상 쟁점 및 대응

- (쟁점)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원거리 도서민을 지원 대상에 포함?
- 대응 논리(방안)
 -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일수록 해상여건 상 야간운항 제한, 1일 운항횟수 제한, 기상 조건에 따른 잦은 결항 등으로 여객선 이용 여건이 더 열악함
 -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20년 개편안에 원거리 구간 (도서민 부담 5천원 이상) 도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에 포함

참고1 사업비 산출

- 지원대상 : 2,527천 명 (7개 시군, 126개 섬)
 -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 수(천명) : '16) 2,608, '17) 2,608, '18) 2,527
- 소요사업비 : 24억 원
 - 산출근거 : 75억 원^① - 25억 원^② - 26억 원^③
- * ① '18년 정부지원 후 도서민 부담액, ② 지원대상자 2,527천명의 1,000원 부담액
 ③ 2020년 일부 구간 지원확대에 따른 추가 지원액
- 운임별 구간 이용 현황('18년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요금별 이용 (일반인 요금 기준)	이용객 수	1,000원 여객선 운임 지원			지원액
		계	정 부 지원액	도서민 부담액	
총 계 (100%)	2,527,119	15,410	7,897	7,513	
8,340원 미만 (86.8%)	2,194,318	8,190	2,434	5,756	운임의 40%
8,340원 ~ 3만원 (9.6%)	242,883	5,091	3,876	1,215	5천원 초과액
3만원 초과 ~ 5만원 (3.3%)	83,650	1,854	1,356	498	6천원 초과액
5만원 초과 (0.3%)	6,268	275	231	44	7천원 초과액

참고2 교통 운임 지원 사례

사업명	시행지역	사업비 (백만 원)	총 이용자수 (일 평균)	이용 요금	비 고
교통 오지마을 100원 택시	22개 시군 (804개 마을)	5,078	1,039,302 (2,847)	100원	- '14년 시범 운영 - '15년 본격 시행 * 1인당 월 4매 발행
공영버스	신안군 (14개 읍면)	2,592	667,964 (1,830)	1,000원 ~ 1,300원	- '06년 일부 지역 시행 - '13년 전 지역 시행 - 수익금 73백만 원
1,000원 도선	고흥군 (5개 도서)	468	59,040 (162)	1,000원	- '19년 시행

17. 농수축산물 가격안정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현 황

-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농어업환경에 급격한 변화 예상
 -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
 - 농산물 보조금 축소 불가피
-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공 약

- 농산물 가격안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 지역특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현
 - 농산물 보장보험 확대
 -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산정시 농작물 피해액 포함

기대효과

-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피해 최소화
- 수입보장보험, 재해보험 확대 등으로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가격 보장 기여
- 농작물 재해 피해시 피해 보상 현실화

실천방안

- 관련법 재·개정 : 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②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③농산물재해보험법시행령 등
- 농어업·농어촌의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개편

예상 쟁점 및 대응

- 지역특화 농수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에 대한 각 부처 다양한 의견표출
 - 기 시행중인 지자체 사례 분석, 해외 유사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 확대 방안 강구
- 수입보장보험 확대 시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
 - 7개 품목* 기시행('15년부터 확대), 피해 보상가격 산정기준 마련 등 제도 보완
 - * 콩, 양파, 마늘, 고구마, 가을감자, 양배추, 포도
 - 보험료 지원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20%, 자부담 20%

18.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국비 지원

현 황

- 사 업 량 : 21천 건/매년
- 사 업 비 : 136억원(도비 27^{20%}, 시군비 95^{70%}, 자부담 14^{10%})
-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신규·갱신) 농가
- 사업내용 :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따른 비용 지원
 - 지원단가 : 평균 673천원/건(수질·토양검사 118, 잔류농약분석 208, 심사비 등 347)
 - * 인증비 지원실적('05~'18) : 1,096억원(지방비 986^{90%}, 자담 110^{10%})

공 약

- 생태환경 보존은 물론 미래 생명산업인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갱신하고 있는 인증 비용의 50% 국비 지원
 - 친환경농업은 일반 관행농업에 비해 경영비가 높고 생산량 감소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여건 등으로 어려움 가중
 - * 유사사업 지원 사례 : GAP 인증비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기대효과

- 생태환경 유지·보존은 물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로 안전 먹거리 생산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 도모

실천방안

-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국비 50% 지원
 - 관련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참고1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산출

-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규·갱신농가
- 사업규모 : 63천건('21년 ~ '23년 매년 21천건)
- 사업비 : 49,833백만 원(국비 24,916^{50%}, 지방비 19,934^{40%}, 자담 4,983^{10%})
- 인증비용 산출(평균) : 791천 원/건 * 토지위치, 면적 등에 따라 단가 변동
 - 수수료 50천원 + 출장비 68천원 + 토양분석 69천원 + 수질검사 48천원 + 잔류 농약검사 208천원 + 심사관리비 348천원
- ※ 2020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계획(자체사업)
 - 사업량 : 18천건
 - 사업비 : 11,700백만 원(도비 2,340^{20%}, 시군비 8,190^{70%}, 기타 1,170^{10%})

참고2 국내·외 지원사례

- (국내) GAP 인증심사비,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심사 수수료, 잔류농약, 토양·용수 등 안전성 검사비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19년도부터 주산지 GAP인증비 지원사업이 안전성검사비에 포함
- (미국) 국가유기인증 비용 공유 프로그램('02~'15년 예산 : 11.5백만\$)
 - 농산물, 축산물, 야생채취, 취급자 인증비용의 75% 각각 750\$ 한도 지원
 - * (대상) 국내 및 미국령 지역, (지원목록) 신청비, 심사비, 출장비, 검사비용 등

참고3 친환경 · GAP농산물 인증비용(단가) 비교

구 분		단 가	비 고
친환경농산물	계	791천 원	
	인증부대비용	466천 원	
	검사비용	325천 원	
GAP 농산물	계	703천 원	
	인증부대비용	150천 원	
	검사비용	553천 원	

19.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현 황

- 사업대상 : 전남 섬지역 7개 시·군(20개 섬)
 - 목포, 여수, 고흥, 보성, 완도, 진도, 신안
- 현 황 : 도서지역에서 육지로 출하되는 농산물은 해상 운송비가 추가 발생
- 총사업비 : 52억원
- 사업주체 : 시·군 및 농협

공 약

-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섬에서 육지까지 소요되는 해상 운송비를 지원

기대효과

- 도서지역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에 기여
 - 섬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산물을 육지부에 출하하고자 하는 농가의 운송비 부담 경감
 - 주요 수혜대상/사업량 : 전남 20개 섬지역 농가 / 농산물 151천톤

실천방안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3
- 소요예산 : 연 52억원(국비 26^{50%}, 지방비 16^{30%}, 자담 10^{20%})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도서지역에만 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은 산간지역 등 기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 대응 논리(방안)
 - 도서지역 물류비 가중의 특수성 강조, 문제인정부 국정과제임을 부각
 - 정부는 도서지역 물류비 경감방안 연구용역 및 실증 진행('20. 2.~11.)

20. 양식어업 재해보험 제도 개선

현 황

- 가입품목 : 28종(본사업 17, 시범사업 11)
 - 본 사업(전 국) : 넙치, 전복,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송어, 강도다리, 능성어, 굴, 가리비, 홍합, 다시마, 톳
 - 시범사업(지역별) : 김, 멍게, 미역,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공 약

- 양식어업재해보험 가입품목을 **전품목으로 확대**
 - 흰다리새우, 참조기, 매생이, 동자개, 미꾸라지 등 양식수산물 전체에 대해 보험상품 개발 확대
- 양식어업재해보험료 **국비지원 확대**
 - 국비지원 현행 50% → 60%로 인상

기대효과

- 태풍,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업인 경영안정 도모
- 재해 발생 시 신속하한 지원으로 양식어업인 부담경감 및 생계안정 도모

실천방안

- 양식어업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을 양식품종 전체로 확대해 주도록 건의
 - 소요예산 : 160억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담 20%)

예상 쟁점 및 대응

- (쟁점) 양식어업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을 양식품종 전체로 확대하는 사유?
- 대응 논리(방안)
 - 양식어업재해보험 제외대상 품목은 질병취약, 소수 계약자 등을 사유로 보험 상품 개발을 기피하고 있어 다수 어업인이 차별받고 있음
 - 보험 미가입 어가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 발생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의해 피해복구계획 수립 및 국비 등 예산을 반영하여 복구 지원함
 - 소수 품종 양식어업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양식어업재해보험을 양식품종 전체로 확대 필요

□ 해면양식 주요 품종별 표준양식 기준 (2019. 4. 19.적용)

구분		행안부 훈령(현재)						수 정 안					
		치 어(치패)		중간어(중간패)		성 어(성패)		치 어(치패)		중간어(중간패)		성 어(성패)	
시설별	대상 품종	크 기 (미만)	최대수용 마리 수	크 기 (이상~미만)	최대수용 마리 수	크 기 (이상)	최대수용 마리 수	크 기 (미만)	최대수용 마리 수	크 기 (이상~미만)	최대수용 마리 수	크 기 (이상)	최대수용 마리 수
육 상 양식장 (㎡)	넙치							15cm	90~100	15~40cm	26~90	40cm	25
	강도다리							6cm	450	6~30cm	21~450	30cm	20
	전복	3cm	200~2,000	3~7cm	30~300	7cm	15~150	4cm	850	4~8cm	216~850	8cm	215
해 상 가두리 (5×5×5m /칸)	조피볼락	13cm	22,000	-	13,000	26cm	6,000	12cm	11,816 (△46%)	12~30cm	3,369~11,816	30cm	3,368
	송어	15cm	25,000	-	15,000	30cm	8,000	15cm	14,880	15~30cm	6,201~14,880	30cm	6,200
	감성돔	13cm	20,000	-	12,000	26cm	6,000	15cm	7,500	15~40cm	1,751~7,500	40cm	1,750
	참돔	13cm	20,000	-	12,000	26cm	6,000	15cm	7,500 (△63%)	15~40cm	1,751~7,500	40cm	1,750
	돌돔	10cm	22,000	-	13,000	20cm	5,000	15cm	7,500	15~40cm	1,751~7,500	40cm	1,750
	말쥐치	10cm	20,000		12,000	20cm	5,000	13cm	14,880	13~20cm	6,201~14,880	20cm	6,200
해 상 가두리 (2.4×2.4×2.5m/칸)	전복 (일반형)	3cm	5,000	3~7cm	1,400~3,400	7cm	1,300	4cm	1,600 (△68%)	4~8cm	801~1,600	8cm	800

21. 식품소재 반가공산업육성을 위한 농축수산물가공센터 설립

현 황

- 원료 농축수산물과 완제품을 제외하고 완제품 생산에 중간재로 투입되는 반가공품과 식품첨가물 산업 육성 필요성
 - 단순 중간재가 아닌 식품산업 발전에 따라 식자재형, 농축분말형, 첨가물소재형 등 다양한 형태의 반가공소재가 발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적화된 가공센터 설립을 통해 관련 산업의 비약적 발전 유도

공 약

- 식품소재 반가공산업육성을 위한 농축수산물거점가공센터 설립
 - 국가의 식품산업 육성정책에 따른 국산 농수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전문화된 농축수산물 반가공 육성센터 건립
 - 반가공산업 육성지원 및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을 통한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 역 : 함평군

기대효과

- 식품소재, 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농축수산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산 농축수산물 수요 확대 및 수급조절
 - 산지 특산품 및 국산 농축수산물의 활용방안 확대를 통한 신 판로 개척
 - 양질의 새로운 식재료 발굴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중소식품기업 활로 개척

실천방안

- 예산 확보
 - 농축수산물 반가공거점센터 구성을 위한 관련부처 협의 및 설립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 관련예산(추정예산 : 미정) 확보를 위한 정부관련부처 협의 및 국회예산 확보

22. 국립 산림기술 교육원 건립

* 보성군 사업포기 의사

현 황

- 사업기간 : 2021 ~ 2024
- 사 업 비 : 400억원(국비 400^{100%})
- 사업주체 : 산림청
- 사업내용 : 국립 산림기술 교육원 건립
- 지 역 : 보성군

공 약

- 국립 산림기술 교육원 건립
 - 조림, 숲 가꾸기에서부터 산림휴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산림 관리인력이 요구되나 전문교육기관 부재

기대효과

- 산림관리 이용 등 국민생활수요 증가에 따른 임업기능인 육성으로 임업 강국 기여
 - 전문임업인 가구 현황 : 217,197 농가
 - 독립가, 임업후계자, 산림조합, 보성군 임업인 5천여명 등

실천방안

- 입법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림청 산하 조직 신설
- 예산

(단위 : 억 원)

총사업비(국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400	30	150	150	70	

예산 쟁점 및 대응

- 예산 쟁점 : 산림조합 임업기능교육원과 중복사항
- 대응 논리(방안) : 국가차원의 전문산림기술 교육원의 차별화

23. 말 힐링 복합공원 조성

현 황

- 말산업은 환경 친화적, 농촌 경관 개선, 청소년 정서함양 및 장애인 재활 등 사회공익적 가치가 큰 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말 산업 기반 확대 필요

공 약

- 온가족이 말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복합공원 조성
 - 사업기간 : 2021 ~ 2023
 - 사 업 비 : 200억원(국비 100^{50%}, 지방비 100^{50%})
 - 사업주체 : 전라남도(시·군 공모)
 - 사업내용 : 말 조련·휴식 및 승마시설, 힐링 공원, 레포츠 시설 등

기대효과

- (말산업 육성) 유소년 경기, 중소·축제형 승마대회 등 다양한 생활스포츠 승마대회 개최를 통한 말산업 육성 및 인프라 확충
- (조련센터 운영) 적정 인력과 시설이 갖춰진 거점 조련센터로 지정하여 조련·유통·교육의 복합적인 기능 수행
- (경제 활성화) 승마레저 수요 증가에 따라 말 생산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 (관광 활성화) 지역축제 및 승마대회 연계 말 테마 축제장 활용

실천방안

-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말 힐링 복합공원 조성 지원 건의(농림축산식품부)
- 예산 : 200억원(15종)

예상 쟁점 및 대응

- 말 힐링 복합공원을 조성하려는 이유
 - 전남은 온화한 기후와 서남해권(장흥, 신안 등)의 리아스식 해안 등 우수한 자연경관을 활용, 말 힐링 복합공원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방향

- (기본방침) 전남 말산업 육성을 위한 승마산업 기반 조성
 -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국제 규모의 승마장 병행 설치
 - 시·군 공모를 통한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시설 종류	규모	소요예산(억원)	비고
계	15종		200	
조련·휴식 및 승마시설	조련시설, 경기장, 원형마장, 외승주로, 마방 등	8종	98	
힐링 공원	플라워가든, 잔디광장, 야외공연장, 생활체육시설, 마차길	5종	70	
레포츠시설	루지(무동력 카트를 이용 경사로를 내려오는 레포츠)	1식	15	
기타시설	사무실, 말 전문병원, 주차장	3종	17	

□ 기대효과

- (말산업 육성) 유소년 경기, 중소·축제형 승마대회 등 다양한 생활 스포츠 승마대회 개최를 통한 말산업 육성 및 인프라 확충
- (조련센터 운영) 적정 인력과 시설이 갖춰진 거점 조련센터로 지정하여 조련·유통·교육의 복합적 기능 수행
- (경제 활성화) 승마레저 수요 증가에 따라 말 생산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 (관광 활성화) 지역축제 및 승마대회 연계 말 테마 축제장 활용

24. 크루즈 관광기반 조성

현 황

- 여수신항 크루즈부두 : 확장 공사 추진('18~'21)
 - 사업내용 : 접안시설 연장(400m→500m)
 - * 15만톤급 크루즈선박과 1만5천톤급 카페리선박 동시 접안 가능
 - 사업비 : 288억원(국비 100%,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목포항 삼학부두 : 폐쇄('20. 12.), 삼학도를 해양관광자원으로 개발
 - 부두 기능(양곡·석탄·잡화·크루즈) 폐지, 삼학도 공원화사업 추진(목포시)
 - * 목포대교 통항 높이 제한(50m)으로 5만톤 이상의 크루즈선 입항 불가능
 - ※ 해양수산부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경제성 부족 B/C=0.01)에 따라, 크루즈 부두 이전(삼학부두→목포신항) 건의 불수용

공 약

- 여수신항 크루즈터미널 신축('21~'24) : 1개소, 300억원
- 목포신항 크루즈부두 건설('21~'25) : 1선석(10만~15만톤급), 1,007억원
- 연안 크루즈부두 건설('21~'25) : 5개 시군(6개소), 1,800억원
 - 여수(거문도), 고흥(거금도), 완도(보길도), 진도(관매도), 신안(흑산도, 증도)

기대효과

- 여수신항 크루즈터미널 신축 : 크루즈관광객 출입국 수속 효율성 제고
 - 출입국 수속 장시간 대기 문제 해결(현재 연안 여객선터미널에서 출입국 수속)
- 목포신항 크루즈부두 건설 : 크루즈선 대형화 추세 대비(10만톤급 이상)
- 연안 크루즈부두 건설 : 섬 관광자원 접근성 제고로 크루즈 관광객 증가

실천방안

- 제4차 항만 기본계획('21~'30) 반영 요청서 제출('18. 12.)
 - 반영 요청 : 2건(목포신항 크루즈부두 건설, 여수신항 크루즈터미널 신축)
- 전남 연안 크루즈 도입 타당성조사 용역(6개월) 추진('20. 3.~9.)

예상 쟁점 및 대응

- 쟁점 : 크루즈관광 수요 부족(해양수산부에서 부정적 의견 제시)
 - 여수신항 크루즈터미널 신축, 목포신항 크루즈부두 건설 : 경제성 부족(B/C=0.01)
 - 연안 크루즈부두 건설 : 전남 연안크루즈 도입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20. 3.~9.)
- 대응 방안
 - 여수신항 크루즈터미널 신축, 목포신항 크루즈부두 건설 : 기존 부두·터미널 활용
 - 연안 크루즈부두 건설 : 연안크루즈 도입 타당성조사 용역 후 해수부에 건의

참고1

위치도 ① [여수신항 크루즈 터미널 신축]



참고2

위치도 ② [목포신항 크루즈 부두 건설]



참고3

위치도 ③ [연안 크루즈 부두 건설]



○ 연안크루즈 부두 건설 필요성

- 국내에는 연안크루즈 도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선사 및 선박이 전무한 실정임
- 연안크루즈 도입을 위해서는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건설 등 기반 시설 조성이 가장 필수적인 사항임

○ 연안크루즈 부두시설 주요 거점항 현황

도서명 (면적)	방문객 수 ('18년 기준)	주요특징
거문도 (33.28km ²)	104천명	◆ 다도해의 최남단, 남해의 해금강 ◆ '동양의 지브롤터', '해밀턴섬'이라 불리우던 역사의 장소
거금도 (63.57km ²)	435천명	◆ 다리로 연결되어 육지가 된, 해안길이 아름다운 섬 ◆ 주위에 소록도, 연흥도, 허우도 등 유·무인도가 흩어져 있음
보길도 (32.99km ²)	135천명	◆ 옛 선비 자취가 물든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상록의 섬 ◆ 전복, 해조류 생산의 보고
관매도 (4.08km ²)	143천명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중 가장 아름다운 섬 선정(국토해양부) ◆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선정(신림청), 국내 가장 큰 해변 송림
흑산도 (20.03km ²)	428천명	◆ 11개의 유인도 포함 100여개의 섬들로 형성 ◆ 흥도관광 기항지, 각 섬을 연결시켜 주는 해상교통 요지
증도 (28.20km ²)	761천명	◆ 람사르습지로 지정,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 해저유물 보물섬

25.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현 황

-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권의 대규모 MICE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그에 대응한 MICE 시설 확충 시급
 -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만이 유일하게 국제 전시·컨벤션센터가 없는 실정
- 여수박람회장은 MICE 연관 시설이 기 구축되어 센터 건립의 최적지이고,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측면에서 센터 건립 절실
 - 호텔, 중·소형 컨벤션, 관광자원 등 MICE 시설이 집적되어 입지여건 우수

공 약

- 여수세계박람회장에 국제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마이스 산업 육성을 통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거점도시로 육성
 - 전시장 8,000㎡, 회의장 5,000㎡ 이상의 전문 국제회의시설 구축
 - ※ 전라남도·여수시의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연구용역 결과 B/C 1.02로 타당성이 있음

기대효과

- 지역 산업 고도화 및 차세대 신산업 육성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여수국가산단, 지역특화 산단 무역진흥 전시·홍보
 - 석유화학, 조선·해양 에너지산업 등 주력산업의 비즈니스 장 조성
- 전시 및 국제회의 육성, 산업 융복합화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 쇼핑·숙박·레저 등 연관산업 동반 성장 및 웰니스·크루즈 등 특수목적 관광 활성화

실천방안

- 예산 : 1,149억원(부지비 303, 건축비 846) * 국고지원사업 건의
 - (연차별 추정 소요예산) '20년) 36억, '21년) 557억, '22년) 556억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정부는 전시시설 건립 업무가 균특회계사업으로 '20년 지방이양 사무임에 따라 전액 지방비로 건립해야 된다는 입장
- 대응 논리(방안)
 - 타시도 국비 지원 선례에 따라 국비 지원 지속 건의 및 사업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민자사업, 공공기관 투자협력사업 등 다각적인 재원 대책 검토·추진

참고 1 전·컨벤션센터 건립 연구용역 결과

□ 수요예측

- 전라남도의 GRDP 기준으로 전시 수요면적 분석 결과, 12,112㎡의 전시 필요면적 산출 * 장기 수요예측 : '19년) 12,112㎡ → '30년) 21,597㎡

□ 시설규모

- (전시시설) 수요 분석결과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8,000㎡의 전시관 면적 확보 필요
- (회의시설) 전문 국제회의시설* 요건 충족 및 전시시설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 3,000명 수용이 가능한 5,000㎡ 시설 구축 필요

* 전시면적(2천㎡), 대회의실(2천명), 중소회의실(30명) 10실 이상 구축

구 분	용도	개수	면적(㎡)	비고
계		22	13,000	최대 26분할
전시시설	전 시 홀	1(3분할)	8,000	다목적홀(전시, 공연, 연회 등) 연회장 활용시 6,500명 수용
회의시설	대회의장	1(3분할)	3,000	2,500~3,000명 수용
	중소회의장	20	2,000	50~150명 수용

□ 부지선정 : 여수박람회장 B구역

- 산업 경쟁력을 위한 부지면적 확보 및 전시관 확장 가능성 고려

□ 운영조직

- (운영방식) 단독 법인 설립에 의한 간접운영 방식
- (조직구성) 2본부 5팀 26명

□ 재 무 성 : 최초 3년간 영업 손실 발생, 4년차부터 흑자 전환

- 센터 가동률 35%를 시작으로 매년 5%씩 증가 예상

□ 경 제 성 : B/C 분석 결과 1.02로써 타당성 있음

□ 기대효과

- 기업 홍보·마케팅의 장으로써 지역산업 육성 및 국제화 촉진
- MICE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박람회장 사후활용 극대화

참고 2 여수세계박람회장 <가칭> 다목적 해양복합센터 구축

□ 박람회장 사후활용계획

○ 추진방향 : 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

구 역(부지)	부지면적(㎡)	사후활용 계획
합 계	228,997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A,B,C,E,F,G)	83,982.6	숙박·업무시설(A), 해양형 워터파크(B, C), 스카이다워(E), 복합상업시설(F, G)
복합콘텐츠 (H,I,J,K)	101,845	국제관(H), 복합문화공간(I,J), 박물관 및 주제관(K)
해양레저 (L,M,N,O,P)	43,169.4	마리나 복합단지(L,M,N,O,P) * L, M 매각완료 (요트계류장, 클럽하우스, 교육·판매시설 등)

○ 매각부지(A, B, C) : 면적 69,163㎡ / 감정가 75,489백만원

□ 사후활용 발전전략 * 항만공사 개발로 공공기능 강화

○ 전시·컨벤션 등 MICE 산업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전시·컨벤션) COP 28 유치 등을 위한 국제규모 센터 건립
- (항만내 관광) 유람선, 항내 여객선 활용 새로운 관광 인프라 구축
- (국내연안 관광) 한려수도를 중심으로 한 연안 여객선 활성화
- (국제여객 관광) ‘한-중-일’ 3개국을 잇는 국제여객관광 유치
- (크루즈 관광) 대규모 국제 크루즈 여객선 유치 및 모항 개발

○ 여수 EXPO 정신을 계승한 해양복합관광 클러스트 단지 구축

- 장래 해양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박람회장 개발부지 확보 필요
- 박람회장 사후활용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특구 개발 추진
- 관광장래 해양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박람회장 개발부지 확보

참고 3 국가 주도 건립 건의 배경

① 지역 산업 고도화 및 차세대 신산업 육성

- 산업 고부가가치화와 지역 내 R&D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업계,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환경 조성
 - * 전남 GRDP는 '17년 기준 71조원으로 대형 컨벤션센터를 보유한 부산, 인천, 대구, 광주와 GRDP 규모와 비슷하거나 더 높음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여수국가산단을 비롯해 지역 특화 산단이 다수 위치하여 무역진흥 및 전시홍보를 위한 대형화된 공간 필요
 - * '18년 기준 여수시는 전남 내에서 가장 높은 수출규모 비중 차지(79%)
- 특히, 여수산단 내에 대표적인 석유화학기업이 다수 입지해 있어 관련 업계의 전시·박람회, 전문 포럼, 학술대회 등의 수요 확대
 - * GS칼텍스, LG화학,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한국바스프 등

② MICE 산업을 통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 남해안권 광역 관광루트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육성
 - * 365개의 섬, 리아스식 해안, 해상국립공원 등 천혜의 해양자원 보유
- 국제 및 연안 크루즈 관광 배후 시설 확충으로 크루즈 허브로 발돋움 및 새로운 관광산업 수요 창출
 - * 국제무역항 지정, 연장 692m, 15만 톤급 크루즈 부두 및 1만 5천톤급 여객선 접안

③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차원의 박람회장 사후활용 약속

- 해양의 가치를 통해 남해안 발전의 거점 조성을 통해 국가전략 차원에서 박람회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박람회장 사후활용 약속

【 박람회장 관련 문재인 대통령 발언 】

- 동서포럼 간담회('17.02.15. / 박람회장 / 후보시절 말씀)
 - 정부의 출연금 회수를 위한 조급한 시설 처분보다는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당초에 박람회를 유치했던 모든 장기적인 계획 속에 사후활용이 연계되어야 하며,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각종 해양 관련 공공기관 유치 필요
- 수산시장 방문 오찬 시('17.10.26. / 지방자치박람회 / 대통령 말씀)
 - 박람회장을 시설 매각이나 처분보다 박람회 유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활용해야 함 (배석: BH비서실장, 여수시장 등)

26.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

현 황

- 전남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당시 수군의 주 활동지역으로 이순신 관련 유적, 사료 등 문화·역사자원이 풍부
 - 이순신 관련 문화자원 : 인물(216명), 유적·유물(304건), 전승담(202건)
- 전란(7년)시 이순신의 호국정신과 지역 의병장, 민초들의 활약상을 현창하여 대 국민 호국 및 역사의식의 고취 교육장으로 승화 필요
 - 체계적인 복원·정비를 통해 역사교육·체험공간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공 약

- 왜란시 이순신의 호국정신과, 의병장·민초들의 호국 활약상을 현창하고 국민의 호국관광 콘텐츠 향유를 위해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
 - 34개사업(콘텐츠 활용 선양 4, 관광자원화 사업 21, 문화유산 복원·정비 9)

기대효과

- 문화유산 복원 및 국민의 역사유적 탐방 체험 기회 확대로 선열의 현창, 후손 예우 및 역사문화 자긍심 고취
-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역사체험 관광상품 확대로 지역관광 활성화 고양

실천방안

- 예산 : 4,867억원(국비 2,797, 도비 592, 시군비 1,478) * 국비사업 건의
 - 2020 국비 요청예산 : 49억 원. ※ 2021년 이후 2,779억 원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정부는 관광자원개발 사업이 '20년 균특회계사업으로, 지방이양사무임을 내세워 전액 지방비로 건립해야 된다는 입장
- 대응 논리(방안)
 - 훌륭한 역사 콘텐츠사업에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국비 지원이 필요하고, 국비 지원 선례에 따라 형평성 있게 국비 지원 필요성 지속 건의

참고1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사업

□ 제19대 대통령 전남지역 공약

공약명 :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	
③ 이순신 호국거점을 중심으로 한 호국·관광벨트 조성	- 이순신 장군의 호국거점이었던 광양, 여수, 순천, 보성, 고흥, 장흥, 해남, 진도, 완도, 목포 등 전남 남부해안지역을 연계해 호국·관광벨트 조성 - 부산·경남지역의 이순신 장군 호국 유적으로 확대

□ 이순신 문화자원 총조사 용역 현황

【 용 역 개 요 】	
• 사 업 명	이순신 문화자원 총조사 및 선양활용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15. 6. 15. ~ '16. 4. 9(10개월)
• 사 업 비	135백만 원(도비)
• 수행기관	순천대학교 박물관 7명 / 자문단 16명
• 용역내용	① 사료 ② 인물(216명) ③ 민간전승담(200건) ④ 유적·유물(304건) ⑤ 복원 정비 ⑥ 선양·활용

□ 이순신 문화자원 문화재 지정 현황

구분 시군	총계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 기 념 물	연 기 념 물	중 무 문 화 재	요 형 민 속 자 료	소계	유 형 문 화 재	무 형 문 화 재	기 념 물	민 속 문 화 재
계	95	18	1	5	11	－	1	－	－	77	9	－	45	－	23

□ 임진왜란, 정유재란 남도의병 인물 현황

지 역	광 주	전 남	전 북	합 계
합 계	74	904	368	1,346



27.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개 요

- 위 치 :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 일원
- 내 용 : 유적발굴, 학술연구, 마한역사문화촌 조성 등 3단계 15개 과제
- 사업비 : 6,911억 원(국 1,635, 도 634, 시군 612, 민자 4,030)
- 주 체 : 전라남도 및 11개 시군

공 약

- 마한사의 규명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 조사·연구·정비계획 수립, 관련 예산 확보, 고대역사문화권(마한) 특별법 제정 요청

기대효과

- 마한유적 674개소 중 443개소(66%)가 미발굴 상태로써 가야 등 타 고대 문화권에 비하여 국비지원이 저조하여 발굴조사가 더디고 마한 실체 규명에 어려움
- 대통령 지역공약인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유적에 대한 조사·연구·정비를 통해 고대사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 *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개발

실천방안

- 국가차원의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 조사·연구·정비계획 수립과 관련 예산 확보, 고대역사문화권 특별법 제정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 개발사업 추진 당위성
- 대응 논리
 - 영산강 유역 마한은 기원후 6C까지 고대국가로 존속한 우리 지역의 본류임
 - 비슷한 시기에 태동하여 같은 병합의 역사(마한 → 백제, 가야 → 신라)를 가진 가야(국정과제 선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굴조사정비가 미흡한 실정
 - 고대역사문화권 개발 분야에서도 지역 간 균형과 형평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필요

□ 추진 배경

- ‘마한’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에 포함되면서 관심제고
 - *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 반영
- ‘가야’는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정책적으로 국가지원을 받고 있으나 마한문화권은 지역공약으로 기초적인 유적 발굴 조사도 미흡
 - (마한) 기원전 3세기~기원후 6세기초/고분 452기/지정문화재 59개소(*국가 4, 도 52)
 - * 나주 복암리 고분군, 나주 반남 고분군, 나주 오량동 요지, 해남 군곡리 패총
 - (가야) 기원후~6세기경/고분 494기/지정문화재 87개소(국가 42, 시도 45)

【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문화재청, '19~'22, 3,360억 원) 】

- 학술연구·발굴조사 : 350억 원(국비)
- 유적 정비 : 27개소, 3,000억 원(국비 2,100, 지방비 900)
- 유적 활용 및 홍보 : 10개 사업, 10억 원(국비)

□ 마한유적 현황 <출처 : 전라남도문화재연구소(2019년)>

- 마한 유적 총 674개소(발굴 231, 미발굴 443)
 - 생활유적 : 138개소(발굴 99, 미발굴 39)
 - 분묘유적 : 452개소(발굴 92, 미발굴 360)
 - 관방유적 : 51개소(발굴 7, 미발굴 44)
 - 복합유적 : 32개소(발굴), 생산유적 : 1개소(발굴)

□ 국비지원의 필요성

- 마한고대문화권은 유적 674개소중 443개소(66%)가 미발굴 상태로써 가야 등 타 고대문화권에 비하여 국비지원이 저조하여 발굴조사 조차 더디고 마한 실체규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므로 국비지원 절실

28.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비엔날레 유치 및 육성

현 황

- 광주와 인접한 도농복합도시인 담양의 문화재생사업 역량과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를 통해 인접한 광주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및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한 문화예술행사 개최가 용이
 - 담주 다미담예술구, 원도심 문화재생 해동 문화예술촌, 담빛 예술창고등 문화예술 기반을 활용한 지역 문화예술수준 향상 필요.

공 약

- 담양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비엔날레 유치 및 문화산업 육성
 -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한 문화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상시 운영
 - 문화 교류, 교육,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연구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

기대효과

- 개발과 사업 중심의 관광 활성화 정책을 문화를 주제로 한 관광 정책으로 전환하여 도농복합도시의 새로운 관광분야 개척
 -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동력 확보 및 지역 경제활성화
 - 문화 교류, 교육, 연구를 통한 농촌 지역과 문화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실천방안

- 인근 광주의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및 광주비엔날레와의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조 및 협의 진행
 - 미술, 공예, 디자인, 조각, 건축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 자연 속 예술작품 설치를 위한 문화예술계 민간단체 섭외 노력
- 관련 인프라 확보를 위한 정부 관련 부처 예산 확보 노력 및 선진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해외 문화도시와의 자매결연등 추진

29. 전남 누정(별서정원) 유네스코 등록 추진

개 요

- 기간/위치 : 2021~2025 / 도내 일원
- 사업내용 : 누정(별서정원) 유네스코 등록 추진
- 총사업비 : 400억원(국비 280 , 지방비 120)
- 사업주체 : 문화재청, 도

공 약

- 전남의 우수한 누정(별서정원)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
 - 조선시대 3대 별서정원과 시가문화권 누정 등 전남도 주요누정(별서정원) 유네스코 등록 추진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사찰과 서원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으나 비교적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별서정원을 비롯한 누정의 세계화 필요
 - 특히 전남의 경우 담양 소쇄원, 완도 부용동정원, 강진 백운동정원 등 조선시대 3대 별서정원을 비롯하여 수많은 누정자원이 산재
 - 광주와 담양이 공유하고 있는 시가문화권에는 소쇄원, 식영정, 환벽당 등 수많은 누정이 클러스터 형성.
- 전남에 산재하고 있는 누정(별서정원)을 정비 및 관리방안 확립을 통해 세계문화유산 등록

실천방안

- 누정(별서정원)의 체계적 관리 및 지역관광자원 활용방안 마련
 - 누정(별서정원) 유네스코 등록 추진 기본계획 수립
 - 누정(별서정원) 주변지역의 경관관리계획 수립

대상지 위치 및 범위



30.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

개 요

- 기간/위치 : 2023. 4. 22. ~ 10. 22.(6개월간) / 순천만국가정원 및 도심 일원
- 사업내용 : 국가정원 리뉴얼 등 정원인프라 확충, 국제정원박람회 행사 개최
- 총사업비 : 485억원(국비 73, 지방비 145, 자체수입 267)
- 사업주체 : 산림청, 전라남도, 순천시

공 약

- (정원영역 확대) 주 박람회장인 국가정원 리뉴얼과 숲정원, 마을정원, 습지정원, 해안정원 조성으로 국가정원+도심전역으로 영역 확대
- (영역 융복합, 정원산업화) 문화·예술과 정원의 융복합 박람회, 국민이 참여하는 생활 속 정원문화 확대로 정원산업화 실현

기대효과

- 전남 정원문화의 세계화로 동북아 정원산업 중심지로 도약
-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동천, 원도심, 봉화산 등 도심전체로 박람회 행사장을 확대하여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및 도시 재생
- * 방문객 800만명, 경제적효과 13,184억원(생산유발 10,333, 부가가치 2,851), 고용유발 20,917명

실천방안

- 국제행사 최종 승인(기재부, '20. 7.) 및 국가정원 리뉴얼 등에 국비 지원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 당위성 및 성공 개최 가능성 여부
- 대응 논리
 - 전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선암사·대흥사와 조선 3대 정원인 소쇄원과 백운동 정원, 부용동 정원 등 오랜 정원 역사와 문화가 풍부하여 정원박람회 개최에 최적지
 - 전남과 순천시의 개최에 대한 강한 의지 및 국제행사 개최 경험 풍부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성공적 개최)

참고1

사업비 및 연도별 예산 현황

□ 사업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비	시설비	행사운영비				
			계	행사운영	공연·체험	홍보	초청경비·예비비 등
합 계	485	350	135	62	41	16	16
국 비	73	73	0	-	-	-	-
지방비	412	277	135	62	41	16	16

※ 지방비(412억원) : 지방비 145억원 + 자체수입(박람회 수입) 267억원

□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내역	연도별				
		계	2020	2021	2022	2023
합 계	12종	48,500	700	4,400	22,850	20,550
시설비	소 계	35,000	700	4,000	22,200	8,100
	박람회장 조성 공사	32,000	700	4,000	21,200	6,100
	박람회장간 연계도로 정비	3,000	-	-	1,000	2,000
행사운영비	소 계	10,300	-	-	-	10,300
	공식 행사	800	-	-	-	800
	국제 교류 및 문화 행사	2,000	-	-	-	2,000
	공모·학술·참여 프로그램	1,300	-	-	-	1,300
	박람회 운영 등	6,200	-	-	-	6,200
홍보비	소 계	1,600	-	-	850	750
	방송 광고·언론 홍보	600	-	-	250	350
	온라인 홍보	300	-	-	200	100
	해외 홍보	300	-	-	200	100
	홍보물 제작	400	-	-	200	200
유치	소 계	500	-	-	200	300
	국내외 유치 활동	450	-	-	150	300
	유치 활동 지원(운영)	50	-	-	50	-
기타	예비비	1,100	-	-	-	1,100

참고2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객 목표

- (목표관람객) **800만명**(내국인 768, 외국인 32)
- 방문객 수 추정방법
 - 내국인 : (18~64세 인구추계수(2023년) × 설문조사 방문 확률 × 실현율
(적극 0.755, 중도 0.314) × 의식과 행동 차이계수(0.770~0.800)) +
18세 미만 방문객 수 추정
 - 외국인 : 내국인 방문객 수 × 3%(최소 1.5%, 적정 3%, 최대 5%)

구 분			2023년	2013년
타 시 장	2023년 인구추계		51,868,100	49,162,816
	성인비율(18~64세)		35,265,657(68%)	34,536,711(70%)
내국인	18세 이상	방문의사(평균)	적극 16.6%, 중도 51.2%	적극 9.5%, 중도 29.2%
		수요예측	(최소) 6,944,240 (적정) 7,658,504 (최대) 7,936,274	(최소) 3,272,816 (적정) 3,609,448 (최대) 3,740,361
	18세 미만	자녀동반	(최소) 885,703 (적정) 976,804 (최대) 1,012,232	(최소) 630,958 (적정) 695,857 (최대) 721,095
			외국인 방문객 수	(최소) 117,449 (적정) 259,059 (최대) 447,425
종합결과			(최소) 7,947,392 (적정) 8,894,367 (최대) 9,395,934 (목표) 8,000,000	(최소) 3,962,331 (적정) 4,434,465 (최대) 4,684,529 (목표) 4,000,000

◆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객 수 : 4,403,890명

- 내국인 4,227,890명(96%), 외국인 176,000명(4%)

◆ 국가정원.순천만습지 방문객(명) 현황

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8,507,281	5,330,066	5,432,067	6,117,633	5,455,777	6,171,738

31. 흑산공항 조기 건설

개요[2017~2021]

- 위 치 : 신안 흑산 예리 일원
- 사업규모 : 총면적 547천㎡, 활주로 1,160×30m, 1,833억원
- 사업주체 : 국토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
《울릉공항》 2020. 6월 착공 목표(2025년 개항), 2020년 예산 389억원 확보
* (경제성, B/C) 흑산 4.38 > 울릉 1.19, (환경성) 울릉공항은 공유수면매립

공 약

- 섬 주민 교통기본권 보장 및 접근성 개선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흑산공항 조기 착공

기대효과

- 바다와 섬의 가치, 해양주권 보호를 위한 전진기지 구축
 - 흑산도 인근 공해상 중국어선 연 7.6만 척 조업 * 태풍시 500여척 피항
 - 동쪽 독도(해양경찰), 남쪽 제주(해군기지), 서쪽 백령도(해병대), 흑산도
- 섬 주민 및 국내외 관광객 접근성 개선
 - 연 115일(반나절 이상 포함) 선박결항(2,389세대 4,059명 고충)
 - 목포~흑산 쾌속선 2시간, 수도권 6시간→ 1시간대 항공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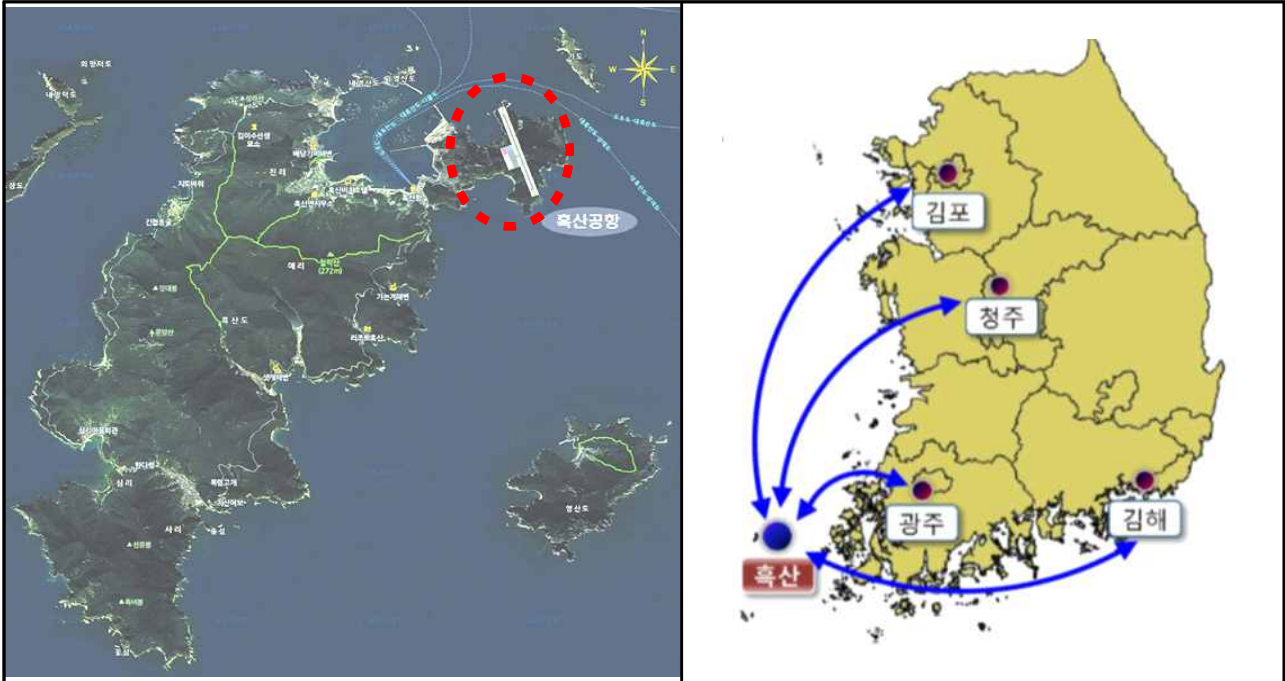
예상 쟁점 및 대응

-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문제 삼아 3년 넘게 착공 지연
 - (1안) 흑산공항 예정지 국립공원 해제 후 대체부지 지정
 - * 신안군) 대체부지 제시→ 용역 추진 중(2020. 5. 완료 예정)
 - (2안)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면제 요청
 - * 경제성 없는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준용

참고1

흑산공항 개발계획도

□ 위치도 및 항공노선



□ 평면도 및 사업규모



32. 남해고속도로(광양 구간) 선형 직선화

현 황

- 위 치 :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광양읍 죽림리 지내
- 사업내용 : 고속도로 개량 L= 4.5km * 기존 5.5km→ 4.5km(왕복 4차로)
- 사 업 비 : 1,994억 원(국비)
- 사업주체 :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공 약

- 남해고속도로 광양 구간 선형 직선화
 - 시거불량구간 개선 및 소음민원 해소를 위해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필 요 성

- 남해고속도로가 도심을 분할하여 생활권 단절 및 연계개발이 곤란하고 광양읍권의 도시 확장에 큰 장애요인이 됨.
- 고속도로 도심지 통과에 따라 심각한 교통소음 발생으로 주거도시로서의 가치하락과 주민불만 가중

기대효과

- 고속도로 차량소음공해로부터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지역을 복원하여 장래 안정적 도시발전 가능
- 도로의 선형불량과 대형차 운행비율을 분산 시키는 등 운전자 안전운행을 보장하여 사회적 비용감소를 통해 주민 복지와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

실천방안

- 국토교통부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 수립 중(2020. 10월까지)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쟁점) 고속도로는 도시가 팽창되기 이전부터 있었다. 광양시가 요구는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며, 투자대비 효율성이 낮다
- (대응방안)
 - 마산 외각도로 개통으로 2008년 “산인~창원” 구간이 남해고속도로 지선으로 분리되어 교통편익이 개선
 - 남해고속도로 경남 구간은 대부분 6~8차로로 확대되고 선형이 직선화되는 등 교통여건 크게 개선
 - 종단경사와 정지시거 등이 불합리하거나 임계점에 근접하는 등의 구조로 되어 있어 사고위험과 도심지 소음 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 가중
 - 타당성 분석결과 경제성 확보(B/C 1.08)
 - * 「남해고속도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반영 타당성용역」(광양시, 2017. 2.~7.)



33. 고흥~완도 간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

현 황

- 위 치 : 완도 고금도 ~ 고흥 거금도(지방도 830호선)
- 사업규모 : 42.4km 2차로, 9,008억원 * 1단계 약산~금일 4km 4,000억원
 - 미개설 27.4km(교량 10.2km/5개소, 접속도로 17.2km)
- ⇒ 국도 27호선 시점 연장(고흥 거금도→ 완도 고금도)

공 약

- 완도~고흥간 지방도 국도 승격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반영

기대효과

- 생태자원, 자연환경을 활용한 세계적인 서남해안 관광도로 조성
 - 해안선 6,743km(전국의 45%), 섬 2,165개(전국의 65%), 갯벌 1,044km²(전국의 42%)
- 목포에서 부산을 잇는 인프라 확충으로 인적·물적 교류 강화, 광역 경제권 형성
 - 도서지역 접근성 개선을 통해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
 - *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핵심사업

실천방안

- 국토교통부 수립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국도 승격 반영
 - 자체분석·검토→ 도로정책심의회→ 기재부 협의→노선 확정·고시(2020. 하반기)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국토교통부)
 - 국도 노선 조정 용역이 추진 중(~2020. 7.)이며, 기획재정부 협의 후 승격 결정
- 대응 논리(방안)
 - 남해안권을 국내 제4대 관광거점이자 국가 신성장축으로 육성 필요
 - 섬·해양 관광자원을 활용 침체된 국내 관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내수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참 고

국도·국지도 승격 건의대상(7개 시·도)

- 강 원 도 : 지방도 403호선 ⇨ 국지도 70호선 승격 (14.0km)
- 충청북도 : 지방도 511호선 ⇨ 국지도 96호선 승격 (29.0km)
- 충청남도 : 국 도 38호선 ⇨ 국 도 38호선 연장 (2.5km)
- 전라북도 : 지방도 716호선 ⇨ 국 도 21호선 승격 (19.7km)
- 전라남도 : 지방도 830호선 ⇨ 국 도 27호선 승격 (42.4km)
- 경상북도 : 지방도 916·924호선 ⇨ 국지도 79호선 승격 (55.0km)
- 경상남도 : 국 도 5호선 ⇨ 국 도 5호선 연장 (36.0km)

위 치 도

생명영양옴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34. 광주~고흥 간 고속도로 건설

현 황

- 위 치 : 광주~화순~보성~고흥(우주센터)
- 사업규모 : 96km 4차로, 2조 9,000억원
 - 1단계: 광주(3순환)~벌교IC(영암~순천고속도로) 43km, 1조 3,000억원
 - 2단계: 벌교IC~고흥(17.8km)~우주센터(35.2km) 53km, 1조 6,000억원
- 사업주체 :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공 약

- 광주~고흥간 고속도로 건설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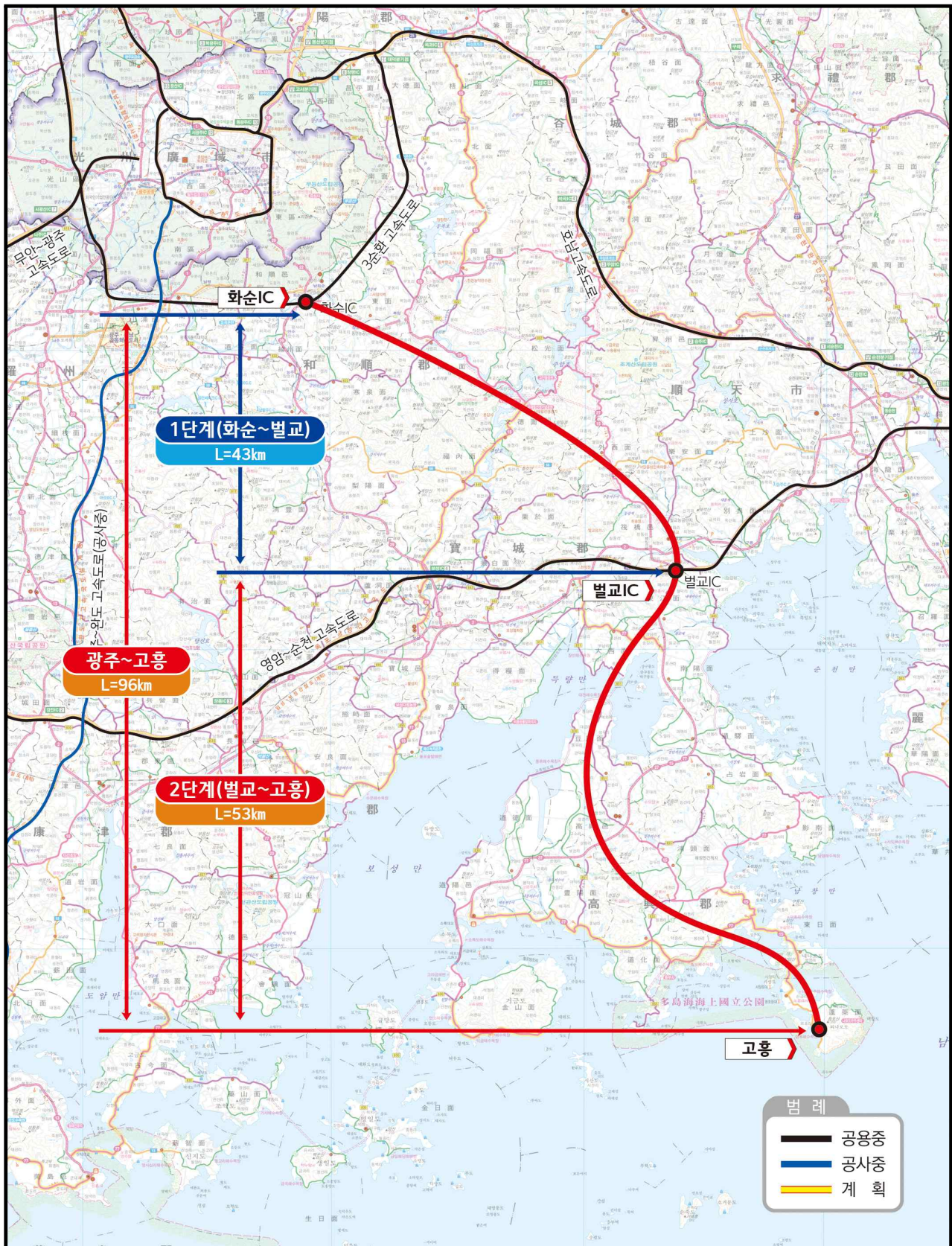
- 우주강국 한국의 전진기지인 고흥 우주센터 접근성 향상을 위해 남북측 고속도로 연결로 국토간선도로망 확충
 - 광주~우주센터 간 소요시간 33km 50분 단축(129km 120분→ 96km 70분)
- 광주권과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목포~부산) 연결 등 중남부 경제권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

실천방안

- 국토교통부 수립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 자체분석 및 검토→ 기획재정부 협의→ 계획 확정 및 고시(2020. 하반기)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국토교통부)
 - 고속도로 건설 계획 용역이 추진 중(~2020. 10.)이며, 2020년 상반기 기획재정부 협의 후 계획 반영 결정
- 대응 논리(방안)
 - 고흥 나로우주센터는 대한민국이 우주로 가는 전초기지로 접근 도로망 확충을 위한 국가 지원 절실히 필요
 - * 미국 우주센터 진입도로 : 케네디(4차로), 존슨(6차로)



35.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현 황

- 위 치: 익산 ~ 전주 ~ 남원 ~ 곡성 ~ 구례 ~ 순천 ~ 여수
- 사업규모: 180.4km, 5조 7,700억원 [160~200→ 300km/h]
- 사업주체: 국토교통부

공 약

-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 국가계획 반영 후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가능

기대효과

- 전주권 전통마을 체험, 여수순천권 해양관광객을 잇는 전라선 이용객 급증
 - 권역 내 관광객 수(년/만명) : 2016) 2,451→ 2017) 2,797→ 2018) 3,023(8%↑)
- 경부선과 호남선 고속철도에 대응하는 호남 내륙에서 남중권 해안을 연결하는 고속 대량수송 체계 구축
 - (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시 28분 단축(1시간 40분 → 1시간 12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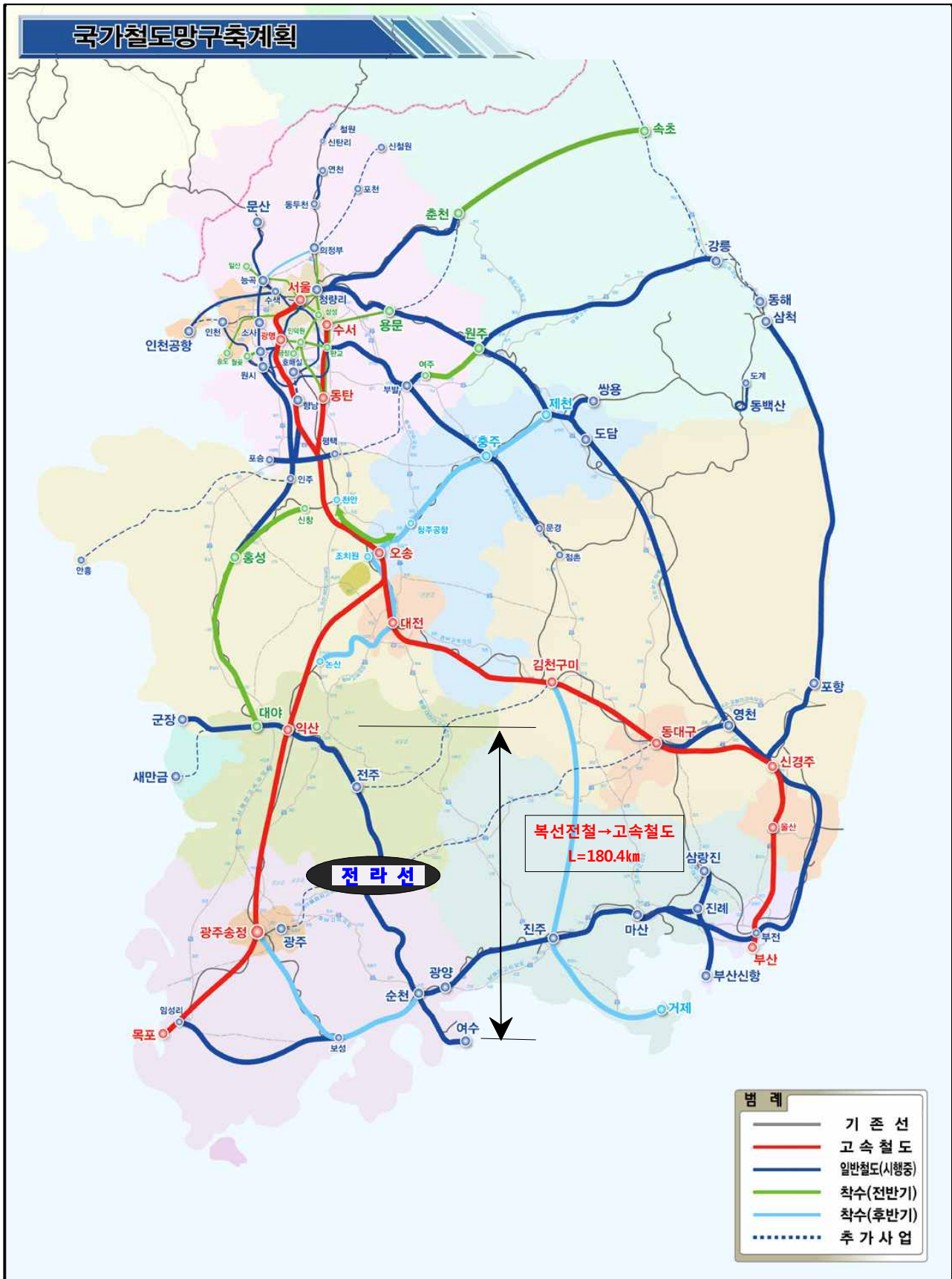
실천방안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추이에 따라 예산 반영
 - 예타 통과→ 기본계획 수립→ 총사업비 협의→ 기본·실시설계→ 착공

예상 쟁점 및 대응

- 기존 전라선 고속화로 KTX가 운행되고 있는데 신규 투자 필요 여부
 - 2012년 여수엑스포 이전 고속화 하였으나, 160~200km/h에 불과
- 전라선권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해양생태관광의 중심축으로 개발을 위해 고속철도 건설 필요성 * 국가계획 반영 선행 필요(300km/h)

참 고 위 치 도



36. 광주~완도(2단계) 고속도로 건설

현 황

- 위 치 : 강진 성전~해남 남창(완도)
- 사업규모 : 37.5km 4차로, 1조 513억원 * 전구간 88.61km 2조 5,859억원
 - 1단계 공사 중: 광주서구~강진 51.11km 1조 5,346억원(2017~2023)
- 사업주체 :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공 약

- 광주~완도(2단계)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기대효과

- 지역 거점간 연결성 향상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
 - 국토간선도로망(7×9), 남북 2축 중 유일한 미개통 구간 연결
- 광주권과 전남 중남부 내륙 및 해안 접근성 강화
 - 1단계 준공시기(2023년)에 맞추어 개통할 수 있도록 조기 착공 필요

실천방안

-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비 반영
 - 기본설계 완료(2009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설계→ 공사발주→ 착공
- 국토교통부 수립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국토교통부)
 - 경제성이 낮아 추진 어려움(1단계 완료 후 검토 필요)
- 대응 논리(방안)
 - 낙후지역에 대한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으로 사업추진 가능성 확대
 - * 수도권, 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 이원화, 지역균형발전 평가 가점 적용 등



37. 동북아 평화의 섬 하의도 연결

현 황

- 위 치 : 목포(서해안고속도로)~천사대교~하의도
- 총 연 장 : 88.4km - 해상교량 10개소(공용중 6, 미개통 4)
 - 국도 2호선 64.8km(교량 6, 공용 3), 지방도 805호선 23.6km(교량 4, 공용 3)
- 사업규모 : 해상교량 4개소* 3.51km, 3,609억원
 - * 신의~소막금, 소막금~막금, 막금~장산, 장산~자라
- 사업주체 :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 약

- 평화의 섬 하의도 연결(신의~장산) 「제5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기대효과

- 한·중·일 평화의 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육상 교통망 확충
 - 현재) 찾길 84.9km, 뱃길 3.5km, 158분 소요→ 65분으로 단축
- 김대중 정신 계승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정기)개최 기반 구축

실천방안

- 국토교통부 수립 「제5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 자체분석 및 검토→ 기획재정부 협의→ 계획 확정 및 고시(2020. 하반기)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국토교통부)
 - 국도 건설 계획 용역이 추진 중(~2020. 4.)이며, 500억 이상 사업은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계획 반영 예정
- 대응 논리(방안)
 - 김대중 대통령 생가 평화의 섬 조성 필요성이 발생하고 연결 도로망 확충을 위한 국가 지원 절실히 필요
 - 전체 해상교량 4개소 중 장산~자라* 지방도 구간 우선 시행으로 국도사업 타당성 확보
 - * 해상교량 1.45km 1,101억 원

38. 장흥 - 고흥 간 국도 77호선 노선 변경(연륙교 건립)

현 황

- 위 치 : 장흥 안양 수문리 ~ 득량도 ~ 고흥 도양 장계리
- 사업규모 : 14.0km (해상교량 10km/2개소)
- 사업주체 :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현재 득량만권에 위치한 장흥 - 고흥 녹동까지 1시간 25분 소요됨

공 약

- 노선변경(승격) 후
 - 위치 : 장흥 수문리 ~ 득량도 ~ 고흥 녹동 / 10.0km

기대효과

- 국가정책 사업 중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남해안권 관광벨트 사업의 촉진 및 서해권과 남해권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동반 성장 가능
- 장흥 ~ 고흥 간 최단거리 조성으로 해양관광 실크로드 구축 및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제고 기여
- 중남부권의 활성화를 위한 장흥 ~ 고흥 간 최단거리 교통망 구축 시급
 - 장흥 ~ 고흥도양 간 : 1시간 25분 → 14분으로 단축

실천방안

- 사업비 : 8,310 억원
 - 2020년 ~ 2030년 연간 830 억원 10회

39. 빛가람 혁신도시 역 설치 및 능주역 신설(경전선 전철화)

현 황

- 경전선(광주 송정 - 보성 - 순천시)
 - 광주 송정역에서 삼랑진역까지 이어지는 경전선은 이름 그대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유일한 철도교통망. 경전선 노선 중 영남지역은 복선 전철화 사업이 이미 완공 혹은 진행 중
 - 광주 송정 ~ 순천 구간은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이후 단 한 번도 개량되지 않은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남아 있어 영·호남 차별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음

공 약

- 광주 송정역에서 나주혁신도시와 화순을 거쳐 순천을 연결하는 전철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중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능주역 경유와 정차를 위한 노선 변경 추진
 - 2016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르면 사업노선은 광주 송정에서 혁신도시를 경유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능주역을 경유치 않는 것으로 계획 중

기대 효과

- 영·호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 기틀 마련
 - 광주 송정~순천 구간의 경전선 고속화 사업이 실현되면 경전선의 모든 구간이 시속 200km 이상 고속운행이 가능해지면서, 영·호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남 중부권 국토균형발전의 기틀이 될 것

실천방안

- 입법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철도 계획에 반영 추진
- 예산
 - 총사업비 17,055억 원(연차별 추정 소요 예산), 2019년 10억 원(예비타당성 조사), 2020년 145억 원(설계착공비), 2021년 이후 16,900억 원

40. 서해안철도(목포~군산) 건설

현 황

- 위 치: 목포~무안국제공항~함평~영광~고창~부안~새만금~군산
- 사업규모: 141.4km, 2조 3,056억원(목포~새만금 96, 새만금~군산 45.4)
- 사업주체: 국토교통부

공 약

- 서해안철도(목포~군산) 건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 국가계획 반영 후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가능

기대효과

- 경기(화성)~평택~군산~새만금 노선을 목포까지 연장하여 서해안축 및 장래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철도 출발체계 완성
- 경의선 개보수 등 서해안 경제협력축 건설 및 서해권 산업·물류·교통 벨트 구축 동참

실천방안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추이에 따라 예산 반영
 - 예타 통과→ 기본계획 수립→ 총사업비 협의→ 기본·실시설계→ 착공

예상 쟁점 및 대응

- 남북방향 호남고속철도가 건설되어 운행중에 있어, 신규 건설 필요 여부
- 남북철도망(경의선)과 중국 대륙관통철도로 중국횡단철도(TCR) 연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규 철도 건설 필요

41. 여수~남해 간 동서해저터널 건설

* 19대 대선공약

현 황

- 위 치 : 여수 상암~경남 남해 서면(국도 77호선)
- 사업규모 : 7.3km 4차로(터널 5.93km), 5,040억원
- 사업주체 : 국토교통부

공 약

- 여수~남해간 동서해저터널 건설 「제5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기대효과

- 서남해안권 광역도로망 구축으로 영호남 교류 확대, 동서화합
 - 소요시간 80분 단축(60.6km 90분→ 7.3km 10분)
- 국도 77호선 서측과 동측연결 최단 기간망 구축으로 남해안축 경제 통합기반 마련

실천방안

- 국토교통부 수립 「제5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 자체분석 및 검토→ 일괄예비타당성조사→ 계획 확정 및 고시(2020. 하반기)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국토교통부)
 - 국도 건설계획 용역이 추진 중(~2020. 4.)이며, 500억원 이상 사업은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계획 반영 예정
- 대응 논리(방안)
 -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해안 신성장 경제권 구축 필요
 - * 해안권 연계에 의한 광역관광벨트 형성, 산업 및 관광거점 연계 인프라 구축
 - 배후시장과 영향권 확대로 신규 일자리 창출
 - * 해저터널을 활용한 이용지역 확대로 해양 관광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
 - ** 물류비용 절감으로 신규 기업유치와 물류산업 활성화
 -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으로 사업추진 가능성 확대

42.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등 의과대학 설립

현 황

-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국가의 고유한 책무
 -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지역
 - * 서울 9개, 부산·강원 4개, 대전·경기·경북 3개, 기타 지역 1~2개 보유
- 의료 취약지역은 많으나, 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불균형 심각
 - 전국 유인도서 470개소 중 전남 276개(59%) 도서에 173천명 거주
 - 응급의료취약 시군은 전국 99개 중에서 전남 17개 시군(전국의 17%)
 - 1만 명당 의사 수 전국 29.7명 / 전남 25.3명(전남 의사 수 총 3,131명)
- 전국 최고의 노인인구 비율로 만성질환자가 많아 의료수요 지속 증가,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 대두
 - 65세 인구가 전국 평균(14.8%)을 크게 웃도는 21.9%로 초고령 사회 진입
 - 감염성질환·관절염·간질환·치주질환 유병률 전국 1위, 당뇨병 전국 3위

공 약

-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지역에 국립의과대학 설립

기대효과

-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 확대 및 공공의료 지속성 확보
- 교육 및 의료기반을 확보로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

실천방안

- 전남도내 의과대학 유치 → 의대정원 승인(보건복지부) 및 의대신설 인가(교육부)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의대 신설보다는 기존 의과대학에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타당성 우세함.
- 대응 논리
 - 도서벽지가 많은(전국 유인도서 60% 차지) 전남의 의료 취약 여건 등 필요성 설득
 - 교육부 주관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결과 활용
 - * (용역결과)대학병원설립 B/C분석결과 1.7로 매우높고 필요성 및 경제적 타당성 충분

참고1

전국 의과대학 현황

시 도	대 학 명	신입정원	부 속 병 원
총계	40개소	3,058명	
서울 (9)	가 톨 릭 대 학 교	93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 8개소
	건 국 대 학 교	40	건국대학교병원 등 2개소
	경 희 대 학 교	110	경희의료원 등 2개소
	고 려 대 학 교	106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3개소
	서 울 대 학 교	135	서울대학교병원 등 6개소
	연 세 대 학 교 (서 울)	110	세브란스병원 등 2개소
	이 화 여 자 대 학 교	76	이대목동병원
	중 앙 대 학 교	86	중앙대학교병원
	한 양 대 학 교	110	한양대학교병원 등 4개소
부산 (4)	고 신 대 학 교	76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동 아 대 학 교	49	동아대학교병원
	부 산 대 학 교	125	부산대학교병원 등 2개소
	인 제 대 학 교	93	부산백병원 등 5개소
인천 (2)	가 천 대 학 교	40	동인천길병원
	인 하 대 학 교	49	인하대학교병원
대구 (2)	계 명 대 학 교	76	동산의료원
	대 구 가 톨 릭 대 학 교	4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등 2개소
대전 (3)	건 양 대 학 교	49	건양대학교병원
	을 지 대 학 교	40	을지대학교병원
	충 남 대 학 교	110	충남대학교병원
광주 (2)	전 남 대 학 교	125	전남대학교병원 등 2개소
	조 선 대 학 교	125	조선대학교병원
울산	울 산 대 학 교	40	울산대학교병원
경기 (3)	성 균 관 대 학 교	40	삼성창원병원
	아 주 대 학 교	40	아주대학교병원
	차 의 과 대 학 교	40	차의과대학교분당차병원
강원 (4)	가 톨 릭 관 동 대 학 교	49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강 원 대 학 교	49	강원대학교병원
	한 림 대 학 교	76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등 6개소
	연 세 대 학 교 (원 주)	93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	충 북 대 학 교	49	충북대학교병원
충남 (2)	단 국 대 학 교	40	단국대학교병원
	순 천 향 대 학 교	93	순천향대학교병원(부천) 등 4개소
전북 (2)	전 북 대 학 교	143	전북대학교병원
	원 광 대 학 교	92	원광대학교병원
경북 (3)	경 북 대 학 교	110	경북대학교병원 등 2개소
	동 국 대 학 교	49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등 2개소
	영 남 대 학 교	76	영남대학교병원
경남	경 상 대 학 교	76	경상대학교병원 등 2개소
제주	제 주 대 학 교	40	제주대학교병원

※ 2018년 서남대학교 폐교 → 의대정원 분산(전북대, 원광대)

43.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및 기능 확대

현 황

- 사망원인 2위인 심뇌혈관질환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증가로 인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의 설립 필요성
 - 전남지역의 급속한 고령화로 심뇌혈관질환 증가추세로 우수한 의료기관, 연구 기관이 포진한 광주연구개발특구 주변에 센터 설치 필요

공 약

-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및 기능 확대
 - 정책지원, 연구개발, 임상진료를 함께 수행하는 연구소와 임상병원 복합형 설립
 - 관련 신약연구 및 의료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예방 및 재활센터 운영을 통한 관련 연구 활성화
- 지 역: 장성군

기대효과

- 심혈관센터 건립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및 심혈관질환 극복을 위한 의료 수준 향상
 - 기초, 임상 연구, 예방관리, 재활 등 표준 진료모형 개발과 보급
 - 의료산업(신약개발, 기기개발) 육성, 전문 연구인력 양성
 - 국립심혈관센터 관련 인력 상주 및 내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실천방안

-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노력
-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한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예산 확보 노력

□ 비전 및 미션

- 혁신적 국가 심뇌혈관질환 연구 환경 조성
- 국가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신모델 개발
- 희귀 난치성 심질환 관리 기반 강화
- 세계적 심뇌혈관질환 전문가 양성과 교류

□ 주요 기능 및 역할

○ 연구기능

- 국내 심뇌혈관질환 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구심적 역할 수행
- 심혈관질환의 기초·임상연구, 새로운 진단 및 치료법 개발과 보급
- 국내 심뇌혈관질환 연구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 수행

○ 진료기능

- 의료전달체계상 3차 진료기관 수준의 심뇌혈관질환 특수병원 및 의료법상 종합병원으로서의 심뇌혈관질환자 전문 진료 및 임상연구
- 심장이식, 희귀난치성 질환, 초고난이도 중재시술 등 국가적 관리에 필요한 진료 및 임상결과 도출, 연구 적용

○ 예방 및 재활기능

- 예방 및 재활관리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홍보 업무 수행
- 한국형 심혈관질환 예방 및 재활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심혈관질환에 대한 예방 기본 지침서 및 표준 생활 지침서 개발
- 심혈관질환 예방법 대국민 및 의료인 교육 및 홍보

○ 정책관리 및 기술지원 기능

- 국가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제안 기능 및 기술지원 등 총괄기관
- 국가 심뇌혈관질환 등록 사업 중추 기관 역할 수행

○ 교육기능

- 심뇌혈관질환 임상 및 연구 분야 전문인력 교육,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 병원으로서 의학교육, 지역사회 주민 대상 보건의료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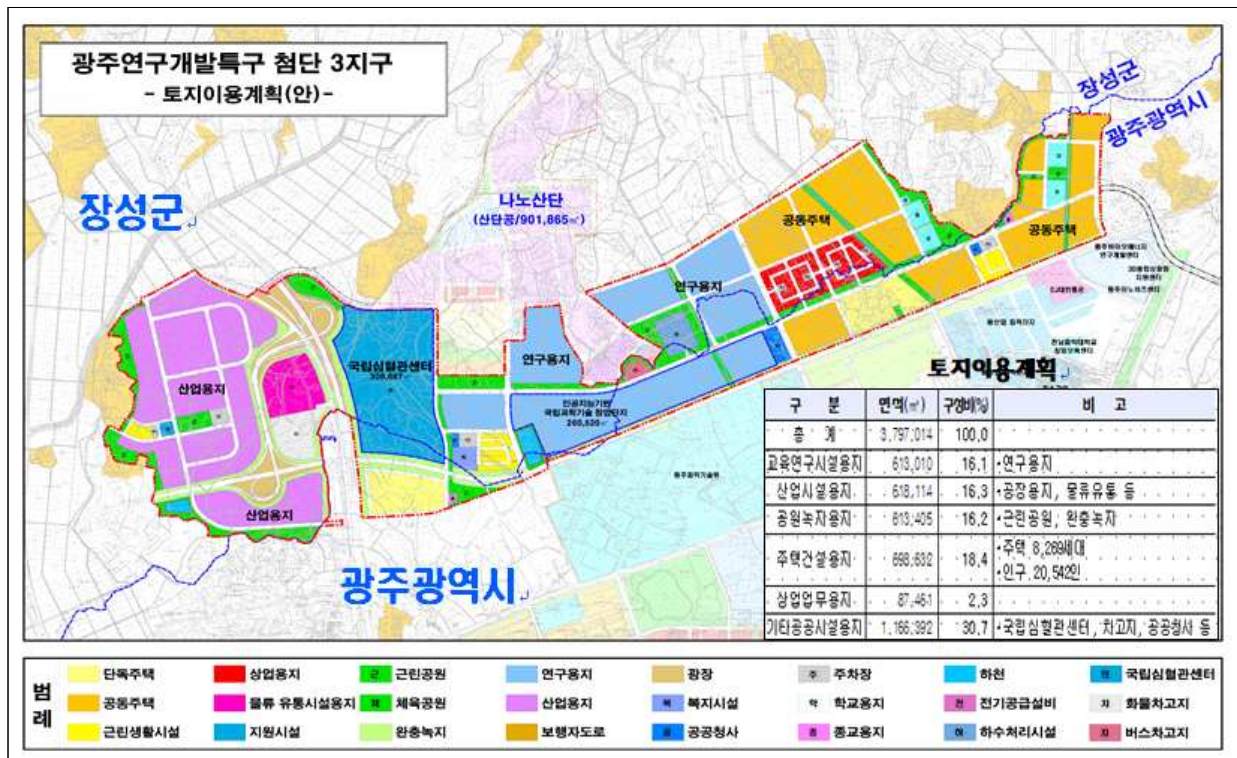
참고2

국립심혈관센터 설치 예정부지 위치도



참고3

국립심혈관센터 설치 예정부지 토지이용계획(안)



44.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 당사국 총회 개요(2022) 】

- 개최/당사국 : 매년(11월말 ~ 12월초, 2주간) / 197개국(우리나라 1993년 가입)
- 개최국 결정 : 당사국 총회 '21년말 의결(대륙 이사회에서 개최국 의결 시 승인)
 - 대륙별 순환개최 원칙에 따라 2022년은 아시아 지역 개최
 - 아시아권 COP 개최국 : 일본('97), 인도('02), 인도네시아('07), 카타르('12), 피지('17)

필요성

- 여수는 2012 여수엑스포('12.8.), 여수선언(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통해 전 세계와 해양 환경·기후 이슈를 공유한 상징적 지역
 - 해양·내륙·산악지역 등 다양한 기후특성 및 석유화학·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공존하고 있어 이슈별 맞춤형 부대행사 개최 등에 적합
- 남해안·남중권 10개 도시 공동개최*로 전남·경남 동서화합 모델을 제시하고, 국가의 위상 및 전남의 브랜드 가치 제고
 - * 전남(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 경남(진주, 사천, 하동, 남해, 산청)

공약

- 2022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를 통한 전남·경남 동서화합 모델 제시, 국가 위상 강화 및 국토 균형발전 도모

중앙부처 동향

- 환경부(2.11. 업무보고) :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추진
 - 국제환경리더십 강화 등 위해 '22년 개최되는 COP 28 국내 유치 추진
 - * 유치여부 검토(~6월)→유치의사 표명 및 협의(~11월)→개최국 확정(COP26, 11월)
- 기재부 : 국제행사 심사 결과 COP28 국제행사 심사, 선정(2.20.)

기대효과

- 기후·환경 선진국으로의 도약 및 기후 정의 실현 계기 마련
 - 경제규모 세계 12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등에 맞는 책임 있는 역할 수행
 - * 기후행동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자주의적 노력 동참(대통령 '19년 UN총회 기조연설)

실천방안

- 전남·경남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 및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경제회복의 기폭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COP28의 남해안 남중권에서 개최 가능 여부?

○ 대응 논리

- 동서화합을 통한 문재인 정부 지향 국가균형발전 실현
-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한 소도시 메가이벤트 개최 경험 보유
- 다양한 산업·문화·생태자원 및 기후 특성 보유 및 기후변화가 취약한 남해안 남중권에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방안 모색

※ 온실가스 배출량 133,3천톤(국가 총배출량의 18% 점유 / '17년 기준) → CO2 감축 핵심지역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시설요건 충족

• 회의장 시설 현황(요건 충족)

구 분	UNFCCC 기준	여수박람회장 규모	보완대책
총규모	25,000㎡	92,661㎡	
총회장	2실(각 1,600석)	-	재생가능 가설시설물 설치(2실)
회의실	30실(20~250인)	15실 보유 ※ 박람회 시설 개조를 통해 15실 추가 확보 가능	
전시 시설	150~200개	국제관, 주제관 활용(개조)	
사무실/ 서비스 구역	13,000㎡(24시간 운영) • 행정, 경호, 보안 등	국제관, 주제관 활용(개조)	

• 숙박 시설 현황(요건 충족)

구 분	UNFCCC 기준	남해안 남중권 등	추가 확보 방안
전 체	13,100실 + 2,500실(지원인력) 합 15,600실	28,685실 (1권역 18,910실, 2권역 9,775실)	
세 부 내 용	UN 관계자 600실 COP 참가자 8,000실 NGO 등 옵서버 3,500실 미디어 관계자 1,000실 VIP 2실(스위트룸 등)	(1권역) 남해안 남중권 • 전남 : 12,340실 • 경남 : 6,570실 (2권역) 반경 150km • 전남 : 4,943실 • 경남 : 3,885실 • 광주 : 947실	• 신축 중인 숙박시설 등 추가 조사 • 크루즈선박 임차 후 숙소활용 • 지원인력 숙소 별도 확보 (카라반, 아파트 등)
	지원인력 2,500실		

참 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유치 절차

□ 국내 · 외 추진 절차

- ① 환경부, 외교부의 타당성 검토
- ② 유치 계획수립 및 재정, 장소 등 여건 분석
- ③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유치 결정
- ④ 유치의향서 제출 (정부 → UN 협약사무국)
- ⑤ 현지 실사 (UN 협약사무국 → 국내 유치 지역)
- ⑥ 개최국 결정 (당사국 총회)
- ⑦ 협정체결 (당사국총회 ↔ 정부)

□ 시기별 추진 절차

‘20년 (상반기)	COP28 유치 국가계획 확정, 유치추진단 재단 법인 출범	
	전 남 도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협업 정부 건의	환 경 부 COP28 국가계획 확정 및 정부 유치단 구성
↓		
‘20년 (하반기)	국제세미나 개최 및 아시아·태평양 회원국 대상 홍보	
	전 남 도 회원국 대상 유치 홍보 전개	환 경 부 회원국 대상 국제세미나 개최 및 유치 홍보
↓		
‘20년 (12월)	COP26 개최지 참관 부대행사 개최 및 COP28 유치 홍보	
	전 남 도 한국홍보관 부대행사 개최 및 유치 홍보	환 경 부 COP 한국홍보관 개설 및 유치 홍보
↓		
‘21년 (상반기)	정부 COP28 유치 신청서 제출	
	전 남 도 유치 서명운동, 문화행사 등 홍보 전개	환 경 부 유치신청서 제출(정부 → UN사무국)
↓		
‘21년 (하반기)	COP27 개최지 참관 부대행사 개최 및 COP28 유치 홍보	
	전 남 도 한국홍보관 부대행사 개최 및 유치 홍보	환 경 부 COP 한국홍보관 개설 및 유치 홍보
↓		
‘21년 (12월)	제28차 당사국총회 개최국 선정	
	전 남 도 개최도시 평가·선정에 총력 대응	환 경 부 개최도시 선정, COP28 조직위원회운영

45.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현 황

-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19. 5. ~ '20. 3.) 진행중
 - 혁신도시 정책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전략 수립,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성과 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 등 1차 이전에 대한 성과평가 진행 중

공 약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전남도 유치 희망기관 배정
 - 1차 이전기관과 연관성이 높은 15개 기관을 포함한 23개 기관의 우선 배정을 위한 지역여론 조성 및 관련 법안 제·개정

기대효과

- 실질적인 지방 불균형 해소 및 지방의 활성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완화
 -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혁신도시 시즌2 완성

실천방안

- 입법 및 여론형성
 -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법령 제·개정(국토균형발전특별법 등)
 -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여론 형성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여부 및 타 시도 희망기관과의 중복
- 대응 논리(방안)
 - 침체된 지방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성장 자원과 밀접한 기관 이전 필요

참고

시도별 공공기관(정부기관 포함) 현황('19. 7월 기준)

▲ 시·도별 공공기관 현황 : 538개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등록 기관 339개(분원 23개 포함) + 정부산하기관 199개

소재지	기관수(공공기관/정부기관)	소재지	기관수(공공기관/정부기관)
강원도	19 (13 / 6)	세종특별자치시	28 (22 / 6)
경기도	45 (29 / 16)	울산광역시	13 (10 / 3)
경상남도	18 (14 / 4)	인천광역시	11 (7 / 4)
경상북도	20 (11 / 9)	전라남도	26 (14 / 12)
광주광역시	8 (5 / 3)	전라북도	21 (10 / 11)
대구광역시	23 (16 / 7)	제주특별자치도	13 (5 / 8)
대전광역시	55 (42 / 13)	충청남도	20 (7 / 13)
부산광역시	33 (23 / 10)	충청북도	26 (13 / 13)
서울특별시	159 (121 / 38)		

수도권 215개(40%), 충청권 129개(24%), 영남권 107개(20%), 강원권 19개(3%), 호남권 55개(10%)

▲ 혁신도시별 1차 이전 공공기관 현황 : 113개

소재지	기관수(공공기관/정부기관)	소재지	기관수(공공기관/정부기관)
강원 혁신도시	12 (11/1)	울산 혁신도시	9 (8/1)
경남 혁신도시	11 (10/1)	전북 혁신도시	12 (5/7)
경북 혁신도시	12 (6/6)	충북 혁신도시	11 (10/1)
광주·전남 혁신도시	16 (14/2)	제주 혁신도시	6 (1/5)
대구 혁신도시	11 (9/2)	부산 혁신도시	13 (11/2)

※ 1차 이전 시 총합은 정부기관 6개, 세종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19개 이전

46. 인구소멸지역 지원 및 특별법 제정

현 황

- 전남도·경북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대 구성
-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법안 마련 연구용역 발주(전남도·경북도 공동)
 - (수행기관) 지방행정연구원 / (수행기간) 2020. 2.~7월 / (소요예산) 100백만원

공 약

-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방의 활력증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을 담은 「인구소멸지역 지원 및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정부의 저출산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인구 유출 및 감소세는 커지고 있어 농촌지역은 인구 소멸 우려 심화
- 인구 문제에 대응한 국가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 활력 증진 도모로 인구문제 극복 기반 마련

실천방안

-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법안마련 연구용역 실시('20년 본예산 반영)
 - 국가 인구정책 아젠다 설정과 정책방향 및 실효적 지역활력증진 법안 제시
 -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법안 공론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기존 규정과 구분되는) 지방지원 특별법 제정 당위성
- 대응 논리
 - 지방의 인구 지속 감소 및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역 간 불균형 심화
 - 지방은 고령화·공동화로 소멸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부재
 -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한 인구소멸지역 지정 기준 및 지역발전정책 방안의 합리적 도출

47. 친환경 하상주차장 건설

* 전남도당 정책페스티벌 최우수

현 황

- 3년 연속 1300만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원도심 주차공간 부족
- 주차난으로 거주민 및 관광객 불편 심각
 - 원도심 공동화 및 시민/관광객 전통시장 방문 기피 초래

공 약

- 친환경 하상 주차장 건설

기대효과

- 부지확보 어려움 해소로 원활한 공영주차장 확충
-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유도
- 관광 만족도를 높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도시 이미지 질적 향상

실천방안

- 입법
 - 건축법 : 주차타워 높이 8 m 이하는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
 - 하천법 : 하천점용허가 득하면 공작물 축조 가능
- 예산
 - 현재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의 50% * 건립비: 1면당 40~50백만원
 - 국비확보 방안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사업(국비 50%, 지방비 50%)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국비 60%, 지방비 40%)

예상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현재 하상주차장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 하상주차장으로 인한 생태계 악영향
- 대응 논리(방안)
 - 높이 8 m 이하의 주차타워는 공작물로서 하천점용허가 득하면 설치 가능
 - 하천 점용허가는 하상주차장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면 가능
 - 하상주차장은 완전 복개가 아닌 햇빛과 수류소통이 원활한 친환경 시설로 주차시설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김원이 후보자 대표 공약

1. 100년 역사 목포역을 시민광장으로
2. 목포를 근대역사문화의 특구로
3. 목포, 신안을 세계 섬의 수도로
4. 명품 교육, 보육도시 육성
5. 3대 개혁입법과 유달정담

1. 100년 역사 목포역을 시민광장으로

현 황

- 1913년에 만들어진 목포역은 지난 2004년 호남선 복선화 사업 때 목포 관통구간에 대한 지하화 이뤄졌으나 목포역 구내 1km 구간(면적 6만여평)에 대한 지하화가 진행되지 않음.
- 「110년 동안 목포역 부지는 목포 중심부의 단절을 고착, 심화시켜 목포시 재편의 걸림돌이 됨.

공 약

- 목포역 지하화를 통한 원도심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 이를 목포 도심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
- 지상 6만평 부지에 시민의 의견을 들어 가칭 ‘유라시아 시민광장’을 조성, 목포역 부지를 시민에게 110년 만에 환원. 목포역 광장을 목포 민주화 운동 기념광장으로 조성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철도 재생을 통한 원도심 대개조’라는 테마로 목포역 역세권 상권 활성화와 지하주차장 건설로 원도심 교통난 완화
- 오는 2025년 목포-송정간 KTX 완전 개통에 맞춰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신 목포역사를 건설해 목포 랜드마크로 조성

실천방안

- 중앙정부 부담으로 지하화 등 소요예산 : 1천억원 (조달은 이미 지난 2016년 용산~가좌역 구간 6.3km 4500억 투자된 경의선 지하화 사업을 전액 국비로 진행한 선례가 있고 부산역 지하화 역시 국비를 전제로 진행 중)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임성역 활성화
- 대응 논리 : 목포역 지하화에 따라 기존의 목포역내 철도 정비장은 임성역으로 이전해야 함. (철도시설공단) 임성역은 호남KTX, 임성-보성간 그리고 부산을 잇는 남해안 고속철도의 기점으로 임성 역세권 개발 필요.

2. 목포를 근대역사문화의 특구로

현 황

- 현재 목포 원도심 재생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근대 문화유산 보전 발굴, 노후 근대 역사 건조물 재활용, 지역 문화 공간 활용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공 약

- 근대역사문화특구 지정
 - 19세기와 21세기의 문화가 공존하는 우리나라 근대역사문화유산의 보고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근대역사문화특구로 지정. (지난 2017년 대전시가 ‘근대문화예술특구’가 지정되었음)
- 원도심 활성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 목포 원도심에 체험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동북아의 근대문화와 바닷가의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
- 원도심 관광 트램 설치
 - 트램은 관광자원 및 원도심 주민 교통수단으로 활용

필요성 및 기대효과

- 4대 관광거점도시, 슬로우시티 지정 등과 연계하여 근대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

실천방안

- 근대역사문화특구 지정 - 2020~2025년까지 소요예산 : 500억
- 원도심 활성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2025년까지 추진, 10억원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트램 설치에 따른 교통문제
- 대응 논리 : 원도심 일부구간 차량통제, 일방통행, 지하주차장 확보를 통해 차없는 도시, 슬로시티로서의 면모를 보여 줄 것임. 단계별로 확대하여 목포의 원도심과 신도심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음

3. 목포, 신안을 세계 섬의 수도로

현 황

- 국가 섬의 날 제정(8월 8일) 으로 국민의 섬으로 인식이 확산·전환되고 있으며, 섬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에 걸 맞는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공 약

- ‘국가 섬 발전 진흥원’ 설립 및 목포 유치
 - 섬 정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국가 섬 발전 진흥원 유치
- ‘목포 섬 마을 재생사업’ 추진(고하도, 울도, 달리도, 외달도, 장좌도)
 - 울도항 어촌뉴딜 300사업, 달리도·외달로 슬로우 아일랜드 조성사업 추진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국가 섬 발전 진흥원’ 설립 및 목포 유치
 - 섬관리에 대한 중앙정책부서의 일원화 및 정책전담부서의 업무체계 보강
 - 섬을 대상으로 조사·연구하고, 산업육성을 지원하며, 교육·컨설팅·교류연수·이벤트개최·국제협력 등의 역할 담당
- ‘목포 섬 마을 재생사업’ 추진
 - 목포의 섬마다 가진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의 과학적 모니터링을 기초로 한 시민이 참여하는 인식증진·숙박·체험·관광·마을기업·특산물 특화사업 등이 함께 추진되어 목포의 섬에 머물다 가는 <시민이 행복한 체험형 관광 선순환 모델>을 구축
 - 마을 개선, 탐방로, 체험시설 등이 다양한 시설이 설치될 예정임.

실천방안

- ‘목포 섬 마을 재생사업’ 추진(고하도, 울도, 달리도, 외달도, 장좌도)
 -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2025년까지 추진, 50억원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유치경쟁 치열
- 대응 논리 : 목포 신안 경제 통합의 상징, 신안군과 공동 추진

4. 명품 교육, 보육도시 육성

현황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지식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지금 우리사회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요구받고 있음.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우리 학생들은 미래핵심역량 교육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로 키워야 함
- 목포의 중·고등학교는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어 많은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

공약

- 목포대학교 의대 유치
 -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을 유치.
- 옥암 부주동 고등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환경개선
 - 옥암, 부주 지역에 5천 평 정도의 부지가 확보 가능한 상태
 - 학교 신·이설 문제는 주민, 동문들의 합의가 필요함. 교육청과 주민들의 지혜를 모아 신도심에 명문 고등학교를 육성
- 4차 산업혁명시대 AI 융합교육 실현
 - 구 청호중 부지에 전남창의융합복합센터를 추진하고, 모든 초등학교의 컴퓨터교실을 AI 융합 교실로 변환 추진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신도심 고등학교 이설로 통학에 따른 불편 해소
- 전남창의융합복합센터 설립을 통해 창의적 융합교육 실현

실천방안

- 고등학교 이설의 유달정답의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하고, 동문과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이설 합의, 국가 예산 지원 확보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인구감소로 인한 고등학교 신이설이 쉽지 않음
- 대응 논리 : 공립고등학교 이설을 통해 명문고등학교 육성

5. 3대 개혁입법과 유달정담

현 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기본법으로서 위상을 확립했고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분권시대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 하지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이 여전히 제한적이고 재정분권도 미흡한 수준.
-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됐지만 국민은 국회의 모습은 변한 게 없음. 특히 각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소위를 매달 2번 이상 개최한다는 것을 못 박고 있지만 여태 이를 이행하는 상임위는 없음.
-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면 확대 등의 변화 추세에 맞게 관련 시행 절차 등을 일원화하는 법적 제도적 현안을 담은 내용과 함께 에너지 개발 이익에서 시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사업 초반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함.

공 약

- 지방분권 관련법 추진
- 일 잘하는 국회법 제정
- 서남해안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주민이익공유 특별법 제정
- 공론의 장 ‘유달정담’ 추진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정부와 시민에 나누어 주는 시대의 흐름을 제도화.
- 직접민주주의의 강화

실천방안

- 임기 내 3대 입법 실현하고, 온오프라인 유달정담 통해 공론의 장 확대

주철현 후보자 대표 공약

1. 전국 최초 해양관광공사 설립 및 여수유치
2. 여수항, 해상물류 동북아 거점항 육성
3. 연등천 도시재생, 원도심 활성화 기반 마련

1. 전국 최초 해양관광공사 설립 및 여수유치

현 황

- 세계관광기구(UNWTO), 세계관광시장 최근 10년간 연평균 4.3% 성장세 기록
 - 미국·유럽시장은 13%p 감소한 반면, 아시아·태평양시장은 11%p 증가
 - 전체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의 비중은 약 50%로 추정
 - ‘미래 10대 관광 트렌드’ 중 해변, 스포츠, 크루즈 등 6개 해양관광 관련
- 국내 해양관광 경험률은 2018년 대비 2019년은 증가
 - 해양레저 및 스포츠 관광이 가장 크게 증가(23.4%)

공 약

- 국내 해양관광분야 총 망라한 전담기관 ‘국립해양관광공사’설립
 - 국내해양관광개발 / 해양관광 홍보·마케팅, 투자유치 등 역할
 - 국제해양관광 네트워크 구축, 해양관광 교육을 통한 활성화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전국 최초 국립 해양관광공사 설립 및 여수 유치를 통해 여수시 해양관광도시로써 제2의 도약기 발판 마련과 여수를 국내 해양관광 메카로서 위상 제고
- 해양관광분야,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하위 조문(‘제28조 해양관광의 진흥’)에 속해 법적기반 미약, 해양관광분야의 종합적인 개발과 추진이 부진한 상황
-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광·해양분화해 전담기관은 있지만 해양관광을 통합 전담하는 기관은 없는 실정
- 여수 경제유발효과 및 고용창출, 해양관광 연관사업체 유입효과 극대화
 - 취업유발효과(10억원당 취업자수) : 서비스업(7.3), 제조업(8.8), 관광업(18.9)

실천방안

- (가칭)해양관광진흥기본법을 입법 추진을 통해 법적기반 마련
- 법안 마련을 통해 ‘해양관광 전담 기관(공사)’을 설립 근거 마련
- 법적 설립 근거 마련을 통한 전국 최초 한국해양관광공사 여수 유치 및 설립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국내 지역별 경쟁적 해양레저·관광시설 조성하나, 주제나 구성의 차별성이 적어 랜드마크로 부각되는데 한계 및 각 지역별 유치 가열 예상
- 대응 논리
 - 국내 해양관광 트렌드로 접하기 어려운 수중레저, 마리나, 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해양레저관광 수요 증가로 시장 성장에 대한 전문성 확보 필요
 - 기관의 역할에 맞춰 상징적 지방에 설립해 지방 경쟁력 제고

2. 여수항, 해상물류 동북아 거점항 육성

현 황

- 여수항은 광양컨테이너부두, 해상의 지리·지형적, 아시아 최대의 석유화학산단 등 한·중·일 동북아 해상물류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최적지
- 여수 오일허브코리아, 동북아 오일허브시설을 목표로 820만배럴 석유류 저장시설 갖춘 국내 유일 상업은행 중인 국책사업
 - 2013년부터 8년 동안 저장시설 의무 임대 2021년 끝
- 선박 대형화(세계 유조선 선복량 40%가 VLCC급임), 해상환적 Hub항 구축 필요
 - 최근 15년간(2004~2018년) 해상환적 물동량 8038만 6천톤, 총 3188건
 - 국내 여수항 전체 67.8%, 여천항 27.5%, 울산항 3.2%

공 약

- 여수항 동북아 해상물류의 거점항 육성 및 해상환적 거점 해역 지정·육성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울산은 북항(1단계)과 남항(2단계)에 여수 3배 규모 석유화학산업 클러스터에 대규모 상업용 탱크터미널 2014년부터 건설 계획 및 착수
- 한·중·일 3국간 해상환적 수요 증가와 지속적인선박 대형화 추세 등 환경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상환적 거점 해역 지정 필요
- 중동원유 여수항에서 환적 후 중국 산둥지역과 일본으로 보내는 수요 증가
- 사할린원유 여수항에서 환적 후 중국·태국·싱가폴·호주·미국으로 보내는 수요 증가
- 선박입항료, 접안료, 예도선료, 급유, 선용품비 및 선박수리비, 선사대리점 수입
- 환적화물 증가로 해운항만분야 활성화, 항만배후단지 등 연관산업 발전 및 고용창출
- 하역수입과 야간·휴일 할증, 냉동·냉장보관, 위험물 할증 등 부대 수입발생
 - 연간 최소 23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 수준

실천방안

- 세계3대 오일허브 ‘싱가포르’ 여수의 롤모델 벤치마킹
 - 상품거래소(공급자), 금융·보험·중개소(소비자) 부대 서비스 시장 준비
- 국토부 해사안전법(2절, 3절) 교통안전특정해역 해제

- 개항질서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법률·해양환경관리법·항만법 개정
- 해상환적 Hub항으로 지정 및 제도개선 시 Hub항 주변 어업환경조사 정부의무포함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해상환적 시 해상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안정성 문제
 - 울산지역 오일허브사업 확장에 따른 지역간 견제
- 대응 논리
 - 해상환적관련 선박오염방지규칙 개정,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으로 업그레이드
 - 국제석유회사해사평의회 STS GUID 2005 참고 해양환경관리법 해상환적 규정 2013으로 보완
 - 여수 오일허브 상영운영 및 시설 의무사용기간 2021년 종료에 따른 활성화 필요성 주장

3. 연등천 도시재생, 원도심 활성화 기반 마련

현 황

- 도심 가로지르는 하천은 역사적으로 도시발전과 문화형성에 중요한 역할 함.
- 2013년 9월 국토부, 여수 인구·사업체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도시쇠퇴 진행 중으로 진단
 - 인구감소 및 산업침체 등 국내 230개 시·군·구 166개 쇠퇴진행 중
-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 수립(5년 마다 변경가능)
- 전국 지자체 마다 하천정비사업 추진, 지역 활성화 및 도시재생 측면에서 종합적인 접근 미흡
 - 정부 국정과제 도시경쟁력 강화 및 도시재생뉴딜·하천정비사업 연계방안 필요

공 약

- 여수 원도심 연등천 중심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제도적 근거마련
 - 도시재생특별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사업에 도심 하천정비사업도 포함
- 제도정비 후 연등천 도시재생사업 시범사업 선정, 원도심 재생과 단계적 연계 개발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파편화 된 원도심의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가능
- 여행객 이동 동선, 해양공원~이순신광장~음식문화의거리→교동 및 서시장까지 연계
- 연등천 중심의 원도심 내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

실천방안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천법 등 관련법 개정
- 도심 지방하천의 지구지정 의무화
- 하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한 종합계획 수립
-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반영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하천과 도시지역 사업 연계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하천정비사업은 관련 법·제도 및 지침상에 하천 본래의 기능인 방재에 치중하는 내용만 제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위한 수단제공하지 못함.
- 하천 수변공간의 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하천기본계획, 하천공사시행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시설계획의 수립과정은 관계기관 협의라는 포괄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천과 도시간 연계에 한계

○ 대응 논리

- 하천법 44조의 지구지정을 의무사항으로 개정, 수변공간연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근거 마련
-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구역설정 및 사업계획과 연동해 하천을 방재시설이 아닌 도시와 유기적 연관 공간으로 재생.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하천정비사업 예정지 포함, 도시재생사업 구역설정 및 사업방향 결정

김회재 후보자 대표 공약

1. 『여수산단환경부담특별법』을 제정
2. 『여수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3. 해양레저휴양특구로 지정. 품격있는 문화예술관광 휴양도시
4. 지역거점 종합병원을 유치
5. 남해안권 신성장의 핵심 (메타클러스터조성)

1. 『여수산단환경부담특별법』을 제정

현 황

- 수입재정확대를 통해 여수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여수산단환경부담특별법」 법안 마련 연구용역 발주(국가산단지역 공동)
(수행기간) 2021. 01.~12월 / (소요예산) 100백만원

공 약

- 세법개정을 통해 여수 산업단지가 납부하는 국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세(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고 『전라남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서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의 수입재정을 확대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확보된 추가 재정으로 환경오염 연구기관, 교육, 육아, 문화, 복지, 의료, 생활 환경시설 및 SOC 등 삶의 질 향상 분야에 투자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고 미래 희망이 커가는 여수시를 만들겠습니다.

실천방안

- 「여수산단환경부담 특별법」 법안마련 연구용역 실시('21년 본예산 반영)
 - 지방재정자립의 정책 아젠다 설정과 정책방향 및 실효적 지방자치 활력증진 법안 제시
 -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법안 공론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기존 규정과 구분되는) 중앙정부 특별회계로 『지역환경부담특별교부세』 제정의 당위성
- 대응 논리
 - 특별교부세의 지역실정에 맞는 현실성 필요
 -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한 국가산단지역의 공동대응과 지역발전정책방안의 합리적 도출

2. 『여수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여수시가 혁신산업의 세계적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황

-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분야의 단일성(석유화학정제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국제유가와 수출품의 한계 및 지역일자리 창출 미흡으로 인한 신성장 첨단신소재산업으로 산업구조전환의 필요성 대두

공 약

-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첨단신소재산업 및 초연결 지능형 제조업 단지를 구축, 울촌산단 배후도시를 조성하여 산업구조 전환의 성공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국고지원 확대, 산업용지 반값공급,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제고.
- 지역인재 의무고용비율 확대, 다자녀우대 등 현재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배 확대.
- 여수산단노동자건강복지센터 설치, 작업복 세탁소와 샤워시설 등을 확충하여 노동환경개선.

실천방안

- 「여수산단 특별법」 제정마련 연구용역 실시('21년 본예산 반영)
 -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법안 공론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여수산단특별법』 제정과 관련 국가산단지역의 공동대응
- 대응 논리
 - 국가산단지역의 공동대응(예산 및 공동연구진행)
 -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한 국가산단지역의 공동대응과 지역발전정책방안의 합리적 도출

3. 해양레저휴양특구로 지정. 품격있는 문화예술 관광 휴양도시

현 황

- 관광증대를 통한 소득향상 효과가 여수시에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분야와 지역에서 투자와 소득향상이 활성화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특구지정을 추진

공 약

- 지질적 특성이 뛰어나고 자연환경이 수려한 섬 및 연안 지역인 여자만 등이 세계적인 생태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세계 자연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생태예술명소로 발전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해양스포츠를 발굴 육성하여 세계적인 해양스포츠 도시로 발전

실천방안

- 여수지역 연내 방문관광객 1,300만. 해양관련 다양한 체험시설 설치 및 해외 여행객들을 위한 맞춤형 관광시설 및 품격있는 문화예술 공연장 유치
 - 다양한 체류형 관광상품 및 문화예술 공연, 전시 가능한 융·복합 도시건설
 -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법안 공론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여수시 행정과의 협의와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 및 중복
- 대응 논리
 -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기본계획 순차적 반영
 - 세계자연유산등록으로 주변지역개발 여건변화 홍보

4. 지역거점 종합병원을 유치하여 여수시민의 의료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아플 때 치료가 쉬운 도시』

현 황

- 국가산단 내 응급치료를 요하는 화상환자 및 코로나19처럼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한 전문공공의료시설 부족과 시민의 의료복지혜택의 필요성 절실

공 약

- 중증질환 진료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을 유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응급질환센터, 산업재해 치료센터, 감염관리기관 등을 확충하여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

실천방안

-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 여수시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이행절차 및 기간 : 보건복지관련 예산확보 및 민간의료기관 공공재 전환 2020~장기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의료진의 주거교육환경문화 개선 및 지역의료계 반발
- 대응 논리
 - 인근도시와 대학병원 공동유치
 - 공공의료 전문병원 및 지역 산단 내 화상병원 등 전문의료기관 유치

5. 여수를 남해안 중심도시로 성장시켜 남해안권 신성장의 핵심 축으로 발전

☉ 현 황

- 서부경남 KTX 개통 확정과 목포-부산 KTX 추진 등으로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여수를 남해안권 신성장의 핵심 축 역할필요.
- 크루즈항만을 이용한 동북아 관광거점 및 MICE 산업 전진기지화

☉ 공 약

- 전남 동부권역, 경남 서부권역이 하나 되는 행정, 문화, 산업, 관광 등 메타클러스터 프로젝트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여수를 핵심거점으로 설정하고 남중권 권역과 함께 발전하는 메타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추진

☉ 실천방안

- 남해안 경제권 활성화에 대비하여 지역적으로 중심에 위치한 여수시가 남해안 경제권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교통, 교육, 첨단산업, 서비스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기존 행정협의체와 업무 중복 및 공동예산확보의 어려움
- 대응 논리
 - 동일한 문화, 역사성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부분에 맞는 현실성있는 개발
 -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한 지역발전 정책방안의 합리적 도출 및 공동대응

소병철 후보자 대표 공약

1. 전남 동남권 의과대학 설립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3차 대학병원급) 기능 보강·확대
2. 순천 시민참여형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3.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법」 제정
4. 전라선 고속화 및 수도권 2시간 생활권 구축
5. ‘순천형’농업혁신과제 실현

1. 전남 동남권 의과대학 설립 및 권역응급의료센터(3차 대학병원급) 기능 보강·확대

현 황

- 전남 동남권에는 전남 전체 인구의 1/3 가량의 많은 인구가 밀집해있음에도, 특히 전남 지역에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임
- 전남 동남권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성 가톨릭병원’이 있으나, 2차 종합병원으로서 진료 능력에 한계가 있어 3차 종합병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 순천시는 2015년 8월 의료기관 부지 7만5,468㎡(2010년 당시 조성원가 362억원)를 무상으로 이전받아 보유 중임

공 약

- 전남 동남권 국립 의과대학 설립
- 권역응급의료센터(3차 대학병원급) 기능 보강 및 확대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전남 동남권 지역 시민들의 건강권 및 의료 공공성 강화는 물론 현대제철 순천공장,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수 국가산업단지 등 여러 산업단지의 산업재해 특성상 높은 의료 능력 향상을 통한 동남권 주민의 생명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실천방안

- 당·정·청·지자체 협의를 통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국비 지원 유치
 - 보건복지부(의대 정원 승인)와 교육부(의대신설 인가), 전라남도 및 순천시(신대지구 병원 설립 추진), 전남 동남권 의원 및 기초단체장과의 협업 체계 구축, 공동추진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결과 B/C가 1.7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
- 대응 논리
 - 전남 동남권(순천·여수·광양)의 인구는 73만¹⁾으로 전남 서남권(목포·해남·영암·무안·완도·진도·신안)인구 55만을 크게 상회하는 만큼 보다 높은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될 것임

1) 국가통계포털 KOSIS, 2020년 2월 기준

2. 순천 시민참여형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 순천시는 2015년부터 성공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향동과 중앙동은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됨
- 순천 구도심은 東에는 1930년대부터 개발된 순천역 일대(덕암동), 北으로는 전통시장인 옷장(동외동), 南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5일장인 아랫장(풍덕동), 西에는 저전동이 위치함.
- 순천역은 전남 동남권 교통의 요지로서 2017년 기준 연 이용객 230만 명이상이 방문하는 곳으로, 순천역 일대를 비롯하여 구도심의 혼잡도 상승으로 도시재생 사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공약

- 순천 구도심(순천역 일대 ~ 옷장 ~ 아랫장 ~ 저전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순천 구도심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 도시의 재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잦은 교통정체 해소, 전통시장 현대화, 주거복지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함

실천방안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 및 조기 착공 추진
 -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순천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및 조기 착공 추진 및 당·정·청 협의를 통한 예산지원 추진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며, 따라서 주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성패의 관건임
- 대응 논리
 - 순천시 및 순천시 의원, 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순천시 구도심 재생사업’ 주민 정례간담회(토론회) 월 1회 추진, 주민들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고 시민참여·주도형 재생사업으로 추진함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계획 초창기부터 방지책을 마련하고 상생과 협력의 자세로 지역 주민이 만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속도 있게 실행해 나감

3.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법」 제정

현 황

- 순천시는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 신규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으며 국가정원 1호로 등록되는 영예를 얻음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개최지역을 10년 전보다 더 확장하여 순천시 도심 전역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

공 약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순천시의 관광자원 확대에 의한 전남 동남권 방문 관광객 수 향상, 국토 균형 개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실천방안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한 예산 및 정부 지원 확대
 - 중앙당 및 전남도당 소속 의원과 법안 통과 논의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박람회 기금 설치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특정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국가재정건전성 저하로 이어지는 않는지의 문제
- 대응 논리
 -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455억 원(시예산 1,603억 원)²⁾이 소요되었으나 생산유발효과는 1조 1060억이라는 높은 성과를 냄으로써 순천시가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국제관광지로 발전한 원동력이 되었음
 -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에 없던 ‘정원’이라는 관광자원 개발 등 긍정적 결과로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됨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더 높은 생산유발효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임

2) 이정록,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책화 과정과 동인에 관한 연구」, 2014.

4. 전라선 고속화 및 수도권 2시간 생활권 구축

현 황

- 2011년부터 전라선(익산 ~ 여수) KTX가 운행되고 있으나 일반철도 노선을 이용하여 평균 속도 160~200km/h에 불과, 용산발 KTX 기준 평균 2시간 30분 이상 소요됨
- 남부내륙고속철도(김천 ~ 거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음에 따라 2028년 기준, 순천·여수만 전국 2시간 생활권에서 소외될 것으로 예상됨

공 약

-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및 수도권 2시간 생활권 구축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순천시는 2017년 기준 방문자 수 907만 명, 순천을 포함한 전라선 권역 내 관광객 수 2,797만 명으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이후엔 방문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함

실천방안

- 「전라선 고속화 구성을 위한 특별협약체」 구성
 -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전남·북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는 만큼, 협약체 구성을 통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추진함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예비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의 문제
- 대응 논리
 - 예비타당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충북선 고속철도,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이 면제됨
 - 국토교통부는 2019년 10월 보도 자료를 통해 앞으로 ‘도로->철도’로 교통정책의 중심을 이동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5. ‘순천형’ 농업혁신과제 실현

현 황

- 한·미, 한·중 FTA와 같은 대외적 요건 및 한국인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농산물 소비 패턴 변화 등 대내적 요건으로 농업인 가구의 작물 안정성 및 수익성 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공 약

- 농업인·청년 농업인 역량 강화 - 혁신농업인센터 건립, 스마트 농업인 육성
- 유통 혁신 - 전통시장·자영업자를 위한 해외 전자상거래 입점 지원, 농산물 유통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
- 소비 혁신 - 도농상생 협력모델 및 순천형 로컬 푸드 자립화 지원
- 생산 혁신 - 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 건립, 친환경 농산물 재배 지원,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원예농업, 스마트 팜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불황작물 구매와 같은 현금성 지원보다 농민들의 지속적인 활로 모색을 위한 순천형 농업혁신과제 실천으로 안정적 농업혁신모델 제시함

실천방안

- 국회의원·시청·시의회·도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순천시 농업인을 위한 원 팀(One Team) 구축으로 다방면에 걸쳐 협력체계를 구축함
 - 국비·도비·시비 등 충분한 예산 확보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함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줄어드는 농업인 문제를 4대 농업혁신과제로 해결할 수 있는지의 문제
- 대응 논리
 - 청년 농업인 역량 강화 등 젊은 농업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임
 - 귀농·정착하는 퇴직자 및 장·노년층의 순천 적응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임

서동용 후보자 대표 공약

1. 여순10.19사건 특별법 제정
2.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령 개정
3. 광양보건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
4. 전남 동부 대학병원 설립
5. 산업재해 외상후스트레스 치유센터 설립

1. 여순10.19사건 특별법 제정

현 황

- 국가폭력에 의해 1만 명 이상이 희생된 과거사임에도 72년 동안 진상 규명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순사건은 여수와 순천뿐 아니라 광양, 구례, 곡성, 보성 등 전남 동부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20년 1월 20일, 여순사건 재심 재판관조차도 특별법 제정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구례군의회는 20년 2월 6일, ‘구례군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고, 유족회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 하고 있습니다.

공 약

-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 희생자·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좌우 이념 대립 속에서 일어난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배·보상해야 합니다.
- 추모 및 평화 공원 설립을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다시는 국가폭력에 의한 학살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역사 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천방안

- 저는 여순재심대책위에 참여하고 변호사로서 여순 재심 사건을 직접 대리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을 사회적 의제화하겠습니다.
- 전남 동부 지역 지자체와 국회의원 연합체를 구성하여 사회적 공론화
- 4.3제주, 노근리, 거창 등 다른 양민학살이 발생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연합하여 이슈화
- 피해자, 유가족,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배·보상 대상 및 기준 금액
- 대응 논리 - 광주민주화운동, 4.3항쟁 등 기존 과거사의 기준을 토대로 선정, 책정

2.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령 개정

현 황

- 임대주택 분양전환에서 분양전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판단을 맡겨, 기한 내 분양전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양의 경우 송보7차, 덕진광양의봄 등에서 분양전환 피해자가 발생해 저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직접 소송을 맡는 등 적극 개입해 왔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개선을 위해 직접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찾아가 설득, 촉구하여 제도 개선에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공 약

- 공공임대 주택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서민의 내 집 마련이란 임대주택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임차인에게 기한 내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 법령을 개정하면 현재 발생 중인 분양전환 피해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실천방안

- 피해 조사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피해를 전국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 법령 개정 : 분양전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분양전환 전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근거 없이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에게 법적 제제 조치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임대사업자들의 반발, 지자체 개입의 권한 문제 등
- 대응 논리
 - 임대아파트 본래의 취지 강조, 법적 권한 명시를 통한 문제 해결.

3. 광양보건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

현 황

- 광양보건대는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고령화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대학이지만 설립자의 교비 횡령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 학생, 교직원, 학생, 시민단체,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학교의 정상화를 바라고 있지만 재정 기여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저는 광양보건대정상화시민모임 대표로 활동하며 광양보건대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왔습니다.

공 약

- 광양보건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 추진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고령화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지역 보건대학의 정상화
- 사립대학의 지배구조 개선 및 교육 공공성 강화
- 의료 인력이 부족한 전남 동부에서 양질의 지역 의료 인력 양성
- 광양보건대가 위치한 광양읍 지역경제 활성화

실천방안

- 타당성 평가를 위한 용역 의뢰
- 학생, 교직원, 시민단체, 지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한 시민연합 재조직화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경쟁력에 대한 문제 제기(교육부 대학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 대응 논리
 - 교육부 평가의 핵심은 사학재단의 부정과 비리임. 학생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높은 취업률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음.

4. 전남 동부 대학병원 설립

현 황

- 전남 동부에 대학병원이 없어 시민들이 광주, 진주,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가고 있습니다.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병원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대학병원 설립의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국토균형발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중앙당에서도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필수·공공·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공 약

- 전남 동부에 대학병원 설립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 지방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
- 응급 상황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점 병원 마련.
- 코로나19, 메르스 같은 감염성 질병 대비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 원정 진료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비용 감소
- 귀촌·귀농을 뒷받침할 의료 인프라 개선

실천방안

-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전남 동부 지자체, 국회의원 연합체 구성
- 사회적 의제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대학병원 설립 관련 법 제정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대
- 대응 논리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인력 및 공공의료의 중요성 확대, 지방 시민의 건강권 보장,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

5. 산업재해외상후스트레스 치유센터 설립

현 황

-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사고 발생률 1위이지만 산재트라우마 피해자를 치료할 센터와 인력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 안전보건공단은 세월호 참이 이후 노동자뿐 아니라 전 국민의 트라우마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구근로자건강센터에 직업트라우마센터를 2년동안 시범 운영해왔습니다.
- 20년 3월부터 직업적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가 전국 8개소로 확대 운영되지만 직업트라우마 피해자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공 약

- 산업재해외상후스트레스 치유센터 설립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산업재해외상후스트레스 피해자의 마음 건강 지키기
- 노동자가 겪는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 건강 문제 제기
- 트라우마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일터로 돌아가도록 도움

실천방안

-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부터 산업재해까지 직업적트라우마를 사회적 의제화하기 위한 전국적 조사, 관련 토론회 개최
- 대구근로자건강센터 내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같은 유형의 상담 및 치유 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립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산재트라우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 대응 논리 - 직업상 트라우마를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기준 제시

신정훈 후보자 대표 공약

1. 아동청소년 창의융복합센터 건립
2. 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3. 폐광지역 특별법 연장
4. 에너지 밸리(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1. 아동청소년 창의융복합센터 건립

현 황

- 빛가람 9세 이하 어린이 인구비율 전국보다 2배 높고, 청소년기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 부재
 - * 9세 이하 인구 비율 : 빛가람 18.2%, 전국 8.3% / 10~19세 청소년 : 11.3%

공 약

- 전국 10개 혁신도시중 유일하게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조성한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주한 주민들이 자녀교육, 삶의 질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주거 안정감 향상)할 수 있도록 창의진로체험센터 건립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보육, 창의와 진로교육, 어린이에서 어른까지 함께할 수 있는 가족 친화 복합공간 조성으로 전국 최하위권 정주환경 획기적 개선
 - *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10개 혁신도시 중 9위(주거·여가 9위, 교육 8위)
 - * 혁신도시 주민설문 '시설 선호도' ('20.2.) : 도서관 36%, 청소년 20%, 보육 15%
- 진로체험 : 진로설계부터 이해와 체험을 한곳에서, 한전과 콘진원 등 16개 공공기관과 연계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롤모델
- 복합공간 : 청소년, 어린이, 영유아가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가족을 위한 복합공간

실천방안

- 사업기간 : 2021 ~ 2023년
 - 행정절차설계 : 2021.9. / 착공 2022.2. / 준공 2023.9. / 개관 2023.11.
- 총사업비 : 35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
- 관련계획 : 빛가람혁신도시 발전계획(2018.10. 균형위 확정)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혁신도시내 건립부지 확보 어려움, 균특회계로는 사업비 확보 어려움
- 대응 논리
 - 기재부 비축토지 매입 유도 및 교육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

2. 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현황

- 지난해 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이 93조 4,231억 원을 운영했는데 공공기관이 나주시와 인근 지역에서 구매한 총액이 전체예산의 0.69%에 불과한 6,42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마저도 한전이 혁신산단 입주기업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한 예산이 88%에 달해 실제로 지역에서 사용된 예산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

공약

- 빚가람 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들이 연 예산의 3%(약3조)에 달하는 예산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추진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도시 공약으로 제안했던 내용 중 하나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에서 구입 가능한 물건과 각종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역업체들에게 공급받도록 하고 있음
-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들과 농민들이 혁신도시 성장에 따른 활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실천방안

- 2017년 10월에 ‘혁신도시특별법’ 제292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조항으로 반영되었고 이 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토록 추진
- 아울러 공공기관 구내식당 식재료부터 지역농산물로 바꿔 농민들의 판로 걱정을 덜고 친환경 공공급식의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촉진
- 지역상품권을 카드와 모바일 형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업무추진비와 수당 포상 등을 편리하게 사용토록 하고 공공기관의 경비와 청소, 조경, 구내식당 운영 등의 용역사업도 지역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주민기업 등의 참여 기회 확대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논의 쟁점은 없을 듯 하나, 공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동참 유도가 필요함
- 대응 논리
 -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역업체, 농가가 함께 상생의 기틀 마련

3. 폐광지역 특별법 연장

현황

- 폐특법이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시효가 남아 있다거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연장에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음

공약

- 폐광지역 특별법 연장 추진 및 폐광기금 지역배분 기준 재정비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자본잠식·적자운영 중인 석탄공사의 기능조정 방안은 연차별 감산 시행과 단계적 정원 감축 등으로 화순광업소의 불투명한 미래, 직원 감축으로 인한 안전문제, 지역 경제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이지만 전국 어디의 폐광지역을 봐도 폐특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경제가 진흥된 곳이 없고 여전히 폐광지역의 자립 기반은 부족해 폐특법 연장이 불가피 함

실천방안

- 폐특법 관철을 위해 정치권과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
- 이와 함께 폐광기금의 지역배분 기준을 재정비해 화순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늘리겠음. 폐광기금은 강원랜드가 순이익금 일부를 화순을 포함한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에 지원하는 지역개발 사업비로 화순에는 연간 90억원 안팎이 지원되고 있음
- 또한 폐광지를 산업유산 루트로 조성하고, 북암선 철도를 기차 관광지로 개발하는 한편 탄광 및 에너지 역사관을 건립해 폐광촌을 뉴블루오션지구로 육성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폐특법의 중심인 강원랜드 이외에도 여러 지역이 카지노 허가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 시효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음
- 대응 논리
 - 폐광지역 국회의원 및 시장·군수협의회와 광역대응기반 구축

4. 에너지 밸리(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 강소특구 추진 업무협약(MOU) 체결(도·나주시·한전) : '19. 5.
- 개발계획 수립 및 주민·전문가 공청회 : '19. 9.
-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전남도→과기부) : '19. 9. 30.
- 과기부 전문가위원회 구성·운영 : '19. 11. ~
* 전문가위원회 심의('19.11. ~ '19.12.) / 현장평가('20.2.25.)

공약

- 혁신도시 제2의 도약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한전)의 기술사업화 및 기업유치(에너지밸리 조성)를 통해 혁신도시 제2의 도약 전기 마련을 위한 「에너지 밸리(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밸리를 에너지신산업의 메카로 조성
* 한전이 기술핵심기관 역할, R&D 단지 및 실행기업 유치지구 육성
-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에너지밸리 내 입주기업의 R&D를 촉진 및 기업유치 활성화

실천방안

- 위치/규모 : 전남 나주시 혁신도시 일원 / 1.99km²
- 혁신도시산학연클러스터 0.41, 혁신산단 0.97, 한전공대배후단지 0.61
- 사업내용 : 기술핵심기관 중심 R&D 단지, 전략기업 유치지구 육성
- 사업주체 :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 지정승인 : 과기부장관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
- 대응 논리
- 빛가람 혁신도시와 배후 산업단지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특구 지정 필요
- 대통령 국정과제 및 공약으로 한전 등 공공 이전기관과 연계된 에너지·ICT 잠재투자기업 발굴 및 전략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 세계적인 에너지밸리로 조성 필요

이개호 후보자 대표 공약

- 1.한국정원센터 건립 및 국가기관화
- 2.빛그린산단 배후단지 조성
3. e-모빌리티 테마파크 및 배후단지 조성
- 4.국립심혈관센터 건립 및 기능확대

1. 담양 한국정원센터 건립 및 국가기관화

현 황

- 2020년 한국정원센터 건립 국비 예산 4.5억 확보
-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로 정원문화 대중화 및 정원산업의 규모 확대를 위한 전문기관 필요성

공 약

- 한국정원센터 건립 및 국가기관화 통한 한국형 정원의 저변 확대 및 관련 신산업 육성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한국형 정원의 저변확대 및 관련 신산업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 정원의 통합관리와 연구·개발·교육을 통한 산업화 및 한국전통 정원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전문기관 필요

실천방안

- 추가 국비 예산 확보 및 산림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 통한 국가기관화 추진
 - 부처 및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국비 확보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
 - 산림청 및 기재부와 협의 통해 지방의 부담 없는 온전한 국가 기관화 설득 및 추진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없음

2. 함평 빛그린 산단 배후단지 조성

현황

- 광주형 일자리 사업 진행으로 인해 연 10만대 규모의 완성차 생산라인이 빛그린 산단 내에 구축
-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침체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 유입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단 배후단지 조성 필요

공 약

- 함평 빛그린 산단 배후단지 조성을 통한 인구 유입 및 경제활성화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유입되는 인력들을 위한 주거근린 및 생활시설 필요
- 배후단지 조성으로 빛그린 산단을 공유하고 있는 함평군의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실천방안

- 빛그린 산단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 및 민간 투자 유지 노력
 -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국비 사업 목록 발굴 및 관계 부처 협의 통한 사업 비 확보
 - 함평군과 공동대응을 통해 배후단지 필요시설 대책 마련 및 민간투자 확보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없음

3. e-모빌리티 테마파크 및 배후단지 조성

현 황

- 2018~19년 영광군 E-모빌리티 엑스포 성공적 개최
- 2019년 영광 대마산단 'e-모빌리티 특구' 지정(중기부)

공 약

- 영광 e-모빌리티 테마파크 조성 및 배후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대표 산업 육성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국내 최고의 e-모빌리티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문화, 관광, 서비스 등 융합 필요
- e-모빌리티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국민 생활속에 e-모빌리티가 국민 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 필요성

실천방안

- e-모빌리티 엑스포 국비 예산 지속적 확보 및 테마파크 조성 계획 수립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e-모빌리티 엑스포 사업등 e-모빌리티 관련 신사업 발굴 및 국비 신규 증액
 - 관계부처 및 군과 협의를 통한 테마파크 조성 민간투자 자본 유치 노력 병행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없음

4.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및 기능확대

현 황

- 2020년 ‘국립심혈관센터 구축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국비 2억 확보
-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계류중

공 약

- 국립심혈관센터 장성 건립 및 기능 확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급속한 고령화 등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수행, 연구개발, 임상치료가 가능한 독립적인 국가기관 필요
- 국가 심뇌혈관 질환 사업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기술지원 및 14개 심뇌혈관질환 센터를 총괄할 국가기관 필요

실천방안

- 임상 규모 및 연구기능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 행정절차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기재부등 관계 기관 협의
 - 부처 및 국회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립심혈관 센터 건립을 위한 실사업비 확보 노력
 -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및 국립심혈관센터 근거 법안 통과 노력 지속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없음

김승남 후보자 대표 공약

1. 장흥수문~고흥녹동 연륙교 건설
2.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3. 전남 산업동물 전염병 제어 연구지원 센터
4. 전남 중남해안 관광허브 조성
5.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1. 장흥수문~고흥녹동 연륙교 건설

현 황

- 고흥 녹동에서 장흥까지 거리가 약 100km로 1시간 20분 소요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4개군 정책제안 채택 : 2019.8월 / 중앙당 건의

공 약

- 전남 중남해안권 관광 벨트 조성을 위한 「장흥 수문~ 득량도 ~ 고흥 녹동(국도 77호선) 연륙교」 건설사업
 - 사업량 : 14km (해상교량 10km/2개소)
 - 사업비 : 8,310억원 (국비 10%)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장흥~고흥간 최단거리(14km 이내, 10분대) 교통망 구축으로 운반거리 단축 및 농수산물 물류비용 절감과 득량만권 해안도서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
- 남해안권 거점 지역간 교류확대를 위한 중남해안권 관광 연결성 확보 및 동부권 관광객 유치 기회 마련
- 강진·보성을 포함한 득량만권 내 생활권과 현존 관광자원을 토대로 한 전남 관광 활성화에 큰 전환점이 될 것

실천방안

- 제5차 국도·국지도 기본계획 노선변경 건의
- 연륙교 건설 국도 노선 조정 건의
- 국도 77호선 승격 건의

예상 쟁점 및 대응

- 교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 77호선 기본계획 노선변경 및 지역 간 간선도로망 확충 필요
 - 장흥~보성~고흥을 연결하는 국도77호선은 국도 2호선과 국도 15호선이 중복되어 있어서, 국도 77호선을 장흥수문과 고흥녹동간 연륙교로 선형을 변경해도 국도유지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음

2.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 현 황

- 2015년 한중FTA 발효를 계기로 농업계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으로 논의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연간 1000억원, 10년간 1조원 기금 조성)으로 대체 하였으나 강제성이 없는 제도로 실효성 부재

☉ 공 약

-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 수혜산업과 피해산업간의 이익 조정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 필요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수출산업의 잉여가 농업, 농촌에 재투자되는 효과 및 기여도 매우 낮음
- FTA 수혜기업 자발성에 의존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실효성 한계

☉ 실천방안

- 「무역이득공유제법」 법안마련 연구용역 실시
 - 타산업의 무역이득을 농업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 기여도에 따라 재분배하는 이익조정 개념을 확립
 -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법안 공론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예상 쟁점 및 대응

- FTA 수혜기업의 수혜이익 계산의 어려움
 - 헌법 제119조 2항 :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적절한 소득의 배분을 유지하고,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수혜이익과 피해 산출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 축적

3. 전남 산업동물 전염병 제어 연구지원 센터

현 황

- 산업동물 전염병 창궐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반복적으로 발생
 - 국내 축산 총생산액 15조8천억원 중 고질적 전염병에 의해 매년 3조1천6백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2011)
 - 2010년 발생한 구제역은 348만두의 소와 돼지를 매몰하는 등 2.8조원의 직접적인 피해와 10조원에 이르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
- 전남은 타 시도에 비해 축산업의 비중이 높아, 재난성 전염병뿐만 아니라 고질적 전염병도 창궐하여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

공 약

- 전남 축산농가의 산업동물 전염병 박멸을 통한 축산업 및 생물산업 활성화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산업동물 전염병 제어용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통한 전남 생물산업 고도화
- 전남 산업동물 전염병 제어 연구지원 센터 구축으로 전남지역 산업동물 전염병의 효과적인 억제를 통한 전남 축산농가 소득향상

실천방안

- 산업동물 전염병 대응 R&D 강화 및 산학연간 협력체계 확립
 - 지역소재 대학, 전남축산연구소,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등 협력체계 추진
 -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 및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 효과 도출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비타당성 조사 필요
 - 산업동물 전염병 제어 연구지원센터 구축 1,150억원
 - 전염병 저항성 산업동물 품종개량 및 산업화 150억원 등

4. 전남 중남해안 관광허브 조성

현 황

- 관광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 저 성장시대의 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서비스 산업
- 소외된 지역인 전남중부남해안(고흥,보성,장흥,강진)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관광 산업을 통해 모색

공 약

- 천혜의 자연경관과 생태·문화자원 등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지닌 중남해안을 특화 개발하여 한국대표 관광명소화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여수 화양~고흥간 7개의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동부권 관광객의 중남해안 관광 유도
- 강진만·득량만권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개발하여 중남해안권의 체류형 휴양·체험관광 거점으로 육성

실천방안

- 대기업 민자유치 (고급숙박 및 주거시설, 골프코스, 소규모 마리나항, 해양스포츠시설 등 집중 배치)
- 해안선을 따라 거점별 육성 (고흥 남열지구·고흥만지구, 보성 울포지구, 장흥 관산 우산도, 강진 마량미항)

예상 쟁점 및 대응

- SPC 설립 및 민자 유치
 - 지자체 참여 유도
 - 대기업 투자유치 활동

5.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현황

- (가칭)지방소멸대응지역활력특별법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7)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완화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법안 마련 연구용역 발주(전남도.경북도 공동)
 - (수행기관) 지방행정연구원/(수행기간) 2020. 2.~7월/(소요예산) 100백만원

공약

-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방의 활력증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을 담은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정부의 저출산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인구 유출 및 감소세는 커지고 있어 농촌지역은 인구 소멸 우려 심화
- 인구 문제에 대응한 국가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 활력 증진 도모로 인구문제 극복 기반 마련

실천방안

-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법안마련 연구용역 실시('20년 본예산 반영)
 - 국가 인구정책 아젠다 설정과 정책방향 및 실효적 지역활력증진 법안 제시
 -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법안 공론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예상 쟁점 및 대응

- 지방지원 특별법 제정 당위성
- 지방의 인구 지속 감소 및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역 간 불균형 심화
- 지방은 고령화.공동화로 소멸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부재

윤재갑 후보자 대표 공약

1. 어린이 특별 지구
2.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르신 헬스케어 시스템
3. 대한민국 호국길
4. 외국인 노동자 특구
5. 해남완도진도 지역 철도 사업

1. 인구 소멸 지역 어린이 특별 지구 제정법

현 황

- 해남완도진도의 인구 소멸 위험
- 지역에 어린이를 위한 직접적인 복지 및 인구 소멸 방안 부족

공 약

- 해남완도진도의 인구 소멸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한 「인구소멸지역 어린이 복지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정부의 저출산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인구 유출 및 감소 세는 커지고 있어 농촌 지역의 인구 소멸에 따른 어린이 복지 쇠퇴 우려 심화
- 인구 문제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 지방의 활력 증진 도모로 인구 문제 극복 기반 마련

실천방안

- 「인구소멸지역 어린이 특별 지구 제정법」 법안마련 연구용역 실시('20년 본예산 반영)
 - 국가 인구정책 아젠다 설정과 정책방향 및 실효적 지역활력증진 법안 제시
 -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법안 공론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기존 규정과 구분되는) 지방의 어린이 복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당위성
- 대응 논리
 - 지방의 인구 지속 감소 및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역 간 어린이 복지 불균형 심화
 - 지방은 고령화, 인구절벽 심화로 소멸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부재
 -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한 인구소멸지역 지정 기준 및 지역발전정책방안의 합리적 도출

2.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르신 헬스케어 시스템

현 황

- 어르신 인구의 증가와 어르신 돌보미 인력 감소로 인한 지역 정책 강화
- 수도권 ICT 기술을 이용한 어르신 돌보미 시스템 벤치마킹

공 약

-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에 따른 지방 노동 인력 부족과 지방의 어르신 케어 대안을 위한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법」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전체 인구 대비 어르신 인구 비율 증가는 어르신 돌봄 인력의 부족에 따른 어르신 돌봄 복지 쇠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짐에 대한 우려 심화
- 고령화 인구 비율 변화에서 나타나는 어르신 돌봄의 현실적인 대안과 극복 기반 마련

실천방안

-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법」 법안마련 연구 용역 실시('20년 본예산 반영)
 - ICT를 활용한 어르신 복지 아젠다 설정과 정책방향 및 실효적 지역적용 법안 제시
 - 공청회 및 법안 공론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기존 규정과 구분되는) 어르신 복지 시스템에 대한 법률 제정의 당위성
- 대응 논리
 - 지방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비율의 감소
 - 고령 인구 비율 증가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어르신 케어 방안 제시
 -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한 어르신 돌봄 시스템의 타당성 및 지역발전정책방안의 합리적 도출

3. 대한민국 호국길

현 황

- 해남완도진도의 호국 관련 프로그램 부재

공 약

- 대한민국 호국과 항쟁의 산 역사이자 호남정신의 기원인 해남완도진도의 역사 보존과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예산 확보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해남완도진도는 여타 지자체에 비해 호국과 관련된 많은 유적지 존재.
- 해남완도진도 호국 유적지들이 흩어져 있어서 하나로 묶을 계기가 필요.
- 역사적으로 해남완도진도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 정신을 교육하기 적합하고 지역의 새로운 관광 테마 사업 기대.

실천방안

- 해남완도진도의 항쟁과 관련된 역사 유적지를 발굴한다. 예) 서산대사 관련 유적지, 장보고 유적지, 삼별초 유적지, 진린 장군 유적지, 침미다례 유적지(송지화산현산삼산), 27개 토성(고대토성 12개), 만의총, 자강양한묵 선생 생가, 김남주 시인 생가, 518 유적지, 의병 유적지, 호남최대 3.1운동, 신지도고금도, 동학농민운동 최후 격전지 등「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법안마련 연구용역 실시('20년 본예산 반영)
- 항쟁 관련 유적지의 루트를 파악해서 육로와 해로를 이용한 대한민국 호국길을 만든다
- 고대-고려 테마, 조선-현대 테마, 임진왜란 테마 등으로 엮어 2박 3일 혹은 3박 4일 일정의 스토리텔링 호국길 조성.
-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 호국 교육을 위한 초중등 과정 역사 체험 사업으로 선정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 테마로 육성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관광지 육성에 대한 예산 편성의 당위성

○ 대응 논리

- 전남 서남부의 경쟁력 있는 관광 인프라 및 관광 자원방치
- 교육과 연계된 다양한 테마 이용이 용이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

4. 외국인 노동자 특구 지정 특별법 제정

현 황

- 외국인노동자 200만 시대
- 해남완도진도에 농수축산 관련 외국인 노동자 증가.

공 약

- 「외국인 노동자 특구」 지정을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외국인 노동자 특구는 해남완도진도를 비롯한 전남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
- 해남완도진도를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의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비로 상권이 유지되고 있음에 상권 형성문제가 대두
- 지방의 노동력 수급, 외국인 인권 문제 해결.
-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 수령과 고용인을 위한 노동자 관리
-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한 지역 경제 및 상권 회복

실천방안

- 「외국인 노동자 특구」 법안마련 및 연구용역 실시('20년 본예산 반영)
 - 해외 자매결연 도시를 통해 신분이 명확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기본 노동력 수급 방법으로 한다. 일자리 기간은 1년마다 갱신
 - 브로커의 임금 착취를 막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관리 감독
 -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법안 공론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외국인 노동자 특구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
- 대응 논리
 - 지방의 노동 인력 부족으로 인한 농수축산 인력 수급의 어려움
 -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분 보장의 미흡으로 인한 인권 및 임금 착취 심화
 -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한 지방 경제 활성화와 인력 공급을 안정된 공급처 필요

5. 농수축산 유통 및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역 철도 사업

현 황

- 전남서남권에 농수축산 유통에 관한 인프라 미흡

공 약

- 해남완도진도 및 인근 지역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관광 서비스 자원 연결을 위한 SOC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현실적으로 남해안 철도의 해남완도진도 지역 이용 효율이 낮음. 철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지역 상황에 맞는 SOC 사업이 추가 요구
- 철도 루트: 해남-완도항 루트, 해남-진도항 루트

실천방안

- 해남역과 주변: 해남역 농수산물 유통 기지 설치 전남 서남부권 유통 연구소, 농수산물 중국 육로 진출의 중심역
- 완도역+완도항: 농수산물 일본 수출입 전담 국제항구
- 진도역+진도항: 농수산물 중국 수출입 전담 국제항구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지역 열차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편성의 당위성
- 대응 논리
 - 해남완도진도 및 주변지역의 농수축산물 유통의 다각화 방안
 - 국제항구 승격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유입 및 지역 농수축산품 판매 다각화
 - 열차를 이용한 국내 관광객 및 중국인 관광객 유치
 -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한 지역 유통 다각화 방법 지정 기준 및 지역발전정책방안의 합리적 논의

서삼석 후보자 대표 공약

1. 나쁜법 계속 고치고, 좋은 법 더 만들겠습니다
2. 농어민 소득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 농어촌 '보건 안전망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4. 도서지역 주민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5. 여성농어업인의 지원책마련 최우선 합니다.

1. 나쁜법 계속 고치고, 좋은 법 더 만들겠습니다.

현 황

-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제역, AI, ASF의 위협과 최근의 코로나19 국면까지 人獸전염병의 위협이 증대
-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소멸위기로 대두

공 약

- “방역부”와 “노인부”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 농어촌 고령화 및 인구감소 대응 “농어촌 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 人獸전염병 통합 상시방역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독립성, 신속성, 전문성을 갖춘 “방역부”를 신설함으로써 전염병에 대한 대응력 대폭 강화
- 농어촌 고령화등 노인층의 보건복지여건 개선을 위한 전담부처인 “노인부” 신설을 통해 정부차원의 통합관리 대응체계 구축
- “농어촌 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농어촌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론에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

실천방안

-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한 국회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 제·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방역부”와 “노인부”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 △농어촌 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지역조합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모델 구축의 시스템화 △국가 예산 배정시 지역격차 해소 기여도 평가시스템 구축 △인구 감소 농어촌 지역에 대한 국가의 시책마련 및 지원방안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어촌 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기존 부처와의 업무중복(방역부: 농식품부 및 보건복지부, 노인부: 보건복지부) 및 중복지원 문제

○ 대응 논리

- 되풀이되는 가축전염병 및 최근의 코로나19 등 人獸전염병의 심각성 제기
- 농어촌 인구감소 및 소멸위기에 대응한 고령인구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체계 구축 및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등 법제화의 시급성 제기

2. 농어민 소득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 황

- 되풀이 되는 농산물가격 폭락과 수급불안, 수십년째 제자리걸음인 농어업소득, 도농간의 소득격차 문제 지속

공 약

-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천일염가격보장제도 확립
- 어업인 기본소득보장을 위한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및 활성화
- 임업인 기본소득보장을 위한 ‘공익형 임업직불제’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한국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어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시급
- 농산물과 천일염 생산비에 대한 정부의 가격보장대책을 통해 농어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반을 마련
- 올해 농민들의 소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첫 시행 예정인 농업분야 공익형직불제와의 균형을 맞추어 ‘공익형 수산직불제’ 및 ‘공익형 임업직불제’ 도입 필요성 증대

실천방안

-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한 국회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 법률 제·개정안 대표발의
 -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및 천일염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공익형 수산직불제 및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법률제정안 대표발의
-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등)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농산물과 천일염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의 경우 생산비 보장으로 인한 재배면적 증가로 농산물가격폭락 악순환 우려 제기 가능성
- 최근 농업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수산과 임업분야 직불제 도입의 여건도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 다만 정부재정여건을 고려한 시기 조정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 대응 논리

- 지역별 특화농산물에 대한 생산비 보장대책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재배면적 증가문제 해소
-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본소득 보장 필요성 지속 제기

3. 농어촌 ‘보건 안전망 확충’ 에 노력하겠습니다.

현 황

- 인구와 자본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농간의 의료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2018년 기준 138개 농어촌 시·군 중 47%인 66개 시군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조차 없는 현실.

공 약

- 농식품부, 해수부 내 농어업인 의료 보건 안전 전담부서 설치
- 농어업인 건강돌봄사업(보건복지연계)확대 추진
- 공공의료인력확충과 공공의료시설 보강
〈공공보건의료대학, 국립의과대학〉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건강센터, 환경부의 환경보건센터, 소방청 및 경찰청의 특수건강검진 제도처럼 농식품부 해수부의 농어업인에 특화된 보건 의료 제도 및 전담 부서 신설 필요성 제기
- 보건복지부는 2019년 6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지역사회 독립 생활을 지원하는 주거·보건의료·요양 등이 결합된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1년 추진성과와 사례들을 체계화하여 농산어촌 맞춤형 건강돌봄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면 농어촌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전남은 타지역에 비해 도서 등 의료취약지역이 많고 의료인력은 부족한 반면 17개·시도 중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 의료인력 및 전문의료기관 신설의 시급성이 제기

실천방안

- 농식품부, 해수부 내 전담부서 신설 및 농어촌 국립의과대학 등 공공의료시설 보강을 위한 관계 부처(농식품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와 지자체 협의
- 농어촌 보건의료 여건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최
- 농어업인 건강돌봄사업 모델 발굴 및 법제화 추진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내 의료 보건 안전 전담부서 신설 관련 타부처(보건복지부)와의 업무중복, 의료기관 신설의 경제성 문제

○ 대응 논리

- 농어촌 의료여건의 열악성과 농어촌특화형 의료보건안전대책 도입 필요성 제기

4. 도서지역 주민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 황

- 교통 이동권 미확보 및 열악한 의료여건 등으로 인한 열악한 삶의 질 문제 제기

공 약

- 도서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공영제 강화
 - △1000원 여객선 도입 △연안여객선 신조 및 현대화 △도서지역 해상물류비 지원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지원
- 도서지역 물 부족문제 해소
- 해양쓰레기 경감대책 마련
- 도서지역 의료여건 개선
 - △병원선 확충 △응급의료 대응헬기 착륙장 설치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교통 이동권 및 물 부족 문제, 해양쓰레기 문제, 의료여건 개선 대책 시급

실천방안

-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한 국회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및 국비예산 확보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정부의 재정을 고려한 시기 조정 필요성
- 대응 논리
 -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한 도서지역 교통 이동권, 물 부족, 의료여건 등 삶의 질 개선의 시급성 제기

5. 여성농어업인의 지원책마련 최우선 합니다.

현 황

- 2018년 기준 농가인구 231만 5천명 중 여성 농가인구 수는 118만 5천 명으로 51.2%의 비중을 차지하여 남성의 숫자를 넘어서 비중 증대

공 약

- 여성농어업인 특화건강검진 도입
-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 여성농어업인 보험상품개발, 지원센터 운영
- 여성농업인 맞춤형 농기계 개발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여성농업인 비중 증대로 맞춤형 지원대책의 필요성이 제기
- 보육과 농사일의 이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어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 및 보육여건 개선, 보험상품 개발 등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실천방안

-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한 국회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 관계부처(농식품부, 보건복지부) 협의 및 관련 국비예산 확보

예상 쟁점 및 대응

- 예상 쟁점
 - 여성농어업인만의 특화형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 및 남성과의 역차별
- 대응 논리
 - 남성의 비중을 초월하여 여성이 농어촌의 중심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현실과 여성농어업인의 보육과 농어업의 이중고를 감안하여 맞춤형 대책의 시급성 제기